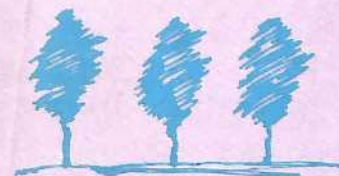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R1.1.4

인권하루소식

합본 IV 호
(제301~400호)



1995. 7

민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1996년 4월 10일

인권정보자료실
R1.1.4

민권운동사랑방



- 감옥창살마저 막아버린 영등포교도소, 민가협 법무부 항의방문
- 2면 ·어머니 상습폭력 보다 못한 살인, 여성의 전화 전경진씨 구명운동 펼치기로
- 5·3 동의대 사건 잊으셨습니까? 고난모임, 진상규명 구속자 석방요구

제396호(95.5.4, 목) / 239

- 1면 ·노동운동 전면적인 탄압에 공동대처, 경기남부지역 80여 노조·노동단체 제3차 개입선언
- 5·3동의대 사건 집회 열려
- 어린이성폭력예방비디오 홍보, 한국성폭력상담소
-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19일 강연, 정대협·대한변협
- 2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①> 어린이날에 생각하는 아이들의 권리

제397호(95.5.6, 토) / 241

- 1면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4천만원 지급하라”
- 또 하나의 부끄러운 방송사, 대구가스폭발사고 보도
- 2면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마당 행사
- 「아동권리연대회의」 어린이 권리 홍보물 배포
- 여연, 봉천동 철거 성폭력책임자 처벌 요구 성명
- <독자기고> 티벳의 노승려·세계화·인권 (혜진스님)

제398호(95.5.9, 화) / 243

- 1면 ·광주학살 책임자 '기소촉구'운동 펼쳐, 광주민중항쟁 15주년 앞두고 진상규명요구
- '이랜드 신화'에 가려진 노조탄압, 이랜드그룹 부당해고 노동자 항의농성 43일째
- 2면 ·노태훈씨 성공회대학 '인권과 국제인권단체' 강의
- <인터뷰> 유엔 아프카니스탄 특별보고관 백충현교수
- 특별보고관이란?
- 주간인권흐름(95년 5월1일-7일)

제399호(95.5.10, 수) / 245

- 1면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후사인씨 방한 국보법등 조사활동 계획
- 회사측의 손해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해소송 공대위
- 두밀리분교 폐교철회선고 또 연기
- 인권어록
- 2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②> 어린이의 생명·생존·발전권
- <해설> 유엔인권위 활동의 꽃- 특별보고관

제400호(95.5.11, 목) / 247

- 1면 ·철거폭력 회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봉천동 성폭력 적준개발, 16개 지역에서 철거 맡아
- 2면 ·<국제인권소식> 태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행사 열려
- 국제인권단체,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반군에 협상촉구
- 김무용씨 제조사 촉구 프랑스, ARTICLE 19
- 일본 외국인 119 네트워크, 외국인 노동자에게 인도적인 대우 요청
- 대검 수배자 검거령 비난, 민주노총 준비위
- 피터슨목사 증언 예정, 전국연합 집회에서

인권하루소식

94년 12월

(제301호 - 제316호)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인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를 위한 운동」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조홍식 서울대학교수)는 5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및 관련 공익소송 설명회'를 갖고 국민생활최저선보장은 국가책임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제기했다. 조홍식 교수는 "우리 사회는 선진국이 50년대 설정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조차 보장하지 못하다"며 헌법에 명시된 '행복권'(10조)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는 죽은 조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가입한 ILO조약과 유엔 인권 사회권 규약을 통해 사회보장이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국민생활최저선은 단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의 수준, 주거공간의 수준, 여가 수준, 편의시설 수준 등 인간생활의 총체적 영역이 포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역시 빈곤대상을 넘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보험 수익을 저하 매년 2백 75억원 이자손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5일 양영철(서울 관악구 신림동)씨는 서상목(보사부장

관)·윤성태(의료보험연합회장)씨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오의균(마포구 상수동)씨등 3명은 국가를 상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했다. 또한 김규태(농민, 경기 김포군)씨는 김포군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에 따른 초과부분 취소심사청구서를 접수시켰다. 보건사회부장관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양씨는 소장에서 '의료보험적립금 중 의료기관지원자금 조성, 관리규정'을 만들어 50%이상을 웃도는 의료발전기금을 전용하였고, 의료보험수익률을 저하하게 하여 매년 2백75억원의 이자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적립금이 3조4천억원이 적립되었음에도 의료보험급여 제한기간 180일 철폐, 임산부 산전진찰 의무화, CT·MRI 보험적용, 본인부담금 인하등 국민의 요구는 간파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93년 현재 3천1백48억원 기금손실 오씨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국민연금기금의 비민주적 운용에 대한 문제제기다. 국민연금이 93년말 현재 약5백만명이 가입되어 있고 약7조6천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나 이중 45%의 공공자

금을 의무예탁함으로써 93년 현재 3천1백48억원의 기금이 손실되었고 94년 이후 전액이 공공자금으로 흡수된다면 2천년에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은 원리금 16조, 이자 3조 5천억원으로 짐작되는데 정부의 원리금 상환불능과 연금제정의 파탄이 문제로 나서게 된다. 문진영(연세대) 교수는 "이는 보험급여에는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씨의 심사청구서는 농어민 의료보험 보험료 부담의 비형평성을 들고 있다. 농어민과 도시자영업자등 지역의료보험 대상자가 소득에 비해 너

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누적되어 온 문제인 것이다.

참여연대 96년까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펼쳐 참여연대는 96년까지 장기적으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12월중으로 △국민연금 인하 위법소송 △노인복지법 에 의한 노령수당 확대청 구소송△공공 보육시설 확대 요구 소송 △장애인 의무교육확대 요구 소송 등 국민생활최저선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추가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국민생활최저선 관련 민간보고서 작성 및 UN제소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국민생활 최저선 설정을 위한 연구 및 공청회, 관련 법안의 개정 및 대체입법 추진, 사회복지예산 증액운동, 국민생활최저선에·결산 및 법안에 대한 의정감시, 국민캠페인등을 준비하고 있다.

□공판안내□

- 12월6일(화)
 - 이영기의 1인, 국보법위반, 2시, 311호, 합의22부, 5회
 - 박래균(구국전위), 10시, 318호, 합의25부, 5회
 - 최안기·이정아·최창우, 국보법위반, 318호, 합의25부
 - 최중민, 국보법등, 424호, 10시, 9단독, 선고
- 12월7일(수)
 - 최도영, 국보법위반, 10시, 311호, 합의21부, 2회
 - 신지애, 국보법등, 10시, 317호, 3단독, 선고
 - 최일봉, 국보법위반, 10시, 421호, 8단독, 신진
 - 박화국(구국전위), 2시, 425호, 합의22부, 5회
 - 박신후(10시)·정승희·권오창·오형관(이하 2시), 425호, 국보법위반, 합의22부
- 12월9일(금)
 - 이창복, 국보법등, 10시, 317호, 1단독, 선고
 - 김영옥, 국보법위반, 421호, 10시, 8단독, 선고
- 12월10일(토)
 - 고영국(생), 2시, 424호, 10단독

한국에 동티모르 지원그룹이 만들어지길 희망

동티모르 로케 로드리게스 6일 출국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고영구, 인권협)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로케 로드리게스는 3일 인권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에 모인 참석자들은 동티모르를 지원하는 개인들의 모임을 만들어 동티모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하기로 했다.

4일에는 현대교회와 장위동성당을 방문하여 동티모르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크리스찬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호소했다. 또한 그는 5일 민주주 조승순 의원을 만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고영구(회장), 이석태(사무국장) 변호사들과 만나 환담을 나누었다. 그는 6일 출국하여 일본을 경유, 리스본에 도착할 예정이다. 출국을 하루 앞둔 로드리게스를 만나 이번 방한의 성과를 들어보았다.

이번 방한의 목적과 배려는? 그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남한 민중운동이 독재권력을 무너뜨린 성과의 덕택이다. 민주화 그리고 인권신장의 확대와 함께 외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진정한 세계화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동티모르에서 모든 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인권문제는 자결권이다.

이번 한국방문을 평가한다면?

성공적이었다. 동티모르의 해방과 자나나 구스마오의 석방을 널리 알렸다고 생각한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중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성취할 수 있었던 과정을

인도네시아의 민중과 나누는 경험을 했으면 한다. 동티모르에 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한국에서 지원그룹이 만들어지면 일본에 있는 지원그룹과 연대하여 실천적 행동을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 가능하다면 조세라모스를 초청하고 한국의 국회나 법률가 단체에서 동티모르를 후원하는 지원그룹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언론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동티모르의 인권과 자결권 문제가 많이 알려지기를 희망한다.

동티모르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의 연대활동에 대한 판단은?

일본, 한국정부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우호적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 동티모르에 대한 연대를 보다 폭넓게 전개할 것이다. 현재 동티모르를 위한 국제의원단, 동티모르를 위한 국제법률가협회등이 주요 민간단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년에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서울이나 대구뿐만 아니라 광주, 부산 등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동티모르 문제에 대해 널리 알리고 한국 국민과 많은 의견을 나누고 싶다.

「인권과 평화」 강좌 개설

성공회대학교, 95년부터 성공회대학교는 95학년도 강좌로 「인권과 평화」를 신설했다. 인권과 평화를 가르치기 위해 국내최초로 개설되는 교양필수 과목 「인권과 평화」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B규약) △사회 경제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A규약) △ 아동의 권리조약, 여성, 환경 등에 대한 국제협약등 국제화시대 인권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탈냉전시대의 적극적인 가치로서의 평화를 가르치게 된다.

성공회대학교측은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기본 규범을 교육하고, 탈냉전의 시대에 평화의 사상과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개설했다"면서 특히 국내에서 인권개념을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나 강제연행 당하지 않을 권리 정도의 소극적 권리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인권은 전세계 시민에게 적용되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반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차 인간사회개발포럼 열려 「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은 95년 사회개발 정상회의에 맞추어 한국의 사회경제 개발을 재검토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의 방향,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과제, 이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등을 논의하였다. 광창규(경실련)씨는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개발 계획배경과 논의과정', 김대환(참여연대)씨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한국사회개발모델의 비판적 검토', 이시재(환경연)씨는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의 방향', 정갑영(연세대)씨는 '사회발전을 위한 국제경제질서의 개편방향', 유재현(경실련)씨는 '한국민간단체의 관점에서 본 국제화, 세계화'를 발표하였다.

□행사안내□

□과로사 상담센터 1주년 기념 세미나 및 기념식

- 일시: 12월 7일 오후 4-8시
-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강당
- 내용: 재해보상의 이론과 각국의 입법례/과로사의 업무상 재해/과로사와 기업의 손해배상책임/과로사와 의학/노동의 여러 요인과 건강장애조사 결과 발표
- 주최: 노동과 건강연구회 부성 과로사 상담센터(☎ 861-3111, 868-3111)

□인권위 20주년 기념식 및 인권상 시상식

- 일시: 12월 8일 오후 2-5시
- 장소: 종로5가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강당
-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764-0203, 744-3717)

□세계인권선언기념 강연회

- 일시: 12월 9일 오후 2시-4시 40분
-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 내용: 국제인권법의 국내실천검토-국제인권법의 실천방향/주요인권조약의 국내적 실천
- 주최: 대한변호사협회(☎ 522-3761~6)

□'희년을 기다리는 사람들'

- 고난받는 이웃을 기억하는 고난중창단 제6회 창작공연
- 일시: 12월 8일
- 장소: 정동제일교회 아펜젤러홀
- 입장료: 6천원(천달력 포함)/1만원(천달력/노래테잎, 악보 포함)
- 주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393-4662)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6'양심수가 없는 나라'

- 일시: 12월 10일 오후 5시
- 장소: 한양대 올림픽체육관
- 주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763-2606)
- 입장료: 예매 7천원, 현매 8천원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노동자대회 참석 이유로 취업연수생 자격 박탈 세계화에 역행하는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

최근 세계화, 국제화의 기치를 내세우며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서 외국인취업연수생이 자신의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내세우는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취업연수생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외국인 취업연수생 자격으로 지난 6월 9일 한국에 최초로 입국한 네팔인 록다지움(26), 인힐각하(21), 노드리바다(22), 자이스보우텔(28)씨는 최근 11월 13일에 있었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다니던 동신탁자(주)와 비전가구(주)에서 쫓겨났다. 취업연수생인 네팔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간 부로우커 동양인력개발회사(주, 정영수 사장)는 "이들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임금을 주지 않았고 해고시켜서 강제출국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은 6월 9일 입국한 이후 6개월 동안 한번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재오 전도사('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소장)는 "정부는 취업연수생제도를 안착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취업연수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체류중인 불법 취업 외국인 노동자를 2만명 이상을 잡아 강제로 출국시킬 것으로 보인다. 경찰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잡으면 1명을 잡는데 1만원의 상금과 송진 가산 점수를 받는다고 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비싼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를 압박하고 취업연수생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외국인취업연수생 제도는 1년을 계약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연수생 자격으로 일을 하지만 중간 부로우커인 인력개발회사가 취업연수생을 감시, 감금노동을 시키는가 하면 임금도 국내 노동자의 15%뿐이다. 또한 인력관리 회사가 그 임금의 20%를 보증금으로 보관하고 매월 11달러를 인력관리비로 공제하며 연수생에게 직접 임금을 주

지 않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낳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최근 노동자의 이동이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발전에 따른 부국과 빈국의 사이에 경제개발의 윤리를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최근 정부가 부르짚는 세계화가 인권적 수치에서 얼마인가를 가능할 수 있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개정되거나 법적용 신중해야 한다- 83.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 박상중, 기사연)이 조사한 '한국기독교인 통일외교포럼'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해 45.8%(516명)가 '독소조항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철폐에 대한 사람은 15.5%, 법적용 신중 21.8%로 대답해 응답자 1천1백48명 중 83.1%인 9백54명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대로 지속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9.7%로 기록되었다.

지난 신공안정국 당시 주사파 파동을 몰고온 박홍총장의 발언에 대해 가톨릭의 경우 45%가 부정적, 34.8%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개신교의 경우 41.8%가 용기있는 발언이라고 보았으며 38.1%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김주석사망 당시 논란이 되었던 조문단 파견문제에 대해 '조문단과 조의 표명'이 모두 필요하다고 14%가 의사를 표시하였고, '조의 표명'만은 38.8%가 응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47.4%가 모두 불필요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면에 계속 --->)

□공판안내□

- 12월8일(목)
- 문국진씨 국가손배소송, 10시, 민사559호, 제6차

◆행사안내◆

-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 및 북경여성대회 준비회의
- 일시: 12월 7일 오후 1:30-6:00
- 장소: 대한간호협회 대강당(279-3618)
- 내용: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북경여성대회 준비회의
- 주최: NGO한국위원회

□ NCC 인권위 김용현씨 부임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에 실무간사로 김용현(31·안산 나들터교회 전도사)씨가 김철화(22)씨가 1일부터 새로이 일하고 있다. 인권위에서 일해온 황필규목사는 언론위원회와 홍보실로 자리를 옮겼다.

<인권하루소식>이 숨이 찰니다
클직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 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찰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구독료는 1만원~3만원 사이입니다.)
재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원고 신고수축 중인
증언과정 진술 반복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항소심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항소심 재판이 6일 오후5시부터 3시간동안 서울민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박상용 부장판사, 주심 박종훈 판사) 심리로 열렸다. 증인 심문으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원고측 증인으로 한아무개씨(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진상조사위 소속)와 피고인 신고수축 중인 강준진(전주대 화학과 교수)씨가 출석했다. 증인과정에서 강씨는 "사건 발생 당시 우조교를 불러 3번이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물었으나 우조교가 부인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장이 "성희롱이란 말을 언제 처음 들었다"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 성희롱이란 말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등 앞서 진술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고측은 증인으로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장)씨와 신고수축을 신청했으나 최영애씨만이 채택되었다. 다음 재판은 95년 1월 10일 오후3시 30분.

(1면에서 계속)

기사연의 이번 의식조사 작업은 창립15주년을 맞아 기념연구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 작업에는 개신교의 주요 교단인 13개 교단과 가톨릭을 포함한 전국(제주도 제외) 기독교인을 조사대상으로 전국 기독교인 1천1백48명이 참여했다. 조사방법은 1백20여명의 면접조사원이 전국의 각 교회를 직접 방문해 성직자와 세대별 비율에 맞게 조사대상을 무작위로 표집하여 설문지 면접조사방법으로 진행했다. 설문은 '북한사회의 이해' '분단현실과 통일정책' '통일전국의 청사진' 등 5가지 주제로 되어 있다.

● 국제 인권 소식 ●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개발과정에 있어 여성의 동등함과 존엄성을 전제하는 것이 올바른 개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여성주의적 시각의 개발인식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1-2일 개발과정에서 침해된 여성의 인권현실을 다룬 '아시아 여성 법정(Asian Women's Tribunal)'이 타이 출라롱콘(Chulalongkorn) 법과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여성과 법, 개발에 관한 아태지역 포럼(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주최로 열린 이번 법정에는 약 100여명의 인권·여성 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6가지의 여성인권침해 사례가 각 1시간 가량에 걸쳐 피해자 당사자의 직접 증언과 6명의 판사와 전체 참가자들의 결의로 진행되었으며, 증언을 뒷받침하는 슬라이드와 사진들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대표적 사례로 필리핀 선(원)주민 여성, 인도네시아 여성노동자, 타이 매춘 여성, 인도네시아 여성 이민노동자, 방글라데시 여성 새우(shrimp)양식장등이 채택되어 증인으로 나왔으며 이들 피해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인신매매를 당하여 일본 매춘여성이 된 타이 여성의 경우, 자신의 사생활과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언론에 편파적으로 노출시킨 일본 언론인에 대한 고발을 아울러 증언하여, 언론 매카니즘에 대한 참가자 모두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다.

다음 날 있는 판결에서

판사 클레어런스 디아스(Clarance Dias)는 "이번 법정 증언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모델의 단지 실체에 불과한 것들이 아니다. 처음 개발에 대한 비판은 마치 경제가 인간생활의 모든 것인 양 경제적 성장과 물질주의적 목표에 과도한 강조점을 둔 것 있었다. 그러나 이제 개발은 '더 많이 갖는 것(having more)'이 아니라 '더 많이 존재하는 것(being more)'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평등과 존엄성의 고려가 개발에 있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판결문에서 "개발에 대한 여성시각적 비판은 단지 개발로부터 세계 인구의 절반을 제외한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상 훨씬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개발에 대한 접근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소외, 착취, 노예화등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개발은 실제로 가부장제에 기초한 잘못된 개발이다. 이러한 개발패러다임에서 인권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강간과 모든 형태의 폭력은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범죄이다"라며 개발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을 설명하였다. "아시아에서 여성의 배제는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다. 성적 평등함은 현실 문제라기 보다 수사학적인 미사여구로 다루어왔다. 인권으로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주장은 지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국제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다면, 현재 개발과 관련된 인식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문에서 "여성은 세계시장에서 매매되는 일용품으로 남아있다. 다국적기업에 의해 세계시장에서 여성의 노동은 착취당하고 있으며, 세계화·지구화는 개발과정에 있어 여성에 대한 억압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 앞에서 증언한 개발 비판과 개발현실은 모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발의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배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성적인 평등함이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법정은 증언한 사람들이 정의를 얻으려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정책과 법의 개혁을 위한 특별한 의제가 추구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주장을 제기했다. 그 의제들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의 잘못을 충분히 책임질 것 △세계화의 해로운 효과에 대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을 발전시킬 것 △여성의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IMF와 세계은행의 산업구조조정정책의 재구성 스그들의 정책에 관하여 WTO나 APEC, EC같은 무역블럭에 의해 인권과 사회 충격 평가과정 채택 △UN회원국들은 국제인권기구 특히 CEDAW(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협약)에 유보조항 없이 비준할 것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에 의해 개발에 있어 인권의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수행 등 11가지의 주제들이다. (<인권하루소식> 11월 10일자 2면 참조)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북경여성대회 여성운동의 국제연대 활성화의 계기로
유엔 행동강령의 정부 실천을 감시할 것
제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 여성대회 준비회의 열려

'제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 여성대회 준비회의'가 NGO(비정부조직) 한국위원회 주최로 대한간호협회 대강당에서 7일 오후 1시30분에 열렸다. NGO 한국위원회 소속 단체회원들을 포함해 1백20여명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북경여성대회를 위한 한국 NGO 위원회의 역할과 사업이 중요하게 보고되었다.

1부 동아시아 포럼보고에서는 박영혜(「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 회장)씨의 전체보고에 이어 분과보고로 △여성정치 △여성인권 △개발과 여성성 △여성성과 문화 △여성성과 건강 △여성성과 전쟁·평화 등 6개 주제의 토의 내용과 행동강령이 보고되었다. 뒤이어 신혜수(「한국여성들의 전화」 부대표)씨는 "이번 포럼은 북경여성대회를 준비하면서 동아시아 여성들 사이의 연대를 다지고 21세기 동아시아 전망을 여성들이 만들어 나가자는 데 두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각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특히 경제개발로 인한 문제와 가부장문화로 인한 억압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아시아 지역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고 목적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각국의 핵심적인 문제와 그 원인을, 공동 대응책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못한 채

여성의 지위와 문제현상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2부 북경여성대회 준비회의에서 이미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씨는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 NGO 한국위원회 사업계획" 발표에서 "정부 제2차에서는 내년 북경여성대회를 위한 한국 NGO 위원회의 역할과 사업이 중요하게 보고되었다"고 말했다. 그 지원아래 △북경여성대회에서 「한국의 날」 행사 개최 △북경여성대회 준비 심포지움 개최 △소식지 발간등을 하게 되며, 북경여성대회 후 보고 세미나와 96년 열릴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NGO 한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내 여성단체들간에 여성문제에 대한 공동 학습의 장을 갖게 되며 이후 유엔 행동강령을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심과 지식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북경여성대회에서 세계여성들에게 한국 여성운동과 상황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제연대의 효과적 채널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지난 10월 20-22일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열린 동아시아 여성포럼은 93년 11월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지역 NGO회의'

에서 조직된 것으로 이번 일본대회가 첫번째 모임이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46명(26개 단체참가), 중국 14명, 대만 16명, 홍콩 14명, 마카오 4명, 몽고 7명, 하바로프스크 2명(참관) 등 아시아 6개국에서 100여명이 참석했고 일본에서 5백여명이 참가했다. 동아시아 여성포럼은 2년마다 1번씩 개최되는데 다음 대회는 96년 한국에서 열기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다.(관련 기사 2면)

과로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예방강조
과로사 상담센터 1주년 기념식, 세미나

노동과 건강연구회 부설 「과로사 상담센터」(소장이경우)는 1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과 세미나를 번개 행사로 개최했다. 기념식은 11월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대 교내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과로사 상담센터는 1년동안 과로사의 홍보와 법률적 상담 및 구제활동을 통해 과로사 예방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로사 상담센터는 11월 30일까지 125건의 상담을 받았고 그중 19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으며 그 외 다수가 요양신청 중이거나 행정소송중이다. 산재 너무 미흡하여 그동안 가족들의 고통이 무척 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재해보상이

고문방지조약 해 넘겨
국회 의통위에서 핵심조항
유보 이유 야당 반대

7일 열린 국회 의통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유엔 고문방지조약 가입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개인의 청원권" 등 핵심 조항을 유보한 채로 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부결되었다. 정부의 가입동의안이 밝혀지자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명분만을 얻으려 한다며 반대했고, 민선,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인권운동사랑방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인권하루소식> 10월 29일자 1면)

컴퓨터 통신 분노 폭발
미군세모녀 폭행 사건에

지난 10월 25일 용산구 한남동 한남 빌리지에서 일어난 미군들의 세모녀 폭행사건(<인권하루소식> 11월9일자(제282호 1면 참조)에 대해 컴퓨터 통신 가입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지난 12월 4일 하이텔 큰마음(PLAZA)에 올린 박기동씨의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미군의 행패!!" 편지에 12월 7일 오후 8시 현재 3천 4백여명이 접속하여 조회한 것으로 밝혀져 이 사건에 대한 하이텔 가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보통 한 의견이나 메일에 대해 1백여 회 정도 접속하고, 좀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8백여 회 정도까지 접속한다) 박기동씨가 큰마음에 올린 편지는 사건의 피해자인 설은주씨가 단국대학교 총학생회에 보낸 10장 분량의 편지에 박씨가 참세상 BBS에서 다운(DOWN)받아 하이텔에 올린 것이다.

또, 천리안에도 토론실에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토론실이 개설되었고, 여기에도 설은주씨의 편지가 올려져 있으며, 나무꾼에도 올려져 있다.

미군 세모녀 폭행 사건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내용인데, 미군은 물러가라는 주장에서부터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운동을 제안하는 내용, 미군범죄에 대한 정부의 사대주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 등을 계속 게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친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격렬한 항의성 의견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호에 설은주씨 편지 게재)

제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 여성대회 준비회의
<자료 집 요약-동아시아 여성포럼 부분>

□ 여성과 인권-최영애(한국성폭력 상담소)

여성과 인권분과에서는 여성폭력, 인신매매와 매매춘, 가족노령화, 여성 재생산의 권리, 소수민족 여성의 권리를 다루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지역 여성의 인권문제는 기본적으로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에 기반하고 있으며 급격한 성장위주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나라마다 여성의 인권문제의 양태와 정도가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 홍콩, 대만 등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직장내 성희롱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과 매매춘 문제 특히 타국에서 매매되어온 여성들의 인권문제, 노령화 사회에서의 여성장자의 법, 제도적 권리보장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반면, 가정폭력, 성폭력의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않는 실정이다. 마카오, 중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아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분과토의를 거쳐 나라 간의 여성인권문제 현안에 대한 차별성을 인지함으로써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대두되는 여성인권 사안에 대한 전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각 국의 여성인권문제 해결방안과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행동강령의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법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 개발과 여성-이상덕(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분과는 여성노동자, 농촌여성, 환경과 공해, 공적개발부조(ODA), 해외투자, 외채국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각 국 참가자들의 논의를 통해 동아시아의 경제·사회개발과정에서 파생된 여성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아시아 지역은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문제인식에도 차이가 있었고 여성운동에서 중점을 두는 주제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은 일본과 선발개도국인 한국, 대만 그리고 시장경제로 탈바꿈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중국, 몽고 등 NGO들이 한곳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국가간 이익을 넘어서는 연대의 길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제선정이 일본 여성운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채택된 듯했고 일본을 제외한 각 국 참가자들은 분과주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듯 심도 깊은 논의를 하지 못했다. 한국의 경우도 참가자들이 개발문제와 여성과의 관계, 전세계의 경제가 자유무역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농촌문제, 여성노동문제, 환경문제 등에 대해 통합적인 인식을 공유하지 못했다.

특히 여성노동자 문제에 있어 고도성장을 이룬 일본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은 임금차별, 고용기회의 제한(파트타임, 용역직), 직업훈련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문제가 주요하게 떠오르고,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노동권 침해, 모성보호의 미흡한 점 등이 보고되었다. 중국, 몽고 등은 외국인 합자회사에 고용된 여성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 체벌등 인권유린을 겪고 있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다국적 기업의 여성노동자 착취문제에 대한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 여성과 전쟁·평화-권희순(정대협 아시아연대위원장)

종합평가에서 신혜수씨는 동아시아 여성포럼의 수확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고 강력한 대처방안을 결의한 것을 들었다. 실제로 정신대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하기로 분과회의에서 결의하고 전체회의를 통과, 진행되고 있다.

이 분과는 여성과 전쟁, 여성과 평화의 두 주제로 토의되었다. 현재 아시아 여성 사이에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토론이었다. 중국대표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같은 전쟁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평화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완 대표는 타이완에 있는 전 일본군 위안부의 현황을 보고 했고 일본 대표는 일본 여성운동을 통해 일본의 운동상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범죄성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강령이 제안되어 만장일치로 통과, 동아시아 여성포럼의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일본여성의 제안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광고를, 그 나라의 독자가 가장 많은 일간지에 내자는 행동강령이 첨가되었다.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KNCC 인권위 20년

인권 민족주의를 떠나 세계 보편적 문제로

교회협 인권상 수상 정대협 이효재, 윤정옥 대표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윤정옥씨와 이효재씨가 제8회 한교협 인권상 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목사)는 8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회협 인권위 20주년 기념식과 인권상 시상식에서 "정신대 문제의 정의롭고 조속한 해결이 민족의 자존성을 세우고 일본의 사회와 배상만이 과거청산의 길임을 양국 정부에 촉구하는 등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시상이유를 밝혔다.

윤정옥씨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개인배상이 까마득한 지금 이상을 받기에 이르다"고 수상 소감을 말한 뒤 상금 1백만원을 정대협에 낼 것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진행된 인권위 20주년 기념예배에서 김관석(교회협 중경총무)목사는 "5백여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갇혀있고 외국인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가가 있

는 부끄러운 우리의 인권 상황을 외면해선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고 설교했다.

이어 오재식(크리스찬아카데미하우스 부설 사회교육원)원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우리는 인권 이기주의, 인권 민족주의에 빠져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이익으로 동티모르의 문제를 눈감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기준을 우리의 의무로 받아들이야 한다. 세계인류의 생존권에 대한 의무를 우리도 져야한다"면서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이 국경을 떠나는 운동을 20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벌이자"고 강조했다.

1백50여명이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는 지난 20년동안 한교협 인권위를 위해 활동해온 공덕귀·박세경

(변호사)씨에게 공로패가 주어졌다. 이밖에도 비록 참석하지 못했지만 한국 인권을 위해 노력한 페리스 하비(미국, 목사)씨 등 외국인 5명과 BFW(독일단체)들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또, 「한국교회 인권선교 20년사」, 출판기념식도 있었다.

교회협 인권상 수상 윤정옥정대협 대표씨 수상소감

지금도 정신대 할머니들은 적어도 두세가지 병을 앓고 정신적 피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명예회복도 개인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45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전쟁범죄자 재판에서 내덜란드의 30대 여인이 전쟁기간중 3개월동안 정신대로 일한 것으로 일본장교가 처벌받은 일이 있었다. 우리의 경우 13세에서 많으면 17세까지 10-20만명의 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다. 그리고 오래 있었던 여자는 8년을 있었다. 좁은, 철창이 있는 방에서 하루에 30명을 받아야 했고, 주말에는 50명의 일본군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1백명을 하루에 받아야 했던 여성도 있었다. 중국방문시 밝혀진 32명의 정신대 할머니중 9명이 생존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은 너무도 끔찍했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다.

실제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난 6일 일본 여당산하의 '중군위안부문제등 소위원회'에서 민간기금에 정부가 출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라야마 수상은 금주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민간모금으로 위로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이다. 정신대 뿐 아니라 한국정부를 모독하는 것이다. 11월 국제변호사협회는 우리 정부와 일본 의무성 그리고 정대협에 '65년 한일협정으로 정신대문제는 해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개인 배상을 받을 권한이 있고 일본정부는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진상규명만 요구하고, 배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은 하나의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진실을 손에 쥐고 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개인배상등을 위해 이땅의 말들은 끝까지 불붙고 늘어질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단체나 개인은 무라야마 수상에게 항의서한을 보내자.

<인권하루소식>이 숨이 찹니다

كمزينة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 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찹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구독료는 1만원~3만원 사이입니다).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자료/ 미군 세모녀 폭행사건 피해자 설은주씨 편지(발췌)

학생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지난 1994년 10월 27일 MBC 9시 뉴스에 "한국인 모녀 미군 헌병에게 폭행당함"의 제목으로 방영되었던 피해자 설은주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게 인권유린을 당하고 마치 짐승과 같은 취급을 그것도 바로 내 조국 땅에서 받았다고 생각하니 음식이 넘어가지도 잠을 잘 수도 없이 저희 한 가족 모두는 억울함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극도로 분이 난 저는 그들 미군헌병들에게 "당신들은 어머니에게 아무 것도 준 적이 없느냐?"고 항의하자 그들은 "니가 이 사람 sponsor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나는 이 할머니의 작은 딸이고 오늘 같이 여기 방문 온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미군

고 처소를 들어섰을 때 이 광경을 보고 놀란 그녀가 "당신들이 어떻게 내 동생한테 무슨 죄도 수감을 채웠느냐?"고 항의하자 그들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로 "너도 입닥쳐"하며 4명이 무더기로 달려들어 땅바닥으로 내리 찍어누르고 언니의 팔을 뒤로 완전히 꺾어 넘어뜨린 뒤 꺾인 팔에 있는 힘을 다해 위로

신을 잃고 오줌을 싸셨습니다. 이토록이나 급박한 상황에서도 어떤 응급조치도 해주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모친을 빙 둘러 에워싸고 바닥을 내려다 보며 저희들끼리 인격말살 인권유린 그 자체의 작태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언니가 울며 오열하며 앰블런스를 불러 달라고 수차 요청을 했으나 거의 30분이 지나서야 앰블런스에 실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거꾸로 미군 헌병에게 공무집행방해와 행패죄로 죄목을 덮어 씌워 한국경찰에 넘겼으며 언니에게 미국신분증을 빼앗고 새벽 2시 30분까지 약 5시간을 감금 조사했습니다.

새벽 1시30분경 북한남파 출소부터 혼방되어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헌병에서 자국민인 제가 미군헌병에게 죄도 없이 이토록 인권을 유린 일시 당하고는 도저히 살수 없다는 생각에 이튿날 용산 경찰서 외사계에 찾아가 정식으로 신고하였습니다.(중략)

(어머니가)급작스레 야위어지고 허리가 아파 화장실을 자유롭게 가지지 못하고 고동소리위 할 때 마다 노인을 이렇도록 만든 그들의 만행에 말로는 형용할 없는 분노에 가슴이 찢어질듯 아픕니다.

또한 주무시다 비명을 지르시기도 했습니다. 우시면서 "억울해서 못산다. 억울해서 못산다"하실 때에는 그들에 대한 증오심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중략) 조속히 그들을 처벌하여 다시는 그들이 한국인에게 그런 무자비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이 시점에서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후략)

내 땅에서 미군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살 수는 없다

헌병들은 "그러면 입닥쳐"라는 폭언을 서슴치 않고 해했으며 이에 분개한 제가 "나는 한국시민이고 당신은 미군 헌병이므로 내가 당신의 명령에 복종할 이유가 없다"고 하자 그는 저를 죽일듯이 험악한 얼굴로 "계속 그렇게 입을 놀리면 너를 체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어처구니가 없어 저는 "어떻게 체포하겠느냐?"고 되묻자 그는 즉각적으로 수갑을 꺼내들고 저의 오른쪽 팔을 있는 힘을 다해 뒤로 비틀어 격자 주위에 있던 다른 3명의 헌병들이 동시에 달려들어 주먹으로 어깨를 위에서 내려치며 밀어 누르고 마치 중헌병법을 체포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너무나 분한 저는 한국경찰을 불러 달라고 계속 소리쳤으나 그들은 계속 "삿입"이라고 하며 저를 꼼짝 하지 못하도록 오른쪽 팔뚝을 붙잡고 힘을 가해 지금도 그 멍자욱이 선명하며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 오른쪽 팔목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 전치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곧이어 언니 설은하가 손에 4살 먹은 조카를 데리

끌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으나 그들은 아랑곳없이 무자비하게 힘을 가하고 이 상황에 놀란 4살 먹은 어린 조카는 "우리 엄마 죽었다 우리 엄마 죽었다"하면서 경기를 일으킬 만큼 오열했습니다. 어린이 보호에 일등국민을 자처하는 그들이 4살된 어린이 앞에서 엄마를 폭행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의 만행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언니도 역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중략)

또한 그들은 심지어 이웃집 여인에게 조차 험악스럽게 "너도 끌려가기 싫으면 빨리 여기서 꺼지라"는 등 상스런 소리를 서슴치 않고 했으며 아무 죄도 없는 주민 아낙에게 헌병이라는 직책을 무기로 위협하고 명령하며 한국 여자들을 멸시했습니다.(중략)

이러저희는 용산 미8군 영내에 있는 헌병대로 끌려갔고 그곳에 도착하자 곧 각자 따로따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 고혈압의 지병이 있으신 모친은 지나친 쇼크로 의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기절하셨으며 옷을 입은 채 정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보안법 개정, 사형제도 폐지 고문방지조약 유보없이 가입 등을 촉구

오늘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가두캠페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제46주년 세계 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오늘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구백화점 앞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오늘의 캠페인에서 발표할 메시지에서 대량학살, 고문, 양심수들에 대한 임의적인 구금, 사형, 수천만명의 난민 등 "전세계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보고되고 있다"면서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새로운 세기 부들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세계의 각 정부들은 인권 침해의 종식을 위해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고 이를 이행할 것" 세계의 정부들은 고문을 종식하고 모든 수인에 대한 비인간적

이고도 가혹한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 △무장충돌 과정에 있는 정부와 무장세력들은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의 인권보호에 더욱 주의할 것 △모든 정부는 양심수를 즉각적이고도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애고, 사형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한국정부는 고문방지조약에 유보조항 없이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

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최근의 흉폭한 범죄와 이에 기인한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이유로 한국 정부가 최근 실시한 15명에 대한 사형집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범죄와 단순한 범감정을 이유로 사형을 무리하고도 조급하게

시행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유엔인권 이사회의 이사국으로써 세계 모든 국가에서의 인권 신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한국정부가 사형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국제인권협약(B규약)의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힌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동티모르 인권침해 상황 홍보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인도네시아 인권침해 사진전을 갖는다.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이와같은 내용의 가두캠페인을 벌여왔다.

전국연합 이창복의장 징역 10개월 선고
9일,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 북한 통일방안 찬양등의 이유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 고발 관련 검찰 아직 결정 유보

여직원 채용시 용모제한 업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6일 중앙일보를 선두로, 한겨레신문, KBS 등 각 언론사의 보도가 오보로 드러나 다시 문제거리로 나서고 있다. 6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지난 5월 「여성민우회」(공동대표 정강자, 민우회)등 사회단체가 44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 이호철검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집과 채용에 있어 평등이란 남녀가 함께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여성으로 성별을 제한한 상태에서 여성간에 제한조건을 제시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보도와 관련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연숙, 여협)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집과 채용에 있어 평등이 남녀가 함께 경쟁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형식논리에 빠진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2면에 계속---)

<인권하루소식>이 숨이 참니다

끔찍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 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참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구독료는 1만원~3만원 사이입니다).

계좌번호
재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 오늘의 행사□
- 12.12 군사반란자 재판회부를 위한 제3차국민결기대회
오후 2시 / 서울역
주최: 민주당
 - 제6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오후 5시 / 한양대 올림픽체육관
주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763-2606)
 - 12.12 반란자 기소를 위한 재야단체 농성 13일째 명동 향린교회(☎ 772-9753)

제46주년 기념 세계 인권선언일 기념 특집①

인권운동의 화두

김형태(천주교인권위원장)

역사는 과연 진보하는 것일까. 신권의 시대를 지나 왕권의 시대, 그리고 바야흐로 자본주의의 금권의 시대가 천년왕국의 영화를 누리고 있으니 인간의 시대는 과연 언제 올까? 나와 너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금권의 시대는 천년 만년 그 호시절을 구가할 것 같다. 아니 인류의 역사에 인간의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예견해 본다.

많은 다른 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일을 되풀이 해왔다. 노자는 일찌기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내가 무엇을 잘 해 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배월당 김시습도 세상과 백성을 평안히 하겠노라고

를,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논함은 결국 백이 숙제를 굶어죽게 하는 일밖에 더하겠는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보장해 줄 것인가를 놓고 해방이후 50년간 남북의 우리 역사가 별인시행착오를 보라. 돈을 많

<알림>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일 제46주년 기념' 특집으로 오늘 김형태 천주교인권위 위원장의 글을 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간의 시야를 넓히는 차원에서 A규약과 관련하여 점검하는 글을 2회에 걸쳐 실습니다. A규약의 내용과 현실에 대한 진단이 주내용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나는 나의 권리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 타인의 권리를 생각할 수 있는가?

인권이라 할 때 '인'은 '사람'이란 뜻도 있고 '다른 사람'이란 뜻도 있으니 다른 사람의 권리보다 나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볼 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대, 인간의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가끔 어떤 자리에서 인권변호사 아무개라고 소개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인권이 아니라 물권변호사 아무개입니다'라고 농담삼아 정정을 해 주기도 하지만 인권변호사라는 소개말이 싫지 않다. 그러나 바로 이 경우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시대를 만드는 데 보탬을 주고 있다는 자타의 평가는 바로 나의 명예나 자부심같은, 나의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니 결국 다른 사람의 권리는 나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돈이나 지식이나 힘을 바탕으로 남들의 권리를 지키겠노라, 역사의 진보를 책임지겠노라 큰소리쳤지만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고

나선 강태공을 이렇게 꾸짖었다. "비바람 들이치는 낚시들 위에 앉아 고기잡이 아닌 낚시질을 하며 위수의 고기와 새에게서 때 있고 한가히 사는 도를 배웠던 강태공아 뭐하자는 늑그막에 벼슬이니 뭐니해서 사나운 장군 1회 가지고 양심지켜 깨끗이 살자는 백이 숙제는 굶어 죽게 하였느냐" 요즈음 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아닐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나의 권리보다 더, 아니 최소한 나의 권리와 똑같이 존중해 줄 정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인권이니 국민이니 떠들지 말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나의 권리만큼 똑같이 여길 수 있는 이가 과연 누구일까. 금강경에서 부처가 제자 수보리에게 설법하는 화법을 빌면 남의 권리를 위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그는 남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예수도 이런 가르침을 주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겪어질 각오없이 다른 사람의 권리

이 버는 것이, 기술을 쌓는 것이 아니면 계급투쟁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라고 저마다 주장해 왔다. 이제 모든 주장들이 무너지고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는 94년 이 시점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하는 인권운동을 한다는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붙잡고 늘어져야 할 화두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과연 나는 나의 권리 - 여기에는 재산적 이득뿐 아니라 명예, 그리고 선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도 당연히 들어간다 - 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 타인의 권리를 생각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은 그저 나의 독선일 따름이요, 내가 바림직하다고 내세우는 제도는 또하나의 분쟁거리일 뿐이 아니겠는가?

성서에 이런 구절이 있다. "종이 명령대로 했다해서 주인이 고마워해야 할 이 유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 것 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라고 말하여라."

불교인권위 양심수 겨울나기 펼쳐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는 10일 46회 세계인권기념일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양심수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성금을 모으고 있다. 따뜻한 털양말 한 켤레라도 함께 나눔 따뜻한 마음을 기다린다. 후원금:제일은행 106-10-039753(불교인권위) 745-1852

(1면에서 계속) 덧붙여 "남자사원을 선 발하는데 기준이 되지 않는 키나 용모에 대한 기준을 여자사원에게만 적용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7일 민우회 정강자대표를 비롯한 5명이 찾아간 자리에서 이호철검사는 이 사실을 부인했으며, 다음주 중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전했다. 민우회등은 이와관련해 대법원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이 보도한대로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민우회, 「남녀평등을 위한 교수모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단체탐방37/ 서울지방법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체포 연행된다면!" "불안과 당혹감에 빠져 스스로 변호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을 때" "서울지방법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변호사가 곧 달려가 법률적 조언을 무료로 해드릴 것입니다" 오전 9시 「당직변호상황실」(위원장 이상수 변호사, 이하 상황실)은 밤새 녹음된 전화안내(녹음기)를 풀어주는 작업에서부터 오전 업무가 시작된다. 법무주임 박상진씨는 걸려온 전화중 형사사건에 한하여 구속여부를 확인하고 곧이어 팩스로 그날의 당직변호사에게 신속히 연락한다. 그리고 연락받은 변호사는 경찰서로 달려가 피의자를 만난다.

평화로운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체포되거나 연행된 피의자들은 형사들에게 조사를 받을 때, 협박과 압력으로 때로는 고문까지 동원된 공포스런 분위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검사가 기소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쓰인다. 여기서 변호사의 접견은 피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 조서작성시 유의점까지 상세하게 알려줌으로서 피의자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당직변호사제도는 어느 사건도 마찬가지로 초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당직변호사제도는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직변호상황실의 운영위원을 맡고 박성호 변호사는 당직변호사제도에 대한

의의를 "변호사 단체가 주체가 되어 불법연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 줌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다"고 말했다. 당직변호사제도는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소속 1천7백8십명

소는 면회시간을 오후 5시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상황실은 대도시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의 국민에게는 법률적 서비스를 주지 못하고 있다. 한번은 전주에서 어떤 시민이 다급한 연락을 주었으나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한다.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 광고가 나

장에 홍보용 스티커와 포스터를 부착한후 접수건수가 급증하였다고 한다. 특히, 94년 조사한 바로는 접수건수의 60-70%가 이 제도를 경찰서에 부착된 스티커나 포스터를 보고 알았다고 할 정도이다. 당직변호상황실 현장에서 가장 바빠서 일하고 바쁘게는 "형사소송법이 접견 때 변호인 입회권을 제도적으로

당직변호사 제도는 법과 국민 사이에 떨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94. 3. 31 현재)의 변호사 중 4백1십1명이 하루에 5명씩, 토요일에는 3명씩 자택으로 당직변호업무에 교대로 맡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전체 회원수의 20%에 이르는 숫자이다. 94년 3월 31일까지 상황실에서 접수한 접견회수는 1천9십8건에 이르며 기소율은 20%에 이르고 있다. 범죄유형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폭력, 절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이다. 상황실은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수원등에 있다.

이 제도는 신속한 접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접수한 사건은 당일내로 처리한다는 원칙하에 해당사건을 가장 빨리 접견할 수 있는 당직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연락한다. 오전에 연락을 받은 당직변호사는 5-6시간안에 접견하는 신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오후 늦게 연락을 받은 변호사들은 피의자가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날 접견을 하지만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날 접견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현행 행정법상 구치

로 보장하고 올바른 변호활동을 위해서 수사기록 열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과제를 "신문이나 홍보를 통해서 직접 얻는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파악한 사건을 접수하는 방식인 당직인제도를 마련하고 당직변호상황실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대비하여 변호사 1인당 국민의 수가 1백분의 1인(미국 변호사 1명당 약 300명의 국민/ 변호사 1인당 약 3만명의 국민) 우리나라에서 당직변호사제도는 국민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하여 변호권을 가지게 해 줄 수 있는 사

람, 이미 기소단계로 넘어간 사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 변호사 선임을 제안할 때 보통 변호사 선임가격보다 낮게 말할 경우 무슨 문제단체 아니냐며 되레 이상하게 여기고 기피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한다. 하루 밤에 녹음된 1백여통의 통화중 9십여통이 당직변호상황실에서 다룰 수 없는 민사사건과 대개는 법률상담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황실은 중앙일간지, 텔레비전, 라디오 언론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93년 11월부터 서울지하철 구역내와 경찰서 보호실, 유치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파악한 사건을 접수하는 방식인 당직인제도를 마련하고 당직변호상황실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대비하여 변호사 1인당 국민의 수가 1백분의 1인(미국 변호사 1명당 약 300명의 국민/ 변호사 1인당 약 3만명의 국민) 우리나라에서 당직변호사제도는 국민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하여 변호권을 가지게 해 줄 수 있는 사

<인권하루소식> 기자 최은아> 당직변호사상황실 전화 597-1919 팩스 597-2929

<인권하루소식> 합본 1,2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에는 인권에 관한 특종이 실려 있습니다. 인권상황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인권하루소식>은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합본 1호 5천원 합본 2호 1만원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린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주체사상을 학습했다고”

증인신문, 「샘」간부 혐의사실 부인

경찰, “불러주는 대로 안쓰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 협박도

고등학교에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의 고영국씨의 5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10단독(판사 홍경호) 심리로 열렸다. 검사측은 김용우씨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주체사상 교양과 김일성 찬양여부를 집중적으로 신문하였다. 증인으로 나온 백 아무개씨(모여상, 3학년)는 “주체사상을 학습받은 적이 없고 김일성을 찬양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진술서에 쓴 것은 경찰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사건이 터지고 언론에 보도가 나가자 지도교사실에서 담임, 교감선

생님과 경찰의 입회하에서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다”고 말했다. 백씨는 이 때 작성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주체사상을 학습했고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백씨는 경찰관으로부터 “만약 진술서를 요구하는 대로 쓰지않을 때에는 집에 쫓겨 보내지 않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백씨는 「샘」의 성격에 대해 “청소년들이 모여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진정한 민족문화를 배우는 모임”이라고 말했다.

배 가까이 증가되는 기록을 보여주었다. 또한 94년 파업으로 구속된 노동자는 금호타이어 39명, 전기협 31명 등을 포함 1백33명이었다.

12·12반란자 기소, 특별검사제 도입촉구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15년이 되는 12일 참여연대, 경실련, 여연, 환경운동연합등 「12·12 반란자 기소촉구 시민 사회단체 연석회의」는 탐골공원에서 시민 70여명과 함께 「12·12 군사반란자 기소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연석회의

는 11월 16일부터 대검찰청과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촉구를 위한 매일 집회를 결의하고 12일까지 17번째 집회를 진행해왔다. 연석회의는 12·12 사태가 검찰에서 헌법재판부로 넘어간 시점에서 “새롭게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임명권장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유보하는데 대해 크나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또한 “만약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짓밟은 군사반란행위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유보하여 검찰의 논리대로 재판회부가 어렵게 되거나 그릇된 판결을 내린다면 스스로 존재의미를 포기하는 것”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검찰의 재수사 촉구, 12·12반란자 기소, 특별검사제 도입등을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하였다.

◆ 행사 안내 ◆

□인권선언일 기념 외국인노동자 법률상담소 개소식 및 심포지움

- 일시 : 12월 13일(화) 2시~6시
-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회의실
- 순서 :

- 제1부 - 외국인노동자 법률상담소 개소식
- 제2부 - 심포지움(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주최발표 : 김진수 변호사
· 주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우리나라 여성정책-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 일시 : 12월 14일(수) 1시~5시
-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 7주년 심포지움

- 일시 : 12월 15일(목) 3시 30분~6시 30분
- 장소 : 정립회관 대강당
- 주최발표 : 장애우의 접근권 실현방안과 전망(김종영)/법률적 의미로 본 접근권(강경선)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성황 양심수 4백36명 추운 감옥에서 겨울나기

올해로 6회째 맞는 민가협이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지난 10일 오후 5시 한양대 올림피체육관에서 8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임수경·박철민씨 사회로 4시간 가까이 진행된 행사에서는 특히 노무현씨의 12·12청문회와 세계 최장시수 김선명씨의 44번째 겨울을 극화한 공연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 행사에는 가수 정태준, 박은옥, 현영애, 김중서, 안치환씨등과 영화 배우 문성근씨, 테너가수 원창연씨등이 출연했다.

이날 민가협은 12월 6일 현재 모두 4백36명의 양심수가 있다고 발표했다. 94년 한해 구속된 양심수는 총 7백36명으로 작년 1백95명에 비해 약 3.8배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자 7백36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은 49%인 3백63명으로 93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1백5명보다 무려 3.5배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신공안정국으로 전 국을 휩쓸었던 6월 구속자는 2백15명, 7월 구속자는 1백31명으로 나타났는데 5월 구속자 23명에 비해 10

인권조약에 마지못해 가입, ‘조약가입국 청호연기’

변협 강연회, 조약내용 홍보, 상시적 감시제도 확립 필요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천 검토’라는 주제로 9일 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발표에 나선 정인섭(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주요 인권조약의 국내적 실천’에서 “국내적 실천상 문제점으로 소극적 가입태도와 불충분한 준비과정, 적극적 실천의지 부재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제인권조약이 국내적으로 원활히 실천될 수 있는지 여부의 관건은 정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실천상 문제점으로 첫째 정부의 소극적 가입태도가 문제인데 국제사회에서 인권규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보다도 조약이 발효된 이후 국제사회의 여론에 이끌려 불가피하게 가입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조약 가입시 국내법과 충돌되는 조약이 판정되는 조항을 모두 유보한 채 가입해 왔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둘째로 지적되는 정부의 불충분한 준비과정은 동일한 조약을 두고도 실무자가 바뀔 때마다 국내법 해석이 달라져 부처 의견이 변경되는 점에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개별인권조약 가입시 한국이 유보하고 있는 내용마저 각 조약에 따라 일치하지 않았다.

그는 “인권조약에 가입하는 진정한 의의는 점진적 실천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국내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뒷받침이래 조약상 목표를 실현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 실천의지의 부재를 문제로 들었다. 우선 인권조약이 국내적으로 널리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약 내용이 국민에게 폭넓게 홍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약가입국 청호연기’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측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정교수는 민간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유보조항이라 밝힌 조항에 대해 원론적 비판을 하는 정도에 불과했을뿐 유보대상으로 지적하지 않은 조항에 대한 추가적 유보나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포괄적 의견제시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조약 내용의 적극적 홍보책 마련, △인권조약 가입시 중장기적 실천계획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조약 가입후 관련 국내상황에 대한 상시적 감시제도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난민조약, 무국적자지위에 관한 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 시민적·정치적 권리 조약, 경제적·문화적 권리 조약, 아동권리협약등에 가입, 고문방지조약을 제외하고 주요한 세계적 인권조약에 대부분 가입해 있다.

CIIR아시아과장, 개발·여성 권리 기획 준비위해 방한

가톨릭국제관계연구소(Catholi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CIIR) 교육부, 아시아과장인 캐서린 스코트(Catherine Scott)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스코트씨는 참여연대(대표 김중배, 오재식, 홍성우)에서 개최한 “시민운동과 국제연대”란 간담회에서 이번 방한의 목적을 “아시아 지역에서 급속한 경제개발이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했는가를 알아보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하여 왔다고 밝혔다. 또한 “급속한 경제개발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빈민, 노동여

◆ 인 권 간 행 들 ◆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소식 제4호(☎ 859-0430)
·주요내용 : 외국인노동자 귀향모임 활동보고/피난처 소식(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국가별 보상현황, 외국인보호소에서 온 내란노동자의 편지등)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 여성대회 준비회의-NGO한국위원회(☎ 423-5355)
·주요내용 : 동아시아 포럼 보고(분과보고-여성과 정치·인권·여성·문화·건강·전쟁, 평화)/제1회 동아시아 여성선언/ 동아시아인 행동강령/ 동아시아포럼 일본, 중국보고서(62쪽, 3천원)

□한국교회 인권선고 20년사-KNCC 인권위원회 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744-3717)
·주요내용 : 해외축하메시지/ 인권위 20년 인권선고/ 한국인권선고 20년 연혁/지역 인권선고위원회 창립배경 및 활동(575쪽, 1만2천원)

□과로사 상담센터 1주년 기념세미나 및 기념식-과로사 상담센터(☎ 861-3111)
·주요내용 : 과로사와 인과관계(대법원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과로사와 기업책임/과로사와 의학/노동의 여러요인과 피로도에 관한 조사/재해보상의 이론과 각국의 입법례(106쪽)

□우리네 아이들 11월호-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275-8505/6)
·주요내용 : 기획1 가사노동논쟁이 보육에 주는 함의/기획 2 부모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하여/ 긴급입수1 영유아보육법중 개정법률(민주당)안/ 긴급입수2 민자당 영유아보육법중 개정법안(68쪽)

□제4회 외국인등록법 문제 국제심포지움 “전후처리, 전후보상과 재일한국인의 인권”-(☎ 744-3717)
·주요내용 : 주재강연1 재일동포의 과제와 전망/ 주재강연2 한국과 재일한국인사회/ 주재강연3 전후50년과 일본 교회의 과제/사례보고1 외국인등록법, 법적 지위문제와 오늘의 과제/사례보고5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사례보고6 외국인 노동자, 우리의 이웃입니다.(113쪽)

□아동학대연구-학대받는 아동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이용교 역)-다울출판사(☎ 0344-903-1039)

□이 강산의 키 큰 나무, 그대 청년이여!-청년지도자고 이범영 추모사업회 준비위(☎ 364-7782)

□한울삼(34호)-유가협(☎ 764-1684, F:743-2835)

□부활하라 녹두꽃의 상흔이여-한영현열사 추모사업회(☎ 296-9176)
·주요내용 : 약력/한영현의 죽음이 갖는 의미/위기의 시

성이며 이들은 가정내에서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2중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여성노동자 침해했는가를 알아보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하여 왔다고 밝혔다. 또한 “급속한 경제개발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빈민, 노동여

가톨릭국제관계연구소는 내년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개발의 대표적인 나라들인 한국,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등에서 여성의 인권현실을 비교하고 경험을 나누는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13일 제46회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외국 노동자법률상담소를 개소하고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로 기념심포지움을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변호사, 중국교포를 포함하여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중국노동자센터 등에서 백여명이 참석하였다.

대한변협 이세중회장은 상담소 개소식 축사에서 "인권의 향상은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지적하며 "한국에 체류중인 10여만명에 이르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무시한 세계화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진정한 세계화란 인권의 개선이 선결된 조건에서 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개소식에 이어 벌어진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심포지움에서 발제자로 나온 김선수 변호사는 "우리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하면서 불법체류 및 취업을 묵인하는 이중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ILO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장은 "현재 2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취업연수생제도도 편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한 수단이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소장은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국민적 의사수렴을 거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감시, 감금, 강제노동 등 취업연수생의 심각한 인권실태를 지적하며 지난달 부산에서 취업연수생이 지정된 사업장에서 23%가 탈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물론 노동권을 포함한 사회적 영역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광택(국민대 법대)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사회보장권은 물론 주거시설 평등권, 단체교섭에 따른 향유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온 조주현 노동부 고용정책과장은 "국내 체류중인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산재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펼 것이며 산업기술연수생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행정조직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김재오 소장은 노동부 입장에 대해 "우리는 산재당한 외국인 노동자를 1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을 3년 소급적용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보상신청을 한 외국인 노동자는 1백28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정배변호사, 아태 민간 인권단체 촉진회의 참석
12월 2-3일 방콕

아시아 태평양지역 민간 인권단체 촉진회 회의가 지난 12월 2-3일 양일간 방콕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촉진팀중 동북아 소지역을 대표해 천정배 변

호사가 참가했다. 이밖에도 동남아시아 대표 Sivarasa Rasiyah, 남아시아 대표 Ravi Nair, 촉진팀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ACFOD의 Boonthan Verawongse 등이 참가했고, APWLD의 Nimalka Fernando는 일부만 참석했다.

회의결과 촉진팀에서는 촉진팀 재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키로 했고 사회개발정상회의(WSSD)에 아시아 태평양지역 민간인권단체의 참가를 극대화하되 촉진팀이 이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내년 5월 방콕에서 열리는 Chittagong Hill Tracks에 관한 국제회의에 많은 민간단체가 공동주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합의했다.

이 회의는 「여성·법·개발에 관한 아태지역포럼」(APWLD)와 「개발에 관한 아시아문화포럼」(ACFOD)이 공동으로 개최한 12월 1-2일의 「아시아 여성법정」에 이어 열렸다.

◆ 공 판 안 내 ◆

- 12월 14일(수)
 - 조혁, 국가보안법, 2시30분, 311호, 합의21부, 1회
 - 김중백, 국가보안법, 10시, 311호, 합의21부, 3회
 - 최형록, 국가보안법, 10시30분, 311호, 합의21부, 1회
 - 방진옥, 국가보안법, 2시, 311호, 합의21부, 1회
 - 최동기, 국가보안법, 10시, 317호, 3단독, 선고
 - 박순봉, 국가보안법, 10시, 424호, 9단독
 - 전창일등, 국가보안법, 2시, 425호, 합의22부, 3회
- 12월 15일(목)
 - 문영기, 국가보안법, 4시, 317호, 3단독
 - 광병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1시, 317호, 3단독
- 12월 16일(금)
 - 안성민, 국가보안법, 10시, 319호, 6단독, 선고
 - 김명희, 노동쟁의조정법, 10시, 421호, 8단독, 선고

● 국제 인권 소식 ●

아시아지역 인권교육 정보센터(Asian Regional Resource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 ARRC)는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타이 방사엔에서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워크샵을 가졌다. 아태지역에서 현재의 전반적인 인권교육 상황을 토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과 전략을 논의하고 각국의 다양한 조건속에서 인권교육의 공통된 근거를 수립하기 위해 열린 워크샵에서는 인권교육은 인권의 보호와

는 등의 대안의 매체이용, △공무원에 대한 교육, △정규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추가, △인권침해 실태조사반의 구성, △인권을 개선하고 인권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는데 민중의 참여 등이 필요하다 밝혔다. 또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정부의 인권의식 고양 및 관련 공무원과의 의견 교환, △학교 정규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시행할 교사들과의 연람 구축, △결코 양도할 수 없는 생활권과 자유권의 보호를 위한 개인, 집단의 활

인권교육은 인권옹호 증진을 위한 투쟁의 중요부분

아시아 인권교육정보센터 워크샵

증진을 위한 투쟁의 중대 부분이라는 점이 강하게 지적되었다. 워크샵에서 참가자들은 인권교육이 더이상 한계를 갖는 활동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권활동가들에게 있어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소위 '방관자'들을 인권교육 대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활동가들은 이들에 대해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상황에 대한 의식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효율적인 인권교육을 위해 △인권침해 소식을 기사화하고 출판하

동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RRC의 앞으로의 과제 전과, 모니터, 조정등의 역할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제안되었으며, 세계 인권교육 10년기간(Decade)선포, 인권활동가 자신을 포함한 계절별 훈련과정, 인권교육자료 발간 등을 담당할 세계의 전담반을 조직하였다. 결론적으로 인권교육은 인권의 보호와 효율적 수행을 위한 투쟁의 중대한 부분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교육만이 민중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하루소식>이 숨이 참니다

큼직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참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구독료는 1만원~3만원 사이입니다).

계좌번호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한국에서는 워크샵에 김광방·김준희(재미교포, 국내연수생)씨가 참가했다.

15일, 여성단체등 용모제한철폐 촉구집회

"용모제한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단체는 검찰의 44개 기업에 대한 기소추구와 기업의 용모제한 채용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15일 오전12시부터 서초동 검찰청 앞 보람은행 앞에서 갖기로 했다. 또 한 이에 앞서 14일 오전10시 서울지검 혁명광 검사장과 면담을 요청해 놓고 있다.

등을 위한 적극적 정책요구하는 청원서를 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보냈다.

지난 7일 「남녀평등을 위한 교수모임」과 「한국여성민우회」은 이호철 담담검사의 의견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형의 처분을 내린 적도, 결정하기로 밝힌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에서는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를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회관에서 개소하였다.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는 피난처 중심의 상담과는 다르게 법률구조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률제정과 정책대안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임금체불, △강제노동 등 노동법 관련문제, △산업재해 및 집채용고발사건 변호인 모임과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수모임」은 여직원 채용시 용모제한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또한 8월25일 모 집채용차별 고발사건에 대한 해결추구와 남녀고용평

◆ 행사 안내 ◆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우리나라 여성정책-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 일시 : 12월 14일(수) 1시~5시
 -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 발제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법적의의와 정책적 과제/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
-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 7주년 심포지움
 - 일시 : 12월 15일(목) 3시 30분~6시 30분
 - 장소 : 정립회관 대강당
 - 주제발제 : 장애우의 접근권 실현방안과 전망(김종영)/법률적 의미로 본 접근권(강경선)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린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검거이유 고지안하면 현행범이더라도 연행은 불법

서울지법, 범죄사실 요지, 연행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필요

현행범일지라도 연행과정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 및 구속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연행했다면 불법,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씨(48.공무원, 서울 구로구 구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사건 항소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죄만을 인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법원의 검증영장에 근거하지 않은채 피고인을 연행하는 것은 불법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며 "당시 피고인을 끌고 가려던 것이 음주운전의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를 구속영장없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긴급구속하려면 현장에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 요지 △체포나 긴급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설명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15일 밤 11시30분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동양공전 앞 도로에서 척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구로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의경 등에게 강제연행되는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선

고유에 판결을 받았다(판결요지 요약2면).
경찰비리 폭로 경찰관 보복구속 의혹
 지난 8월 파출소의 관내 업소 월정금 수수비리 및 파출소 도급경비 불법유용 사실을 폭로한 김석원 전 경장이 지난 7일 뇌물수수,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뒤 숨겨져 알려졌다. 김 전 경장에 대한 구속은 비리관련자의 처벌등을 계속 주장, 이에 대한 경찰의 보복성이 짙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김 전 경장은 지난 11월에 4차례에 걸쳐 신정1파출소와 양천경찰서를 방문하여 비리관련자를 처벌하지 않은 것과 동료였던 경찰관의 조직적인 보복에 대해 항의하다 폭행되기도 해 이중 2차례에 걸쳐 상해진단서까지 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비리사실

폭로당시 김 전 경장이 관련된 월정금 수수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김 전 경장은 일선파출소의 비리사실을 폭로하여 파면조치 당했으나, 지난 11월 14일 열린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1차심리에서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정강용씨 불합격은 장애인 차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학우회, 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인권위원회등으로 구성된 「정강용씨 구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지난 93년도 충남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정강용씨에 대한 구제를 요구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정씨가 임용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위법부당한 법 적용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정씨의 합격을 인정할 것 △장애인 의무고용 2% 규정을 준수할 것 △공무원 임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철폐할 것 등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 행사 안내 ◆

- 인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 7주년 심포지움
 - 일시 : 12월 15일(목) 3시 30분~6시 30분
 - 장소 : 정립회관 대강당
 - 주제발제 : 장애우의 접근권 실현방안과 전망(김종영)/법률적 의미로 본 접근권(강경선)
- 여사원 모집·채용시 응모제한 고발기소 촉구대회
 - 일시 : 12월 15일(목) 12시-1시
 - 장소 : 서초동 서울지검 앞 3거리 보람은행 앞
 - 순서 : 인사말, 집회취지 및 경과보고, 현장의 목소리, 성명 발표, 서울지검 앞까지 행진
 - 주최 : 여연/여협/민우회/전교조/참교육시민모임등

<인권하루소식>이 숨이 찹니다

끔찍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찹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구독료는 1만원~3만원 사이입니다).

계좌번호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동티모르를 지원하는 시민들의 첫모임 15일 외국인노동자피난처에서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원하는 시민들의 작은 모임이 15일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사무실에서 7시에 열린다. 이 모임은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초청으로 방한했던 로케 로드리게스씨와 함께 가진 인권워크숍 토론의 한 결과로 관심있는 개인의 자발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모임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장호순(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연구원)씨는 참가이유에 대해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자결권을 침해당하고 있지만 서방국가들은 인도네시아의 경제력 때문에 동티모르의 인권에는 무관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다른 나라의 인권에 관심을 가짐으로서 국내 인권에도 관심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우리가 국제앰네스티등의 도움으로 국내 인권의 신장을 가져왔듯이 진 빚을 갚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역시 식민지 경험을 겪어 어려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은 동정의 차원이 아니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연락 : 859-0430

판결 요지(요약)

교통순찰 업무를 수행중이던 경찰관과 의경등은 다른 순찰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임하여 검문하던중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현저한 흔적이 있는 것을 추가로 인지하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을 그 운전차량에서 끌어내려 순찰차에 태워서 인근의 교통초소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면서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의경이 피고인을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주취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법원의 검증영장에 근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의 강제수사라고 할 것이며, 의경이 피고인을 끌고 가려는 것이 음주운전의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의도였다고 하여도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피의자를 구속영장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긴급구속하기 위하여 체포 또는 긴급구속 당시에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의 2, 제206조, 제209조, 제72조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의경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강제연행할 당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같이 가자고만 하였을 뿐,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구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의경의 강제연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10주년 심포지움 14일, 여성개발원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10주년을 맞이하여 정무장관 제 2실(정무장관 권영자)에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과 우리나라 여성정책"이란 주제로 기념심포지움을 14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가졌다. 발제자로 나온 김영정(대한적십자 부총재)씨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1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제도적 권리에 대한 교육, 조약 홍보 및 국가보고서와 그 심의결과 공표, 민간여성단체의 감시역할"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앞으로 과제

로 "여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회 구성원 의식의 변화와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극복, 여성의 정치참여와 공격적 진출의 확대, 여성들의 국제적 진출"등을 제기했다. 또한 김선옥(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씨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여성정책담당국가기구의 기능강화,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을 구체화한 특별법의 제정, 교육 정치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참여를 위한 할당제 도입, 여성의 법적 권리에 대한 교육, 조약 홍보 및 국가보고서와 그 심의결과 공표, 민간여성단체의 감시역할"등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궁금하십니까?

『<인권하루소식> 합본호』를 찾아보십시오.

94년 2월 5일(101호)부터 94년 7월 7일(200호)까지는 『<인권하루소식> 합본2호』로, 93년 8월 4일(준비1호)부터 94년 2월 4일(100호)까지는 『<인권하루소식> 합본1호』로 나와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호』에는 누구나 쉽게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있도록 주제별, 사건별 색인이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합본2호에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오재식 선생님의 '국제화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합본1호에는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소장의 '문민' 정권 1년의 인권이 머리글로 실려 불거리를 더해 줍니다.

합본2호 가격은 1만원!
 합본1호 2호를 함께 구입하실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지금 전화하십시오.
 바로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우편요금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기소하라

용모제한 채용차별로 피소된 회사를

여사원 모집 채용시 용모제한 고발 기소 촉구대회

여사원의 채용시 키와 몸무게, 용모등을 제한하는 44개 대기업을 남녀고용평등법 6조 위반으로 서울지방법청에 고발한 「여성민우회」, 「전교조」 등은 검찰이 피고발인을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15일 12시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서 「여사원 모집 채용시 용모제한 고발 기소 촉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여언, 전교조 등은 성명서에서 "검찰이 고발된 기업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녀고용평등법을 부정하여 우리 사회의 남녀고용평등 추구를 가로막게 되며 여성의 노동권리와 평등한 고용기회를 빼앗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을 인간이 이전에 여성으로 보는 시각, 여성의 품성 개성 능력보다는 기업주의 자의적인 선호를

채용시 기준으로 삼는 사회, 기업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만능주의가 검찰의 왜곡된 법해석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하며 검찰의 기소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하인호(인천여상)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기업이 내미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 학생들은 밥을 굶고 성형수술을 하며 악물복용까지 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직업능력 향상과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어야 하는 실업교육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단결로부터 접근권 확보 지방자치시대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이성재)는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란 주제로 심포지움을 15일 오후 3시 정립회관에서 장애우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었다.

발제자로 나온 김종영 교수(계명대 건축공학과)는 "접근권은 국가나 사회가 장애인에게 베푸는 특혜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시민들을 위해 마땅히 확보해 주어야 할 권리"라며 "현재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도시, 건축시설에서 부딪치는 물리적인 장벽과 사회의 편견 및 무관심, 법, 제도, 정책상의 불합리로 겪는 사회적 장벽등 이중적 고통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 편의시설실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제상의 미비점과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의 강제적 적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일본의 장애인 복지 모델도 시 만들기 운동을 예로 들며 "시민의 공감대 확보를 기초로 하여 상실화된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전문기구의 설치"를 주장했다. 장애인에게 법적으로 접근

권익이 필요하고 이것이 설사 주어저도 접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현실을 얘기하며 강경헌 교수(방송통신대 법학)는 가장 먼저 주장되어야 할 접근권으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권까지 안내하는 여건이 보장되는 '접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교수는 지방자치시대에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 "장애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역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적극성을 보여주는 일, 대의원을 선출시켜 입법을 추진하는 일, 참여를 위한 시민운동"을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나온 김선규(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씨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리환경을 극복해야 하고 이것은 사회행동으로 가능하다"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장애우에 대한 행동전략에서 "장애우들이 정부와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권리를 옹호할 단체를 구성해야 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기능들이 동일한 단체들끼리 상호협조하여 압력단체의 역할을 수행하자"고 제안하였다. 김씨는 "시민, 사회단체, 장애우단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의식수준을 같이 할 때만이 사회적 이기주의를 해소하고 진정한 복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적절한 역할 분담을 독려하고 시정에 참여하고 감시하는 압력단체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하루소식>이 숨이 찹니다

큼직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찹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구독료는 1만원~3만원 사이입니다).

계좌번호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발족

북한인권문제 관심 제고, 억류자 송환사업등 추진키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민간기구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총재 김연준)가 15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이영섭 전 대법원장,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등 관계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총회에서 △북한인권실상의 파악 △북한인권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정부의 대북한 인권활동 지원 등의 국내사업을 펼치고, 국제적으로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고취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며, 특히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동진호 선원등 북한 억류자 송환추진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관식, 김용식, 홍성철씨 등 전직 고위관리가 고문으로, 김양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조완규 전 교육부장관, 정치근 전 법무부장관 등이 운동본부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흥구 통일부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 인권개선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미흡하므로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운동본부가 출범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 "앞으로 북한의 인권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유엔 인권위원

라는 점에서는 주목받을만하다. 그러나 운동본부는 구성원의 면면에서 뿐만 아니라 발족과정에서도 정부쪽의 지원사실이 확인되어 운동본부의 운영방향은 상당정도 정부의 영향력의 범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락처 : 전화 776-4733 ~5, 팩스 776-9625

김인서·함세환·김영태 노인 송환노력 촉구 재일단체, 적십자사 통해 물품전달 하고 싶다

일본에 있는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들의 송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모임」(회장 최일수)는 지난 9일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씨등의 북한 송환을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냈다.

이들은 이 서한에서 "대한적십자사가 함 노인등의 유격대활동과 국제취득 문제를 구실로 송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전협정과 국제법원칙에 어긋난다"며 "함 노인등의 가능한 처지를 외면하고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은 숭고한 인도주의와 인간애라는 적십자단체의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함세환 노인등의 송환이 실현되기 전이라도 생활품 몰아치는

겨울에 함 노인들에게 솜이불, 동내의등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보내려 한다"고 밝히고, 대한적십자사가 "이런 도움의 손길이 함 노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같은 날 국내 인권단체에 보낸 서한에서 함씨등의 이북송환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인서 노인은 51년 지리산에서 체포, 3년에 걸쳐 총33년 7개월을 복역, 사회안전법 폐지후 89년 10월 청구보안감호소에서 출소했다. 함세환 노인은 53년 속리산에서 총상을 입고 체포. 73년 만기출소, 75년 비전향함 이유로 청구보안감호소에 재수감, 14년만인 89년 8월 출소했다. 김영태 노인은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가했다가 빨치산 활동중 54년 체포, 71년 만기출소, 그러나 75년 사회안전법으로 15년간 복역하고 89년 출소했다.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궁금하십니까? 『<인권하루소식> 합본호』를 찾아보십시오.

94년 2월 5일(101호)부터 94년 7월 7일(200호)까지는 「<인권하루소식> 합본2호」로, 93년 8월 4일(준비1호)부터 94년 2월 4일(100호)까지는 「<인권하루소식> 합본1호」로 나와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호』에는 누구나 쉽게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있도록 주제별, 사건별 색인이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합본2호에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오재식 선생님의 「국제화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합본1호에는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소장의 「문민」정권 1년의 인권이 머리글로 실려 불거리를 더해 줍니다.

합본2호 가격은 1만원!
합본1호·2호를 함께 구입하실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지금 전화하십시오.
바로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우편요금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 행사 안내 ◆

- 청소년단체 「샘」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주점
 - 일시 : 12월 18일(일) 낮 12시부터 밤 12시
 - 장소 : 박씨소주방(신림역 근처)
 - 주최 : 청소년 민중사랑의 통 큰 이정표 「샘」
- 공청회-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 제정방향
 - 일시 : 12월 19일(월) 오후 1시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제발표 : 정보공개법 제정 논의과정과 그 검토(강경근, 송실대 법학)/정보공개법안의 문제점과 대안(홍준형, 아주대 법학)/미국의 정보공개 사례(장호순, 언론학 박사)
 - 주최 : 경실련(741-7961~5)/참여연대(796-8364)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두밀분교 졸업생 중학교 진학 길 없나

두밀분교 6학년생 두어린이 중학배정서 반려, "법적 근거없다"

경기도 가평군상색국교에서 낸 두밀분교 6학년생 신은정(12)·신재호(13) 어린이의 중학배정원서가 가평교육청에 의해 반려되었다. 13일 상색국교 선생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학부모들은 15일 긴급회의를 갖고 16일 6학년 학부모를 포함한 두밀리 주민 5명은 가평군 교육청과 상색국교에 항의방문을 했다.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동현 가평군교육장은 "자신의 권한 밖인 일로 상급기관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한 남은 기간동안 등교하면 자신이 사정해서 입학할 허가해 주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에 주민들이 배정원서를 반려한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냐는 항의에 "법적 근거는 없다"고 대답했다. 원고대리인 이석태변호사는 가평군교육청의 이러한 조치가 폐교철회를 요구하

며 재판을 진행중인 주민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상색국교 교장이 배정원서를 냈다는 것 자체가 중학교 취학을 인정한 것이며, 며칠만이라고 학교에 나오면 졸업할 시켜주고 상급학교 진학도 노력하겠다는 상색국교 교장의 말은 모순된다고 전했다. 더욱이 며칠나와 수업을 받는 것이 수업결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당초 수업결손문제는 관계교육청에서 교사를 파견한다든지 조치를 취했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다. 교육법상 중학교입학자격(제103조)을 보면 '국민학교를 졸업한 자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변호사는 "두밀분교의 경우 폐교 뒤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마을회관에서 수업시간 엄

수, 특별활동등 충실히 수업을 받아온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입학자격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두밀리폐교문제를 위반한 것이며, 교육을 받았다는데 교육청이 거부한다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대표 왕종실씨는 "20일 재판이 끝난 뒤 등교여부등에 대해 재논의를 할 것이다. 정부가 배우겠다는 학생들을 거부하리라

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퍼는 회유책일 듯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활동을 벌여온 '두밀학교 살리기 연대모임'의 조혜영간사는 "마땅히 입학할 허가해 주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연대모임이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17일 두밀분교 마을회관에서는 17명 학생들을 위한 방학식을 할 예정이며 방학기간 중에는 교대생들을 중심으로 한 보충수업이 있을 계획이다. 한편 올초 2월28일 폐교된 뒤 현재 두밀분교 폐교철회 행정소송 및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번 주 단체탐방 습니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주요조항 발췌)

제1조 목적: 이법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가의 의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타에 우선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경비는 타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부지·교실·양호실 기타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구비
2. 교재·교구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에 대한 주택의 제공
6. 적절한 교원의 배치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교육의 특수사정에 적합한 학습지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의 연수기회의 우선부여와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급

<인권하루소식>이 숨이 참니다

끔찍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참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구독료는 1만원~3만원 사이입니다).

계좌번호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류은숙(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자주) 인권선언일 특집으로 기획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을 오늘부터 3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이 글이 인권 A규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예정보다 늦게 게재하게 된 점을 독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차가 폭 메인 답답한 거리에서 춤을 추는 겨울, 우리 삶의 기본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따뜻한 국물, 두툼한 외투, 적당한 난방이 이루어지는 학교와 직장과 집, 아프면 달려갈 수 있는 병원 등이 떠오른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들을 누리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누구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왜 그런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하는가가 당장에 차가운 바람만큼 매서운 논쟁의 대상이 된다.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 올해 초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월 6만5천원의 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던 노인부부가 그런 급여수준으로는 도저히 인간다운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하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활보호급여의 적정기준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내 일이 있었다. 이 헌법소원청구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의 재정사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실현도 국민이

국가에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추상적' 권리이고 그 내용은 물질적인 최저생활의 보장으로 충분하지 문화적인 최저생활까지의 보장은 아니다"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청구하를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확인된 것은,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한 생존권을 현실로서 청구할 수 없다는 프로그램규정설이나 추상적 권리설의 주장이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큰 목소리라는 것이었고, 따라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을 구제하는 구체적인 제도의 마련은 꿈같이 멀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ILO조약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진 노동기본권의 제한, 학교를 폐쇄당할 위기에 처한 두배산골의 아이들,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는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함 등 줄줄이 사탕처럼 쪼개져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국제화, 세계화의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은 지금,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으로 눈을 돌려 보는 것이 먼나라 얘기타령은 아니라고 본다. 국경을 넘어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이해가 무한 경쟁으로 몰아대는 국제화 속에서 하나의 무게중심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왜 소하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가입하였고 그에 대한 공적의무로서 작년 10월에 규약의 우리나라의 실시상황과 진전정도에

◆ 행사 안내 ◆

□청소년단체 「샘」,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주점
 ·일시: 12월 18일(일) 낮 12시부터 밤 12시
 ·장소: 박씨소주방(신림역 근처)
 ·주최: 청소년 민족사랑의 통 큰 이정표 「샘」

□공청회-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 제정방향
 ·일시: 12월 19일(월) 오후 1시30분
 ·장소: 경실련 강당
 ·주최: 정보공개법 제정 논의과정과 그 검토(강경근, 송실대 법학)/정보공개법안의 문제점과 대안(홍준형, 아주대 법학)/미국의 정보공개 사례(장호순, 언론학 박사)

·주최: 경실련(741-7961~5)/참여연대(796-8364)

정부보고서가 문제점을 은폐하고 장점을 부각시켰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1)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둘러싼 논의와 2) 그 실행을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 3) 규약하의 공적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된 정부보고서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보장의 문제점들을 앞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국진 모임 재판부에 엮서보내기 추진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에서는 16일 제10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할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엮서보내기 운동을 오는 1월까지 보내기로 했다. 또, 국회 법사위로 넘겨진 정부의 '유엔고문방지조약 가입동의안'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오는 2월에는 '유엔고문방지조약'에 대한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만남의 집'에서 추위에 떠는 정신대 할머니들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우리의 삶을 에이는 요즘, 정신대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해화동 「만남의 집」은 찾아주는 사람없이 썰렁한 기운만이 감돈다. 더구나 오래된 한옥 집의 난방시설이 고장나 대부분 천식이나 해수, 심장병등 지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들에게는 더욱 추운 겨울로 느껴진다. 온수도 나오지 않고 세탁기도 없어 찬물에 손을 담근 채 빨래를 해야한다고 한다. 요즘같은 날에는 전기장판으로 추위를 모면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손님들이 방문할 때나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 부녀복지과에서 매월 지급되는 15만원으로는 생활비는 물론 약값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10월 「국제법률가협회」에서는 생존해 있는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개인당4만불을 지급하라고 한 바 있다. 생존해 계신 정신대 할머니에게는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이 땅에서조차 외롭게 지내야 하는 현실이 그분들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지도 모르겠다. 그분들의 삶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현실로 되돌아보게 한다.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유죄판결 후 미성년자라서 죄 안됨 처리, 가혹행위 경관 소추촉구

부산에서 법원이 신체감 정등을 통해 고문사실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고문 방지조약 가입문제가 국회에서까지 논의되고 있는 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변협)가 충남 강경군 어린이 살해사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지난 16일 서재원 어린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유죄판결이 났으나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죄안됨으로 종결처리된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총장 앞으로 '강경

어린이 살해사건 재수사'를 촉구 하였다. 변협은 서한에서 "경찰수사과정에서 불법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강요, 진술내용의 논리성, 신빙성 결여, 수사기록상 살해방법, 사인과 사체부검 결과 및 부검의사의 의견상이, 어린 소년이 혀피로 목을 조를 당시 혀피가 끊어졌다는 상식상 납득할 수 없다는 점, 피의자들의 완벽한 알리바이 성립, 범행 후 피해자들의 정상적이고 태연한 태도등을 들어 어린

이들이 범인이 아님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수사를 통하여 진범을 밝혀내어 어린이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들을 수사하여 소추할 것을 촉구" 하였다. 변협은 또 같은 날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씨가

미결수임에도 기결수 감옥에서 24시간 수감을 채운 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의 가족(안소영)으로 부터 진정서를 접수하고 법무부 장관 앞으로 부당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김제완 담당 변호사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된 안재구씨는 공판과정에서 지난 11월 17일 검사의 사형구형 이후 교도소내에서도 24시간내 수감을 채우고 식사, 세면, 운동, 용변, 수면시간등에도 풀이주지 않으며 독

◆ 공 판 안 내 ◆

- 12월 20일(화)
 - 김용우(청소년단체 '샘', 국보법, 2시, 317호, 1단독, 속행
 - 서선원(전기협위원장),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시, 425호, 4단독, 속행
 - 김명환(지하철노조위원장), 노동쟁의조정법, 3시, 425호, 4단독, 속행
 - 이문옥, 공무상비밀누설, 2시, 418호, 항소4부, 속행
 - 김형욱, 반국가행위자처벌특별법, 11시, 418호, 항소4부, 속행
 - 정원권, 국보법, 10시, 317호, 1단독, 속행
 - 최인기, 국보법, 2시, 318호, 합의25부, 2회
 - 이정아, 국보법, 2시, 318호, 합의25부, 2회
 - 최창우, 국보법, 2시30분, 318호, 합의25부, 2회
- 12월 21일(수)
 - 이종린, 국보법, 10시, 311호, 합의21부, 4회
 - 최영록, 국보법, 2시, 311호, 합의21부, 2회
 - 안우준, 국보법, 2시, 321호, 6단독
 - 박현용, 국보법, 11시, 424호, 9단독, 속행
 - 박하국등 3명, 국보법, 10시, 425호, 합의22부, 속행
 - 권오창, 국보법, 2시, 425호, 합의22부, 3회
- 12월 22일(목)
 - 김병목, 국보법, 4시, 317호, 3단독, 속행
- 12월 23일(금)
 - 강재우, 국보법, 2시, 311호, 합의23부, 4회
 - 남수경, 국보법, 10시, 424호, 10단독, 속행
 - 고영국(청소년단체 '샘'), 국보법, 4시, 424호, 속행

<인권하루소식> 연말기획

<인권하루소식>이 독자의 의견을 물어 '94 인권 10대뉴스'와 '94 인권옹호자 및 인권침해자를 선정합니다.

한 해 동안의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되돌아 보면서 94년 인권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 사건 10가지를 선택하고 인권침해 및 인권옹호와 관련된 사건의 대표적 사람 3명의 이름을 적어서

12월 20일(화)까지 전화로 말씀해 주시거나 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전화 : 796-8364

팩스 : 796-8366, 793-4745

설문항목은 <인권하루소식>에 별첨합니다.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류은숙(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 새위원장에 정해숙 현 위원장 선출

69.9% 투표에 96.9% 지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전교조 제6대 위원장, 제7대 지부장 선거를 실시하여 정해숙, 이부영 선생을 위원장과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전교조는 복직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선거과정에서 "교육개혁을 위해 일선 현장교사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데 일치를 모았고 "전교조가 앞장서서 실천하자"는 결의를 모았다. 새로 당선된 정해숙 제 6대 위원장은 "전교조가 40만 교사들에게 깊숙히 뿌리 박으면서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전국 1만 4천여명의 조합원중 9천9백54명이 참여하여 69.9%의 투표율을 나타냈고 정해숙, 이부영 당선자는 9천6백31명의 찬성표를 얻어 96.9%의 지지율을 얻었으며 전국 15개 지부에서 인천을 제외한 14개 지부장이 새로 선출되었다.

최이교대책위, 진상규명 진정서 제출위해 상경

「최태호이교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재문등, 대책위)는 17일 안동 문화회관에서 '안동교도소 최태호 이교 의문사 진상규명 설명회 및 기자회견'을 통해 최태호이교 사망의 의문점과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대책위는 20일 서울로 상경하여 국회를 방문하고 최이교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면에서 이어집니다)

방에 분리수용되어 있고 독서는 물론 수용생활에도 큰 불편을 느끼고 있어 매우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변협은 "안재구씨는 미결수금 상태에서 기결수들을 수용하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서한에서 "헌법 제 27조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연합에서 채택하고 있는 피구금자의 처우, 보호 등에 관한 제 규칙, 원칙등 국제적 기준에도 현저히 맞지 않는다"고 밝히며 그릇된 행정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 교도소측은 "규정상 사형이 구형된 자등 중죄인에게 한하여 이와같이 특별처우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변협은 밝혔다.

월든 벨로 박사 초청 간담회

-한국경제의 전망과 WTO, APEC의 의미

- 일시 : 12월 20일(화)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제 : 한국경제의 전망과 WTO, APEC의 의미 (월든 벨로, WALDEN BELLO)
- 토론 : 김성훈(중앙대, 산업경제학)/이성섭(숭실대, 무역학)/김인철(성균관대, 경제학)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새누리신문

모든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나누어 말하는 것이 거의 습관적인 방식이 되었고, 유엔의 인권선언에서 표명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문헌상의 권리인지 아니면 '이상'이나 '열망하는 최종목표'인지는 항상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다. 일부 학자들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보편적이지도 않고(모든 인간이 아니라 노동자, 빈민, 장애인 등 특정범주의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법적이지도 않으며 시민·정치적 권리와는 논리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진정한 인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사회적 권리가 사법심판의 대상인가의 문제이다. 즉, 권리가 법에 의해 집행될 수 없다면 전혀 권리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위원장인 Alston교수는 "실체법학파에게 있어서는 공식적인 재판회부가가능성이 권리의 필수불가결한 속성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문헌상의 권리일 뿐인가?

법적 청구권의 개념은 그 청구권자가 법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보상과 연결된다. 그러나, 경제, 사회적 권리는 때로 이용할 수 없는 자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할 수 있고, 적절한 자원에 대한 문제는 사법적 판단보다는 행정적인 프로그램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경제·사회적 권리는 단지 불완전한 재판회부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리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심사가능성(judiciability)에 대한 이런 협의의 해석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있어 남지못할 장벽이 아니다. 즉, 이를 협소하게 재판과정에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재검토(review)과정의 문제, 시행(enforcement)과 성취(implementation)의 문제로 정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검토 과정에서 다루는 시행과 성취의 판단은 당사국과 국제적 영역 둘다에 존재하는 규범과 기준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사법심사가능성'의 관점보다는 '협의(consultation)'의 과정이, 특히 국제적 영역에서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보고절차와 그에 따른 정부보고서의 심의와 평가, 권고등으로 현실화되어 있다. 결국, 권리에 있어 '현재의 실현가능성'과 '충분한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구분하고자 하는 법률가들의 영향 때문에 권리는 현재 실현가능한 것이고 가능해야만 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된 것이다.

둘째,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간의 구별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자유권을 보호하는 데

**고문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훈련시키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적극적'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제도와의
관련이 있다.
어떤 경우에서건 고문으로부터 사람을 보
호하는 것이 국가의 상당한 적극적인 노
력을 필요로 하듯이 모든 인권은 국가편
에서의 적극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에는 거의 경제적 자원이 필요치 않다는 점이다. 즉, 정
부의 입법조치나 특정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 이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 사회적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는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한 부담이 정부에 주어지기 때
문에 이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보장하라는 요구의 근거
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 예를 들어보자. '고문으로부터의 보호'의 권리
는 전형적인 소극적 권리로서 발전되어왔다. 그것은 국
가가 개인적 자유와 신체적 보전에 대한 침해를 삼가하
는 것 이상의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훈련시키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주요한 '적극적' 프로그
램을 필요로 한다. 많은 나라에서 이것은 매우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서건 고문으로부터 사람을 보호
하는 것은 국가의 상당한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인권은 국가편에서의 적극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셋째, 또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소극적' 권리
는 '간섭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에, 간섭의 부재를 의미
하는 '자유와 자율성'의 주장은 능력이나 자원의 부재에
의한 제약과는 구별되며, '자원이거나 기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 예로, 시장의 결과는 사고 파는 것과 그밖의
모든 종류의 조건을 받아들인 개인적 결정에 의한 의도
되지 않고 예견되지 않은 결과이다. 그러므로 빈곤은 의
도적 행위에 의한 결과도 아니고 자유의 제한도 아니다.
빈곤이 부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
해 빈곤을 제거하려는 것은 국가의 강제적 행위를 필요
로 할 뿐이고 이는 자유에 대한 의도적 강제일 뿐이라
는 주장이다.

그러나, 간섭 또는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행위능력을 실
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부라고 보는 소극적 권리의
주장은 권리해석에 있어 많은 한계가 있다. 자유가 단지
의도적 강제로부터의 자유일 뿐이라면 그런 자유의 가
치는 무엇이고, 도대체 왜 자유롭기를 원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강제'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어
야만 한다는 점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능력
(ability)에 대한 사고가 자유의 가치를 정당화한다.

개인에게 있어 자유의 가치에 관심이 있다면, 그 자유
로 인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에도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자원'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효과적인
동력으로써의 자유, 자원에 대한 권리를 필요로 하는 자

유의 가치만이 각 개인에게 평등한 자유의 가치를 보장
할 수 있다.

또한, 시민·정치적 권리가 소극적 권리라고 해서 그것
이 우선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시민·정치적 권리의 침
해는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지만,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침해는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부작위'는 '작위'로써 손상을 가한 것만큼 중대한 권리침
해이며 거기에는 어떤 도덕적 차이도 없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권리' 이론가들은 인간의 삶에는 인식가능한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특징이 있으며, '보편성'과 '도덕적 타당성'
이 두개의 주요한 기준이라고 본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합리적인 행위를 할 능력과 도덕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
문에 행위의무는 단순히 '권리행사의 보류' 또는 '부작위'
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부작위에 대해서도 인과
적인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원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동의 죽음이 방지되었다면, 그 아동이 어떠한 계
약의 권리도 가지지 못했지만, 인간은 인과적으로 부작
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적극적 권리를 주장하는 이론가
들은 이를 준계약적(quasi-contractual) 관계라고 본
다. 왜냐하면 합리적 행위에 대한 능력과 도덕성을 공유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명백한 계약을 넘어서서 '행
위'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 적극적 권리가 소극적 권
리보다 자원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리실현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자원에 대한 판단과 선택도 인간의
이런 보편적 '가치'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인권은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 속에서 이해
되어야 하며 인권의 범주를 이분법으로 나누어 경제, 사
회, 문화적 권리를 이차적이고 점진적이고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볼 이유는 없다. '휴식, 여가, 합리적인 노동시간
의 제한, 급여를 지급받는 정기적인 휴가'에 대한 권리는
충분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고 이에 대한 부정성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부정으로, 19세기의 통제되지 않는
자본주의의 가장 억압적인 특징들로 나타난 바 있다. 노
동에 대한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만큼 중요하며,
장기간 강제된 실업의 심리적, 육체적, 도덕적 영향은 언
론이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정만큼이나 혹독할 것이
다.

예컨대 노동자들이 자신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곳에서야 자원과 수입의 공정한 분배나 빈
곤으로부터 해방될 경제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이 사회권보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
며, 독재치하에서 기초된 경제발전체제가 국민참여의 배
재, 즉 시민·정치적 권리의 억압과 동시에 사회권의
보장을 위협하는 요소임을 나타내는 예를 우리나라의
상황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인권의 국제체제
속에서 권리의 '전체성(totality)'속에 수용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기본적 권리의 내용들이며, 이는 최근의 국제
적 논의 속에서 재차 확인되고 있다. 즉, "인권에 관한
아·태 지역 비정부조직선언(1993.3.27, 방콕)", "아시아
국가대표들의 방콕선언(1993.4.2, 방콕)",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1993.6.25)"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바
는 '인권에 관한 종합적이고 통합된 접근의 요구'이며,
'경제·사회·문화적·시민 및 정치적 권리들의 상호의
존성과 불가분성 그리고 모든 범주의 인권들이 동등하
게 강조될 것의 재확인'이다.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한국검찰, '공무를 벗어난 행동' 미8군, '정당한 공무집행'

미8군 설은주씨등 세모녀 폭행사건

한국검찰 미군병사 소환조사에 미8군 불응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미군 헌병대의 설은주(30)
씨등 세모녀에 대한 폭행
및 감금조사 사실에 대해
미8군이 정당한 공무집행
이었다며 우리나라 검찰의
가해미군에 대한 소환조사
에 응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
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
우섭, 미군범죄근절 운동본
부)에 따르면 미8군은 "헌
병들이 수감을 채우고 감
금, 조사한 것은 정당한 권

리행사'이며, "오히려 세모
녀가 공무집행을 방해했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의 한
미행정형정 담당인 김영철
검사는 공무집행이라는 미
군의 주장에 대해 공무를
벗어난 행동이라는 반박서
를 제출하고 가해자인 미8
군 헌병대 그림 중사, 휴스
턴 하사등 4명을 소환조사
하려고 했으나 미군측이
응하지 않아 사건발생 두
달이 되도록 기초조사도

못하고 있다.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미군의 상
식밖의 행동은 미군이 우
리나라 국민에 대해 가지
고 있는 뿌리깊은 우월감
이 나타난 것"이라며 "한
미행정형정 제2조의 미군
시설과 구역안에서의 미군
의 경찰권 행사 조항, 제22

조의 재판관할권 조항 등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설씨등은 지난 10월 25일
밤 9시 40분경 한남동 한
남빌리지 앞에서 미군헌병
에게 '미제품품판매상'으로
오인받아 수감이 채워진채
로 미8군사령부 헌병대로
연행되어 설씨의 어머니
김금순(68)씨는 거절하고,
설은주씨는 2시간 후 한국
경찰에 인도하고, 설은하
(40)씨는 5시간을 조사받았
다.

설은주씨는 사건 다음날
용산경찰서 의사에게 미헌
병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
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2면).

불교인권위 총회, 공동대표 선출·시형제지위위원회 신설

불교인권위원회가 한상범
동국대 교수, 진관 스님을
공동대표로, 지원(부산 문
수암 주지) 스님을 운영위
원장으로 새로 선출했다.
불교인권위는 19일 총회
를 열어 사형제도 폐지위원
회(위원장 목탁), 노동위원
회(위원장 서동석), 통일위
원회(위원장 진관)등을 신
설하고, 양심수 대책위(위
원장 각명), 여성분과(위원
장 혜문), 언론분과(위원
장 박강희), 국제분과(위원
장 이강렬), 대외협력(위원
장 박준호) 등의 분과는 그
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불교인권위는 또 법성스

님, 유선호 변호사등 24명
을 인권위원으로 선임했다.
불교인권위는 90년 11월
22일 창립, 사회의 민주화
와 불자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왔고,
장기수, 양심수 돕기운동,
교도소에 경전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해왔다.
한편 불교인권위는 이날
"통일원 장관으로 있으면서
조문 파동을 해결하지 못하
고 주사파 논쟁으로 민족문
제에 대한 위기감을 조장한
정권에 적극 협력한 장본인
을 총리로 임명한데 대해
실망한다"는 성명을 발표했
다. 전화 : 745-1852

<인권하루소식> 연말기획

<인권하루소식>이 독자의 의견을 물어
'94 인권 10대뉴스와 '94 인권옹호자 및 인권
침해자를 선정합니다.

한 해 동안의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되돌아 보면
94년 인권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 사건 10
가지를 선택하고
인권침해 및 인권옹호와 관련된 사건의 대표적 사
람 3명의 이름을 적어서

12월 21일(수) 오후 3시까지 전화로 말씀해 주
시기나 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전화 : 796-8364
팩스 : 796-8366, 793-4745

설문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십시오.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이
독자 여러분을 송년의 밤 행사에 초대합니다.
·일시: 12월 29일(목) 오후 7시 / 장소: 참여연대 회의실
송년의 밤 행사에 참가하실 분은 미리 연락을 바랍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3)

류은숙(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세계인권선언의 22~28조에서 열거된, 일정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향유는 유엔전문기구와 여타 국제조직에 의해 채택된 국제조약에서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규약'을 통해 정교화되었다. 그러나, 이들 권리의 향유는 단순히 기존법의 실행이나 새로운 법안의 통과를 통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이하 규약)은 '제도질차'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규약 16조에 의거하여 규약체결국이 그러한 권리의 실행을 성취하기 위해 채택한 수단과 그 진전정도에 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약의 실행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는 경제사회이사회가 인권이사회를 모델로 해서 1985년에 설립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다. 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회기내 활동그룹(sessio-nal Working Group)이 심사를 했으나, 그 활동의 비효율성이 계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규약의 충분한 실행을 위한 활동강화를 위해 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다. 위원회는 설립이후 87년과 88년의 1, 2차 연례회기를 통해 1백24개국의 1차보고서와 44개국의 2차보고서를 심사한 바 있으며, 규약의 규정들을 명확화하는 연구작업과 정부보고서의 심사, 그를 통한 권고를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위해 관련유엔전문기구(ILO, WHO, UNESCO, FAO)와 민간단체(NGO)의 협력을 받는다.

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 또 하나의 국제사회의 노력은 86년의 림버그원칙(Limburg Principles)과 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제기된 원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림버그원칙은 국제사법위원회 등에 의해 소집된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와 유엔인권센터, 국제노동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보건기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구성원이 86년 6월 네덜란드의 Maastricht에 모여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의 해석원칙, 권리의 침해로 인정되는 행위, 보고서의 준비와 제출에 관한 것,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와 전문기구, 여타 국제조직간의 관계설정에 관해 합의한 원칙이다. 이속에서 제시된 원칙들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의 추상성과 자의적 해석을 극복하고 규약체결국의 보고의무를 구체화시켰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림버그 원칙의 몇가지 조항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나눌 수 없고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규약의 실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리의 실행, 개선, 보호를 위해 똑같은 관심과 즉각적인 고려가 있어야만 한다(3항)", "입법화만으로는 규약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치 않다. 규약체결국은 적합한 사법적 구제책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해야만 한다(18,19항)",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한 존중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25항)".

둘째, 1993년 세계인권회의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효과적 실행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회의에서 채택한 문헌들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내걸었던 목표에는 못미치는 것이었다는 평가가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제기하는 배경이 되었다.

1)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실행하겠다는 막연한 언급이 즉각적으로 모든 수준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나 교육의 부족등이 문제제기되어야 한다. 2) 규약에 대한 보편적인

비준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3) 유엔인권센터내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4) 규약체결국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옹호되고 주장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5)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어야 한다. 6) 현재, 유엔차원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활약하는 민간조직조차도 권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 이상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권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시정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7) 규약체결국은 '보고'의 자국내 중요성과 효과성의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8) 위원회가 심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9) 규약체결국이 그들의 보

고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적합한 유인요소가 있어야 한다. 10)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영역에서 세워진 훈련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원칙들은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과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규약의 내용조차 잘 알려지지 있지 않으며, 따라서 위와같은 원칙들에 대한 소개나 이해하려는 노력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다음에서 살펴 볼 규약하의 보고의무에 따라 제출된 정부보고서의 시각과 내용속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미 헌병대의 한국인 연행, 감금 사례

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은 질서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영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한국인을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미군당국의 '체포'는 단순한 신병확보만을 의미할 뿐 구금해서 조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 폭행을 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다는 것은 공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실제 세모나가 미헌병의 오해(미제판매상)로부터 비롯되어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연행, 구금한 것은 한미행정협정위반에 해당된다.

올 1월 미8군사령부에서 아리랑택시 기사 정양환(47)씨를 수갑을 채워 구금한 것을 비롯, 3월 동두천에서 아리랑택시 기사 김지호(29)씨가 미헌병대에 강제연행되는 등 유사한 사건이 94년에만 4~5건에 이르렀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군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미군병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미군이라는 공적기구에 의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자의적인 정보공개 제한 가능성도 있어

국민이 공공기관에 보장된 무궁무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총무처는 21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국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시안은 누구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및 공공기관이 보관중인 문서와 전자자료등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등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정보에 식견이 풍부한 민간인이나 3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 경력자중에서 임명. 위촉토록 했다.

또 시안은 △국가안보나 외교상 이익 △개인생활 보호 △법인과 기업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등 9개 항목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거부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 △여기서도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정보공개위에 심사청구 △이것마저 기각될 경우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실련, 참여연대등은 지난 18일 정보공개법 제정방향을 관한 공청회에서 거쳐 확정된 총무처 시안의 문제점으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대부분 위임하고 있으며 비공개사유를 여덟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나 불확

정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지나치게 많아 정보공개 거부의 빌미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공청회에서는 또 비공개결정에 구제를 담당할 정보공개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조작혐의 장기수 면회 천주교 조작간첩 대책위

「천주교조작간첩진상규명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등 5명, 조작간첩대책위) 소속 이계창 신부, 최이래네 수녀, 오창래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문한성, 이석범 변호사는 지난 19일 일본관련 조작간첩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대전교도소를 방문하여 강희철, 최선용, 이현치씨등 장기수 7명을 만났다.

조작간첩대책위는 "7년이상 수감되어 있는 장기수 복역수중에서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의 장기수를 만나 신상, 인적사항, 사건경위등의 조사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번 방문목적을 밝혔다.

그러나 방문과정에서 문한성, 이석범 변호사가 장기수를 만나기 위해 변호

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대전 교도소의 보안과장은 "이들 장기수는 재심의 의지가 없고 형이 확정된 기결수"라고 말하며 4시간정도 접견을 거부하였다. 재차 요구하자 결국 장기수들의 무인을 받아서 접견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노동부, 여성근로자 50세 넘어도 유급생리휴가 인정

50세이상의 여성근로자라 하더라도 연령에 관계없이 유급 생리휴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21일 금속제조업체인 한 회사가 "사실상 폐경기에 있다고 판단되는 50대 여성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유급 생리휴가 인정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회

시했다. 이 회사는 질의에서 "일부 여성근로자들이 생리주기와 무관하게 생리휴가를 사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폐경되었다고 판단되는 58세된 여성근로자까지 매달 생리휴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59조 생리휴가 관련조항에 연령등 제한조건이 없기 때문에 고령의 여성이라 하더라도 유급 생리휴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이 독자 여러분을 중년의 밤 행사에 초대합니다.

·일시:12월 29일(목) 오후 7시 / 장소:참여연대 회의실
·중년의 밤 행사에 참가하실 분은 미리 연락 바랍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류은숙(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정부최초보고서의 제출은 국제규약을 수용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정부의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는 위원회가 제시한 보고서 작성과 제출의 원칙에 비춰볼 때, 규약이 정한 정부의 보고의무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규약의 조항과 관련된 한국의 법조문을 나열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 구체적 실시 상황과는 유리된 추상적 설명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판례나 실제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규약의 의무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어려움에 관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보고서 “직업선택 및 고용조건상 차별 대우 금지”에 관한 조항은 헌법 15조, 근로기준법 5조, 남녀고용평등법의 문구를 인용하는데서 그치고 있고 보고서 전반은 이런 방식의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시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 구체적 절차와 계획보다는 “.....한 풍토를 조성할 것이다”는 막연한 기술에 그치고 있다.

이는 “규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용된 법적 조치를 보고하는 데 있어서, 당사국은 단순히 관련 법조문을 기술해서는 안된다. 보고는 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채택한 사법적 구제절차와 행정적 절차를 적절하게 구체화시켜야만 한다”는 보고서 제출 원칙과는 동떨어져 있다.

둘째, 정부보고서는 ‘경제적 성취와 정치적 상황변화’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현재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식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성숙하고 민주적인 국가”, “민주화 개혁이 완성단계에 와 있다”는 등의 ‘주장’이 실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통계가 있어야 하는 데 문제는 정부통계의 한계성에도 있다.

“제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 수준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고서에는 예산할당과 지출에 관한 통계와 정보가 제시되어야만 한다. 정부는 가능한 한 분명하게 정의된 목표와 경제지표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한 목표와 경제지표는 적절성과 통계의 비교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국제협력을 통해 성립된 기준에 기초해야만 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정부가 제시하는 통계들은 경제성장률과 정부가 취한 조치들의 성과와 그와 관련된 부문의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계층의 상황과 개선정도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가 누락됨으로써 그것이 적절한 수준인지 개선된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한다. 또한 국제수준과 비교하거나 비교가능한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다.

셋째, 가장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보고서 작성과 제출과정의 철저한 비공개이다. 정부는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에게 보고서의 준비와

제출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더욱이, 정부는 민간단체들이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또는 유엔에서 공식화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94년 6월 16일까지 정부보고서의 복사본을 제공하기를 거절했다.

또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포괄성과 방대함으로 해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들의 논의와 조인이 필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과 부처의 입장과 통계만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한계는 분명할 수 밖에 없다.

“국가는 보고의무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과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공적 토론의 기회로 봐야한다”, “관련 민간단체와 국내기구와의 협의 등 충분한 국내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고 “민간단체가 협의 자격으로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규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충분하고 보편적인 인식과 실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권고에 비춰볼 때 민간단체보고서 작성에 대한

철저한 비협조는 비난을 면치 못할 수 밖에 없다.

실질적인 권리보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첫째, 정부보고서는 국제적 노동기준과 배치되는 국내의 제한규정에 대하여 그 개선책을 언급하는 대신에 오히려 제한의 타당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ILO 조약과 배치되는 규정은 ①노동조합가입권에 대한 규정 ②노동조합의 활동제한 규정 ③노동쟁의의 금지에 관한 규정들로서 이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제8조, 노동기본권의 보장에 있어 심각한 제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동권의 제한조항과 그 타당성을 상세히 설명한 것에 반해 최저임금제 등 각종 제도의 적용에서 누락된 계층과 그 개선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둘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의 사회보장의 권리 규정에서 나타나는 원칙은 ①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의 원칙 ②가족생활의 충분한 보장을 위한 가족부양수준의 원칙 ③최저수준의 보장만이 아니라 가능한 수준의 최대의 보장을 지향하는 원칙 ④규약 체결국의 의무로서 표현되어 있는 국가책임성의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보고내용은 위의 원칙에 비추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보면 ① 사회보장제도를 도구적으로 이용하여 선별적으로 전략적 대상에 적용해왔기 때문에 보호가 가장 필요한 계층을 그 적용대상에서 소외시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으며, ②각 계층의 급여수준이 “가족생활의 풍부한 보장을 위한 가족부양수준의 원칙”을 충족시키기에 적절치 못하며, ③ 사회복지기반의 취약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걸맞는 “가능한 수준의 최대한의 보장”을 지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최저수준의 보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④국가의 사회보장 재정지출수준이 극히 낮아 “국가책임성”을 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정부최초보고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인권 간행물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제3차 보고서-정무장관(제2)실

· 주요내용: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제3차 보고서 서문 및 조문별 이행내용(국·영문)/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전문(국·영문) (총252쪽)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우리나라 여성정책-정무장관(제2)실

· 주요내용:주제강연-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우리나라 여성정책(김영정)/발제1-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법적 의의와 정책적 과제(김선옥)/발제2-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특별보고-제4차 세계여성회의 준비상황(입법, 사법, 행정)/특별보고-제4차 세계여성회의 준비상황, 95년 NGO 준비상황등 (총76쪽)

□공청회 자료집-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참여연대·경실련(☎741-7961)

· 주요내용:정보공개법 제정논의과정과 그 검토(강경근)/정보공개법 시안의 문제점과 대안(홍준형)/미국의 정보공개제도(장호순)/자료-정보공개운영에 의한 청구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총52쪽)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주요내용: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접근권의 실현방안과 전망(김종영)/법률적 의미로 본 장애인 접근권(강경선)등 (총95쪽)

□심포지움 자료집: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서울지반변호사회(☎522-9811)

· 주요내용: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김선수) (총44쪽)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소식(통권38호)-민가협 양심수후원회(☎763-2606)

· 주요내용:양심수 가족을 찾아서-전기협 서선원의장 부인 문정숙님(편집부)/감옥으로 온 편지-신인영(대진교도소 28년제 수감중)/만나보고 싶었습니다-윤석양님(편집부)/장기수 선생님을 찾아서- 안희숙선생님(편집부)등 (총24쪽)

□세미나 자료집:아동학대예방 대책방안-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776-5660)

· 주요내용:아동학대의 현황 및 대책(이영희)/아동학대의 범위(안동현)/아보호서비스의 도입에 관한 연구(윤혜미)/아동학대 방지법 시안에 관한 연구(총106쪽)

□평화의 일꾼-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장기수가족후원회(☎719-2172)

· 주요내용:밖에서 밖으로-철장을 넘나드는 사연/인물 탐구<임방규선생님>(편집부)/산행기등(총12쪽)

□국제엠네스티11월호-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053-426-2533)

· 주요내용:논설-특집1-한국조사단, 16일간의 한국방문/특집2-프랑수, 범집행공무원에 의한 총기발사, 살인, 가혹행위/국가별캠페인-인도네시아-동티모르 캠페인/주제별캠페인-‘실종’과 정치적 살인에 대한 캠페인/사형제도 폐지-투르크공화국의 사형제도/인권교육-작은 인간, 어린이/남북한에 대한 국제엠네스티의 관심-남·북한(20쪽)

석시킨 반면, 국가의 재정책임은 없으면서 관리운영체계를 장악하고 운영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을 노출시켜 사회구성원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는 ‘권리’와 ‘존중’, ‘참여’로서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국제인권규약에의 가입과 그에 따른 공적의무로서의 보고서제출이 단순히 절차에 따른 정부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행위에 그치고 있으며, 인류보편의 인권에 대한 이해나 우리나라의 인권보장 상황에 대한 국내의 논의와 비판을 수용하려는 노력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 대한 홍보와 국제법상의 의무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의미하며, 사회권 보장 제도의 빈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1)권리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체계적인 대응양식을 보인 반면 사회권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권의 주장을 아직도 사회통합의 요소로서 보다는 경제발전의 저해요소로, 또한 점진적인 프로그램과 국가시혜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입장을 용납하고 방치하는 것이다. 경제발전이 사회권보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독재치하에서 기초된 경제발전체제가 국민참여의 배제, 즉 시민·정치적 권리의 억압임과 동시에 사회권의 보장을 위협하는 요소임이 이 글의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모두가 인

권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

정부의 의무강화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권의 범주 속에서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인권규약을 비준했다는 사실과 장점만 부각시킨 보고서의 형식적 제출만으로는 규약의 이념과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분명하다. 정부는 관련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주요인권조약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보고서의 준비와 제출과정이 광범위한 공적토론의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와 논평을 국내의 사회권보장의 개선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가깝게는 95년 5월에 있을 위원회의 보고서 심사에 대하여 국내의 사전토론을 거쳐 객관적이고 충실한 답변의 의무를 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민간단체활동에 대한 배척에서 벗어나 그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

3)민간단체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 정부최초보고서에 대하여 관련 민간단체들이 신속하게 연대하여 반박보고서로 대응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반박보고서의 내용에 충실을 기하고, 그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전문가의 참여를 비롯하여 더 넓은 분야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현재 시민, 정치적 권리에 집중하고 있는 많은 인권관련단체들이 사회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심을 가질것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상황에서 기본적인 권리와 주요인권규약에 대한 ‘교육’을 현실적으로 개발하여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민간단체의 활동에 있다.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부산변호사회, 국교생활해 고문경찰 고발기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강요' 공증한 증언 공개

부산지방 변호사회는 21일 부산 만덕국교생활 강주연(9) 어린이 유괴살인 사건을 수사한 부산 북부경찰서가 피고인 및 참고인들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통해 불공정 수사를 했다고 판단, 수사 경찰관 12~14명을 부산지검에 고발기로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변호사회관에서 지난 1개월간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오늘(23일) 인권위원회(위원장 조순내)를 소집,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계 강력 2반장 김모 경위 등 고문수사를 한 것으로 조사된 경찰관에 대해 형법 제1백25조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결의할 방침이다. 또 고발날짜와 고발경찰관의 범위등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문재인)는 "경찰관들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에게까지도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조아무개(27)씨등 증인 3명의 공증기록을 공개했다

또 진상조사소위는 부산 북부경찰서는 원종성(23)

옥영민피고인(26) 등에 대해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구타를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으며 피고인에 유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폭행 및 욕설을 하면서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모두 13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강화여성의 전화 개소

강화지역 각계 여성대표 40명은 20일 「강화여성의 전화」(회장 황성희)를 만들어 강화지역의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황 회장은 "군사지역이라는 특수성과 가부장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농어촌지역에서 여성들이 겪는 성폭력과 같은 인권침해를 추방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고 밝혔다. 강화여성의 전화는 상담요원 18명이 순번제로 3명씩 상근하며 가정내 폭력, 성폭력, 법률상담등의 활동을 벌인다. 강화여성의 전화는 군 단위로 전국에 처음 설치된 것으로 중소단위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의 인권침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화지역은 강간 10건, 성추행 3건, 간통 7건, 기타 2건의 폭력범죄(강화경찰서 93년 통계)가 발생했다고 한다. 여성의 전화측은 실제로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숫자를 감안하여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화 0349-934-1900/2.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의처분 취소청구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는 지난 5일 관악구 가정복지과에 이기남(66)씨가 노령수당 1만5천원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통해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제2차 소송의 단계로 오늘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관악구청에 접수시킨다. 또한 같은날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의처분 취소청구소장을 서울고법에 접수시킨 예정이다.

원고 이씨는 지난 5일 관악구 가정복지과에 노령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8일자로 구청으로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94년 보건사회부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노령수당은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요지의 거부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기식 기획부장은 "행정관청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의거한 노인복지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7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하며 "이 결정은 위법이며 무효"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제1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중 소득수준 등을 참작하여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교생 의식화교육협의국보법위반 구속

강릉경찰서는 21일 황관중씨(31)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황씨의 혐의는 지난 88년 강릉, 명주 민주청년회를 결성, 총무로 활동하며 강릉지역 고교생 5명에게 91년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릉시옥천동 청년회사무실에서 매주 일요일 4시간씩 「사람과 세계」, 「들어 킬 예정이다」 등을 교재로 주체사상및 북한의 우월성을 찬양, 고무하고 계급투쟁과 김일성주석의 항일투쟁의 당위성을 교육한 혐의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황씨가 교육시켰다는 H모군과 J모군으로부터 「사람과 세계」등 7권의 책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세모녀 미군폭행사건 범인 인도 요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최근 미군이 세모녀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미군당국이 한국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때에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의 6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서는 23일 세모녀를 폭행한 미군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성명서에서 "미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처사이며 불평등한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의해서도 불법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민족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송환할 것 △ 주권침해에 대한 공개사과 △ 진상 규명과 미군 가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은 질서유지를 위해 미군영내에서 한국인 간인에 대한 체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신병

확보의 의미이지 한국민간인에 대해 수갑을 채우고 폭행이후 5시간동안 강제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때에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의 6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서는 23일 세모녀를 폭행한 미군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미군당국은 한국 민간인에 대해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것을 미군헌병들에게 지침으로 하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례는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만 해도 지난 1월 서울 용산 미군사령부 영내에서 아리랑 택시 기사 정양환(47)씨가 미군헌병의 허위신고로 인해 미군헌병대에 수갑을 채이고 폭행, 감금, 조사를 받았으며 2월에는 동두천시에서 아리랑택시 기사 김지호(27)씨가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

해인원 비리폭로 노조위원장 구속

장애인의 재활시설인 해인원(이사장 서정희)의 비리를 담은 문서를 언론에 폭로했던 해인원노조위원장 정광용씨가 지난 12월 9일 문서절도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씨는 작년 7월 해인원의 친권포기각서, 기부금 불법유용사실, 국가보조금 유용사실등을 입증하는 문서를 언론에 제보한 것을 해인원에서 문서절도 혐의로 고소, 14일 구속되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이다. 해인원의 비리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감동기판인 경기도 광주군청의 감사결과 미온적인 조치로 끝났다. 이에 정씨는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비리를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 지양환(47)씨가 미군헌병의 허위신고로 인해 미군헌병대에 수갑을 채이고 폭행, 감금, 조사를 받았으며 2월에는 동두천시에서 아리랑택시 기사 김지호(27)씨가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

해인원은 이 과정에서 노조설립신고서 접수를 위해 2회에 걸쳐 자리를 비운 것을 근무지 무단이탈로 간주, 지난 10월29일 정 위원장을 해고시켰다.

해인원은 노조설립후 노조원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노조사무장을 맡고 있는 보육사 박미애씨가 담당하는 방에 1급장애자 7명을 배치하여 스스로 지쳐서 사임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보육사 1인당 담당하는 장애인은 1급장애자의 경우 5명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전혜투등은 정씨의 문서절도혐의 구속이 노조 탄압책으로 규정하고 정위원장의 석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샘'사건 재판 증인 불참으로 연기

고등학생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샘'사건의 고영국씨의 6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10단독(판사 홍경호)심리로 열렸다. 지난 재판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측 증인인 정민아씨가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아 다시 연기가 되었다.

고씨의 변호사는 "정씨가 다음 재판까지 출두하지 않을 때에는 자술서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영국씨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월13일 2시이다.

<인권하루소식>이 숨이 찹니다

큼직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찹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구독료는 1만원~3만원 사이입니다).

계좌번호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이

독자 여러분을 송년의 밤 행사에 초대합니다.

·일시:12월 29일(목) 오후 7시 / ·장소:참여연대 회의 송년의 밤 행사에 참가하실 분은 미리 연락 바랍니다.

● 국제 인권 소식 ●

국제앰네스티 유정식씨 검진 요구

국제앰네스티는 자신들이 양심수로 선정된 유정식(55세)씨에게 검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유씨는) 귀에 이상이 있고, 정서불안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유씨가 지난 75년 간첩죄로 체포되어 한달 동안 의무와 차단된 채 고문을 당한 이래 지금까지 의료치료를 받은 적이 거의 없다"며 한국정부에 "유씨를 지체없이 전문의에게 검진과 치료를 받게 할 것을 호소"하고 아울러 그의 석방을 요구했다.

유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75년 3월 체포되어 무기형을 선고받아 19년째 복역중이며 현재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이다.

필리핀에서 아태지역 인권과 개발에 관한 사회활동가 회의 개최 예정

아태지역 인권과 개발에 관한 사회활동가 회의(Asia-Pacific Social Workers' Consultation o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가 호세 아얄라 라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등이 참가한 가운데 내년 1월 24-27일 필리핀에서 열린다.

필리핀 인권운동연합(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등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1백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인권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사업 활동을 인권과 연결시켜 인권과 사회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여성회의 인도에서 열려, 내년 1월

'개발과 관련된 여성에 대한 범죄'에 관한 아태지역 공청회가 '아시아 여성 인권 회의(Asian Women Human Rights Council, AWHRC)' 주최로 열린다. 공청회는 내년 1월28일 인도 방갈로(Bangalore) 과 학협회 타타(J.N. TaTa) 강당에서 열리며 여성회생자들이 직접 참석, 발표도 한다.

연락처 : 사무국 P.O. Box 190, 1099 Manila, Philippines
Tel:632-9215571
Fax:632-999-437

<인권하루소식>은 12월 27일(화)자로 올해 발간을 마감합니다. 오늘 단체탐방은 습니다.

고교 재학생, 졸업생 송년행사 준비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으로 바쁜 가운데 성동여실 졸업생들의 모임 '희망', 9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샘'등이 공동으로 송년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28일 가질 송년행사에는 다큐멘터리 '우리들의 삶,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실업계 출신여직원 채용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160cm 50kg 용모제한문제, 공업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현장실습 '2+1'제도, 성수대교 참사가 빛은 무학여고 학생들의 죽음, 그리고 생사건이 다뤄진다. 또한 고교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한해 10대 뉴스를 뽑아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 송년행사는 3년전부터 매년 가져온 것이다.

연말연시에 감옥에 있는 분들에게 정성을 보냅니다 장기복역 양심수에게 연하장을!

광주고도소 (500-110) 광주시 북구 문흥동 88
김용태(36세,10년) 1997년 이상철(45세,12년) 2473년
이재룡(51세,25년) 5059년 김동기(63세,29년) 5042년
양희철(61세,32년) 5029년 이경찬(60세,30년) 5047년
이공순(61세,28년) 5041년 함주명(65세,12년) 5012년

대구고도소 (711-830) 경북 달성군 헤원면 천내동 472
박동운(50세,14년) 3111년 안승운(63세,13년) 3151년
박수관(51세,12년) 3245년 김장호(54세,12년) 3122년
서경윤(55세,11년) 3185년 신상봉(69세,10년) 3199년
김철(64세, 6년) 3158년 양동화(37세,10년) 3265년
김성만(39세,10년) 3180년 김정목(60세,13년) 3119년
정영(54세,12년) 3236년 박찬우(35세,11년) 3205년
손성모(65세,14년) 3299년 오형식(65세,26년) 3100년
홍명기(66세,33년) 3125년 황대권(40세,10년) 3164년

대전고도소(305-251)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36
김태룡(47세,16년) 3565년 나중인(57세,10년) 3653년
김태홍(39세,14년) 3801년 이원치(43세,14년) 3638년
서순택(65세, 6년) 3635년 유재선(63세,12년) 3573년
김익현(32세, 5년) 3855년 최선용(53세, 9년) 3599년
유종안(63세,10년) 3897년 김윤수(56세,10년) 3637년
강희철(36세, 9년) 3502년 김선명(70세,44년) 3597년
안학섭(65세,42년) 3536년 김은환(65세,26년) 3640년
김익진(65세,26년) 3574년 김인수(72세,33년) 3618년
박왕규(65세,28년) 3624년 신인영(65세,28년) 3556년
안영기(65세,33년) 3530년 양정호(64세,26년) 3630년
우용갑(66세,37년) 3564년 윤수갑(72세,28년) 3640년
윤용기(69세,36년) 3615년 장병락(61세,33년) 3645년
최선목(67세,33년) 3612년 최하중(68세,33년) 3561년
한장호(72세,38년) 3542년 홍경선(70세,28년) 3501년

안동고도소(762-800) 경북 안동군 풍산읍 상리3동 121
조상록(49세,17년) 1310년 이성우(70세,11년) 1341년
김경주(70세,12년) 1368년 김기문(65세,13년) 1330년
이장형(62세,10년) 1302년 조봉수(53세, 6년) 1312년
최해보(67세,10년) 1320년 유정식(55세,20년) 1311년
이병설(57세, 9년) 1360년 강용주(33세,10년) 1313년

전주고도소(560-28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99
박영희(32세, 3년) 2001년 석달윤(64세,15년) 2120년
진장식(48세,16년) 2679년 손유형(66세,14년) 2039년
문철태(65세,10년) 2019년 신귀영(58세,15년) 2056년
장의균(43세, 8년) 2006년 방양균(40세, 6년) 2125년
최수열(30세, 8년) 2073년 최수일(55세,30년) 2041년
신광수(66세,10년) 2053년 김창원(62세,26년) 2063년

진주고도소 (663-910) 경남 진양군 대곡면 광석리 700
서경원(58세, 6년) 55년

*연하장을 보내실 때 수번을 꼭 기입하셔야 정확히 들어갑니다.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린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부산지방법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조성래)는 부산 만덕교교생 강주영(8)씨 유괴살해사건에 관여한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강력2반 주임 김종두(38)등 경관 14명을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26일 서울대검에 고발했다.

부산지방법변호사회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문재인)는 조사결과 "피고인 원종성(23), 옥영민(26)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무수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했음을 확인했으며 참고인 3명도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으나 진술번복을 위해 폭

행등 불공정한 수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의 고문 사실이 입증되는 이 때 경찰이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이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중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고문사건은 피고인에게 가해지는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강력반 수사관 대부분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관행이므로 웅정,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0일 발생한 부

산 강주영씨 유괴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종사촌 언니 이모양(19), 친구 남모양(19), 원종성(23)씨와 옥영민(26)씨는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던 중 5차례 공판에서 이양만 검정의 수사기록을 인

정했을뿐 원씨등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또한 원씨등은 경찰관들이 다리사이에 끈봉을 끼우고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등 온갖 고문을 가해 견디다 못해 허위자백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11월 23일 고문여부를 가리기위한 재판부의 신체감정이 검찰과 변호인단, 보도진등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실시되기도 했다.

피의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보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서울민사지법 21단독 김중백판사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이 피의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보의 제시 없이 피의자를 강제연행하려 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무단침입한 점등과 피의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등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 소송은 지난 2월 조용환-백승헌변호사 등이 김두희법무부장관 및 임종길등 6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원고에게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태훈씨를 불법으로 강제연행하기 위해 원고 사무실에서 그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뒤 구속영장의 제시등을 요구하는 원고들의 제지를 폭력을 행사해 억압하고 노씨를 강제연행한 것은 원고들 사무실의 평온을 해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변호사등은 작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불법연행되어 48시간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된 노태훈씨와 7월 15일 대화를 나누던 중 임종길등 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영장 정보의 제시없이 강제연행하려던 중 적법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변호사들을 사무실벽등에 부딪치게하는등 폭행을 저지른 점과 변호사실 통신내용을 도청함으로써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 피해를 끼친 점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4일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가 판결한 "헌법불합치"로 인해 연행과정에서 범죄사실 및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등을 알리지 않고 연행했다면 불법"이라는 판결과 함께 신빙확보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한 판결로 주목된다.

- ###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뉴스(2~4면)
- ◎ <문민정부의 매카시즘>-박홍총장 수사파발인 파동
 - ◎ <12·12 유죄인정하고도 불기소>-검찰, 자의적 기소권행사
 - ◎ <우조교 승소>-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 ◎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 양심선언>-남매간첩단 사건 조작 폭로
 - ◎ <무너진 성수대교>-성장제일주의의 사생아
 - ◎ <문민정부, 긴급구속장 남발>-1만3천7백32명 연행
 - ◎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이해' 사법처리>-장상환, 정진상교수 불구속 기소
 - ◎ <국제법률가위원회, 정신대 특별보고서 제출>-정신대문제 해결할 특별 중재재판정 설치 촉구
 - ◎ <현대판 노예노동,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 >-감시 강제노동, 저임금, 구타등 인권침해 심각
 - ◎ <가평 두말분교폐교>-주민들 폐교철회 첫 소송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4 인권 10대뉴스

편집자주 : <인권하루소식>은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및 독자들을 상대로 '94 인권 10대뉴스와 인권침해자 옹호자에 대한 설문'을 실시, 101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설문개요	
설문응답	총 101명
인권단체	18개 인권단체 33명
사회단체	12개 사회단체 23명
의원, 변호사, 언론인	22명
시민	23명

문민정부의 매카시즘

박홍총장 주사파 발언 파동

7월18일 '한총련 뒤에는 주사파가 있고, 주사파 배후에는 사노맹이 있다. 사노맹은 김정일의 지도를 받는 사노맹의 배후지도를 받고 있다'는 검찰까지 당황하게 한 박홍총장의 발언은 여론의 무더위를 '주사파 사냥'으로 더욱 달구었다.

6월7일 한총련 출범식 직후 한총련간부 90여명 검거령, 6월18일 UR비준지지집회와 관련한 3백26명의 검거등으로 주사파 사냥에 나선 때, 박홍총장의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김정일의 장학금을 받은 대학교수가 있다'는 발언 이후 진주경상대의 대학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들에 대한 최대의 수사가 이어졌으며, 성균관대 정현백교수등을 긴급구속했다가 풀어주기까지 했다.

7월8일 김주석의 사망과 관련, '조문을 표시할 용의가 있다'는 한 국회의원의 발언까지 이적행위등으로 비난받을 만큼 '주사파'의 이름만 걸면 누구든지 단죄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실상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12·12 유죄인정하고도 불기소

검찰, 자의적 기소권행사

검찰은 11월, 정승화씨등이 제기한 12·12사건의 전두환, 노태우씨 등에 대해 '군사반란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나 '국가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을 들어 기소를 유예했다.

법률학자들은 검찰이 '군사반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현행 기소독점주의 제도에서도 검찰의 내규등을 들어 기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검찰의 기소유예 조치와 관련, 변호사, 법률학자, 사회단체등은 12·12 기소유예를 계기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기소법정주의등의로의 전환, 3개항에만 인정되어 있는 재정신청범위의 확대, 특별검사제의 도입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조교 승소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창우 부장판사, 주심 강승준 판사)는 전 서울대 조교 우영은(필명)씨가 지도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도교수 신아무개와 서울대총장,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지휘·명령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때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대학교 총장과 국가는 교수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현실에서 간섭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희롱 공대위는 국가책임의 판례를 남기겠다고 항소를 한 상태이다.

서울민사지법의 판결은 그 동안 개인적인 문제로 무시되거나 묵인되었던 성희롱 문제가 최초로 법의 제재를 받게 됐다는 점 뿐만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가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렸다.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 양심선언

남매간첩단 사건 조작 폭로

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을 제작했던 배인오씨는 10월 29일 베를린에서 자신이 안기부 프락치로 활동했음을 밝히는 양심선언을 했다. 배씨는 북한영화, 북한서적을 '남매간첩단 사건'의 김은주씨를 통해 한총련등에 전달하게 하는등 김씨 남매가 구속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다.

배씨는 '안기부의 지시를 받아 한총련과 조총련, 사민청과 조총련을 연결시키는 공작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안기부에서 프락치 운영실태의 일부를 폭로했다.

배씨는 93년 9월 이후 프락치의혹을 받아오다 올 9월 해외 범청학련을 접촉하라는 지시를 듣고 유럽으로 갔다고 밝혔다. 배씨는 안기부 수사관의 얼굴, 배씨와 이들의 대화를 담은 비디오 테이프등 구체적인 물증을 공개했다.

이 사건으로 안기부가 프락치를 통한 정보수집 차원이 아니라 프락치를 통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가해미군 소환촉구 및

주한미군의 민족주권 유린 1차 규탄대회

일시: 12월 28일(수) 오후 2시 / 장소: 용산 미군사령부 앞 1번 문 / 주최: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2차 대회는 95년 1월 6일(금) 오후 2시 같은 장소, 전화 744-1211)

무너진 성수대교

성장제일주의의 사생아

지은지 16년 밖에 안 된 성수대교가 10월 21일 출근시간에 상판하나가 무너져 3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한강의 기적'의 한 상징물이던 한강다리들은 부라부라 긴급진단을 받았고, 사람들은 한결같이 '앞만 보고 달린 30년'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지존과의 염기적인 살인행위, 온보현의 '그냥 죽었다'는 살인의 변,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등은 외형과 경제지표만을 중시한 이적까지의 경제개발정책이 역으로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었다.

최근 삶의 질을 우선하는 개발, 인간과 조화로운 개발의 중요성이 사회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세계와 특히 민간단체들에 의해서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를 계기로 경제개발정책의 전면전 변화를 피하기 보다는 '세계화, 국제화'라는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 있다.

문민정부, 긴급구속장 남발

1만3천7백32명 연행

불법연행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모면이라도 하듯이 올해는 긴급구속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다. 그러나 긴급구속남발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범죄의 중대성·객관적 혐의·구속의 필요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구속은 불법이다. 이중 안기부의 정현백교수 경우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긴급구속이 가져오는 인권침해의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10월 8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긴급구속장소 1만3천7백32명이 연행되었으며 이중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거나 법원이 기각시킨 경우는 9백76명이었다. 이렇듯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것은 검찰 스스로 긴급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9백76명의 피의자들이 '신체의 자유'는 물론 '적법절차에 대한 재판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등을 침해당한 것이다.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사법처리

장상환, 정진상교수 불구속 기소

올해 여름 박홍총장의 주사파발언과 함께 연일 신문지상을 오르내린 사건이 경상대의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이다. 검찰의 이적성 수사가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와 실정법 사이의 정면충돌을 가져온 것이었다.

8월9일 민교협·민예총·민변 등 10개 단체로 결성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대위」는 장상환교수 등 집필자 9명에 대한 사법처리반대를 요구하면서 "학문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학문적 논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상대사건으로 대학의 자율성인 교수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경상대측은 교양강좌인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장상환, 정진상교수는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부산고법에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직위해제 집행정지신청등의 소를 제기하고 있다.

국제법률가위원회(ICJ),

정신대 특별보고서 제출

정신대문제 해결할 특별 중재재판정 설치 촉구

11월 22일 국제법률가위원회(ICJ)는 정신대문제 특별보고서를 제출, 특별 중재재판정을 개설할 것을 주장했다.

국제법률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일본이 군위안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희생자들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또한 임시조치로 4만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원상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을 경우 민간단체, 국제법 전문가등이 참가하여 구성하는 중재재판정을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대협은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정신대 문제가 회부되도록 일본정부가 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최근 일본정부가 아시아교류센터의 민간위로금을 예기하며 국가의 법적 책임을 민간단체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의 전쟁범죄인정, 개인배상 없는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가입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대판 노예노동,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

감시 강제노동, 저임금, 구타등 인권침해 심각

정부는 지난 6월 중순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여 약 6개월동안 내팔등에서 약 2만여명의 연수생이 입국하였다. 정부는 불법의국인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이들의 산재, 임금체불등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여론이 높아지자 한편으로는 저임금으로 유지되는 산업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인취업연수생은 1년을 기한으로 상공부 산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정을 받고 있는 인력회사와 계약을 하고 한국에 입국하여 일을 하지만 기술연수는 커녕 중노동에 시달리며 처음에 약속한 돈의 절반인 2백10불 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어떤 경우는 하루에 16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에 감시와 감금을 당하고 있다. 또한 임금도 이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11달러는 관리비 명목으로 가져간다. 이들의 심각한 인권침해는 취업연수생에게 합법적 신분은 포기하게하고 불법취업자의 신분으로 돌아서게 한다. 상공부가 12월 16일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연수생 1만9천3백여명 가운데 1천7백여명

이 무단이탈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노동·인권단체는 11월 25일 '외국인 인권개선 촉구대회'등을 통해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를 폭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가평 두밀분교 폐교 주민들 폐교철회 첫 소송

93년 12월10일 두밀분교 폐교 결정이 주민들에게 통보된 뒤, 94년 2월 두밀분교 신입생, 학부모들이 상해국교의 취학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폐교

철회 투쟁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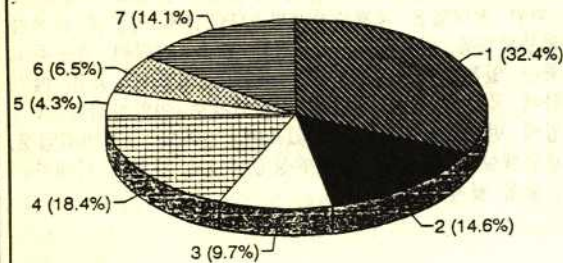
'두밀분교폐교철회추진위원회'는 두밀분교가 '도서벽지 진흥법'에 위반된다는 법적근거를 갖고 서울고법에 4월 12일 두밀분교 폐교철회 행정심판청구와 폐교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5월13일 서울고법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으나 다시 주민들은 8월26일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9차공판이 내년 1월24일 열릴 예정이다. 두밀주민 1백여명은 가평군교육청 앞 집회, 여의도 민자당 앞 집회, 서명작업, 공청회 등을 통해 폐교 철회를 요구해 왔다. 7월 '두밀학교 살리기 연대모임'이 생겨나 작은 학교살리기 운동을 함께 벌여왔다.

한편 정부의 소규모분교통폐합조치로 전국 7천여 국교 중 54.2%에 해당하는 3천8백여 학교가 사라질 형편이다.

도표를 통해 본 '94 인권침해자

침해자 3명씩을 쓰라는 질문에 총 25명의 이름이 거명되었고, 각각의 인물이 나온 것을 모두 합하면 185표에 이른다.

- ①-박홍(60) / ②-김영삼(27) / ③-최형우(18) / ④-김덕(34) / ⑤-김도인(8) / ⑥-월간조선(12) / ⑦-기타(26)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기관의 책임자나 이데올로기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인권침해자로 언급된 것은 신체·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등을 인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책임자인 노동부장관, 보사부장관이 단 한번도 지적되지 않은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독자가 뽑은 인권옹호자

민가협 / 민변 /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 우조교 / 정대협 /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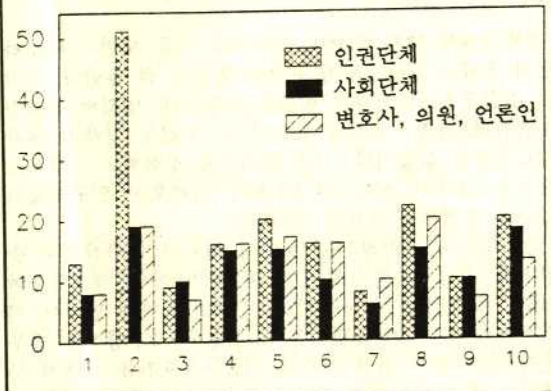
인권옹호자로 거명된 사람이나 단체는 모두 54개로 위에 열거된 단체는 다수를 차지한 단체를 가나다순으로 열거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성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317호는 95년 1월 5일(목)에 발행합니다

도표로 본 설문대상별 10대뉴스 반응도

- ①경상대 교양교재 사법처리/ ②문민정부의 매카시즘/ ③가평 두밀분교 폐교/ ④무너진 성수대교/ ⑤우조교 승소/ ⑥문민정부, 긴급구속장 남발/ ⑦현대판 노예노동, '외국인취업연수생 제도'/ ⑧12·12 유죄인정하고도 불기소/ ⑨국제법률가위원회, 정신대 특별보고서 제출/ ⑩안기부 프락치, 배인오씨 양심선언



독자가 뽑은 '94 인권 10대뉴스를 보고

10대뉴스에 선정된 항목이외에 많이 언급된 것은 민주노총준비위 발족, 권영길씨등 3자개입협의 수배, 동티모르 독립위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촛초시위, 북한 인권문제 부각등이었다.

최저생계비 헌법소원을 제기한 심금섭씨, 고문문제의 문국진씨 손해소송, 간첩조작 사건 진상규명운동, 수감자의 인권을 지적하는 항목등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에 비해 10대뉴스로 뽑아준 사람들이 얼마되지 않았다.

이는 한편으로 신공안정국의 주사파색출을 미명으로 한 마녀사냥이 끼친 인권침해가 워낙커서 다른 설문을 택할 여유도 없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별로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권 10대뉴스 선정 설문작업이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인권하루소식

95년 1월

(제317호 - 제334호)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김영삼 대통령 「킹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

인권침해자 세계적인 인권옹호자로 둔갑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지도자 마틴루터 킹 목사를 기념하는 「비폭력 사회변화를 위한 마틴루터 킹 센터」(소장 스코트 킹, 킹목사 미망인, 이하 킹센터)는 지난해 12월 30일 「킹 평화상」의 18번째 수상자로 김대통령을 선정, 발표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지난 1일 일제히 전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킹센터는 매년 인권운동과 민주주의의 신장에 공이 큰 인물을 한명씩 선정, 이 상을 수상해왔는데, 역대 수상자로는 73년 미국의 흑인지도자 앤드류 영, 79년 미국의 카터대통령, 86년 남아공의 비숍 투투대주교, 87년 필리핀의 아키노대통령, 91년 소련의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킹소장은 "김대통령의 생애와 활동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데 있어 결코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비폭력 원칙에 충실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수상이유를 밝혔고, 또 김대통령이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이끌었고 언론자유와 사회개방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고 밝혔다.

킹 여사는 오는 1월 26일 서울을 방문, 김대통령에게 직접 상을 수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각계 반응
 고영구(58, 인권협 대표, 변호사)는 "김대통령이 재

임하고 있는 동안 제도적 인 폭력이 상존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런 상을 받는 사람이 상존하는 제도적인 폭력을 말끔히 해결하지 못하면 수상자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남(46, 한교협 인권위 사무국장)목사는 "김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기간 동안에는 이런 상을 받을 업적을 남기지 못하였다"면서 "이 상을 계기로 화해의 정신을 발휘, 500 여 양심수를 석방하고, 복에 두고 가족과 친지를 두고 온 장기수들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규업(43) 전국연합 정책위원장은 "킹 목사는 평생을 흑인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다 희생된 분으로 변절한 김대통령이 킹목사를 기리는 상을 받는다는 것은 개가 옷을 입"이라면서 "김대통령은 다른 부분보다도 인권문제에서는 과거의 독재자보다 더한 탄압을 가하고 있는데, 노동3권은 내용적으로 더 취약해졌고, 농민의 생존권은 바람 앞의 등불이며, 빈민들에게 약속된 공동임대주택도 폐기한 장본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남규선(31) 민가협 총무는 "왜 이 상을 김대통령이 받아야 하는지 많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

이라며 "1천명이 넘는 양심수의 양산과 사회 전반에 걸쳐 부실과 무책임 정책으로 수많은 이들의 인명을 앗아간 책임자인 김대통령이 이 상을 받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인권침해자로 박홍총장에 이어 두번째로 선정된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94년12월27일자, 316호 참조).

천주교 사제, 수녀 등 신귀영씨 간첩사건 재심사건 의견서 제출

윤공회 대주교(광주교구) 등 부산, 제주, 전주, 안동교구 주교 5명과 김승훈, 함세웅 신부 등 사제 328명과 최옥순 수녀등 수도자 132명은 지난 3일 '신귀영씨 일가 간첩사건 재심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앞으로 제출하였다.

의견서에서는 고문에 의한 간첩 조작을 지적하면서 "신씨의 형인 신수영씨가 자신은 조총련 간부도 아니고 간첩행위를 지령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 재판정에 출두해 증언할 약속을 근거로 재심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1기 공개강좌 (1995년 1월 7일~6월 24일, 매주 토요일 11시~1시까지)

<주요내용>

- 1월: 인권의 역사/국제인권법 입문 및 세계인권선언 /인권의 철학
- 2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어린이의 권리 규약
- 3월: 고문방지협약/IL0조약/여성관련 국제조약
- 4월: 헌법/형법
- 5월: 형사소송법/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집시법
- 6월: 국제법 / 행정법 및 행정관련조약 / 각국사법제도 비교

특강

(매월 말 토요일): 1월-인권운동가를 위한 언론학/2월-세계경제체제와 한국/3월-WSSD 및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4월-지방자치제 강의/6월-통일운동

신청방법

25강의 모두 등록할 경우 4만원, 1강좌만 수강할 경우 4천원 전화로 신청(796-8364) 받습니다.

연말, 연초 인권소식

비전향장기수 송환 요구

일본 도쿄에 있는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들의 송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회'(회장 최일수)는 김인서등 3인 장기수를 고향인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집회를 갖고 지난 12월 27일 대한적십자사(총재 강영훈) 앞으로 "민족의 화해, 단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비전향장기수를 무조건 시급히 송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석방요구 목요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대표 서경순, 민가협)는 지난 12월 29일로 '44년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을 위한 제67회 목요일집회'를 가졌다. 민가협은 "현재 4백35명(12월16일 현재)의 양심수가 감옥에 갇혀 있으며 44년째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를 비롯해 20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장기수가 26명에 이르고 70세 이상의 고령자 10여명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몽모제하고발 무혐의처리 "남녀고평법원리 가르친다"

서울지검 공안2부(이호철 검사)는 여연, 전교조 등이 여사원채용시 몽모를 제한한 44개 기업을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 12월 28일 3개 기업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기업은 무혐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민우회, 전교조등은 지난 12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검찰이 여성간의 차별론을 내세워 여사원을 채용할 때 몽모를 제한한 대부

분의 기업을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빠져 남녀고평법 등권법 원리를 그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 자구(自求)에 얽매인 결과 남녀고평법등의 입법취지를 망각한 조치이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광범위한 직종차별을 합리화한 것이다"고 말했다.

최이고사망사건 불기소에 대책위등 항고

'최태호이고 의문사 진상 규명 안동지역대책위'(공동대표 김재문)와 '천주교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지난 94년 11월 안동교도소 경비대원과 안동교도소 보안과장을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대구지법 검찰청 안동지청(검사 변관우)에 고발, 13일 불기소 결정된 것에 불복하여 지난 12월 29일 항소하였다.

대책위는 "검사의 수사결과는 그동안 가족들과 대책위에서 제기한 사망추정 시간 조작, 구타흔적, 자살동기등 의혹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올바른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안동교도소 자체수사가 그랬듯이 검찰수사 역시 의혹을 덮어두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렬의장 긴급구속, 지자체 사전 봉쇄의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공동의장 이창복등 3인)은 지난 달 30일 광주전남연합 오종렬상임의장(시의원)이 긴급구속된 데 대

해 지난 12월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야 민족통일운동 인사의 지자제선거 출마 및 당선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수법"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지난 8월 열린

범민족대회 참가 사실만으로 오의장을 구속한 것은 국가보안법 남용은 물론 95년에 전개될 민주통일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을 알리는 서곡이라고 밝혔다.

각 인권단체, 새해에는 무슨 일을 하나?

□여연

지방자치선거를 맞아 여성후보의 당선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38 여성의 날 제 11주년 한국여성대회를 '남녀 유권자 한마당'으로 개최할 계획.

사회보장관련법등에서 여성차별에 관한 내용을 여론화시키고 남녀평등한 사회보장관련법을 확보해 내기 위한 활동을 벌이며, 고용불평등 관련사안을 찾아내고 사안에 따른 법적 대응을 통해 판례확보에 주력함으로써 여성불평등 사안을 여론화시킨다.

분단 50주년을 맞아 정신대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한 일본군재정산운동과 아시아지역에서 군축과 평화에 대한 국제연대를 모색한다.

□정대협

올해도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추진사업과 일상사업으로 수요시위가 잡혀있다. 상반기의 사업일정은 다음과 같다.

2.27-3.1 제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3.13 UN 여성지위위원회가 열리는 때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결정을 반대하는 국내의 서명전달식과 미주지역 정대협등과 함께 대규모 행사로 가진다.

4, 5월경 UN인권위 특별보고관 린다차베즈, 쿠마라수와미씨 초청 국제세미나 개최,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위안부 할머니 초청

8.30-9.15 북경여성대회 기간중 정신대 할머니 증언(9/3), 한국의 날 행사(9/5), 필리핀 군위안부 대책위와 정대협 공동으로 국

제포럼 개최(9/6), 보스니아 여성들과 전쟁중 일어난 여성피해에 관한 포럼(9/7), 93년 비엔나세계인권대회 여성문제 포럼에 이어 여성문제에 관한 대규모 국제포럼 개최(9/8).

□성폭력상담소

95년 활동계획 목표로 성폭력상담소는 내담자 지원체계 활성화와 성폭력 예방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세웠다. 내담자 지원체계 활성화로 △일반상담, 위기상담, 피난처간의 연계 등을 통한 통합 지원체계 정착 △피해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등을 할 예정. 또 △국민학교 양호교사에 대한 성교육 △청소년대상 비디오프로그램 제작준비 △상업고등학교 상담교사를 위한 성교육 및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등도 할 방침.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는 △회원단체 연대강화, 미군범죄 신고센터 확대강화 △미군범죄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미군범죄에 대한 총체적 접근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의 대중화 △후원회의 확대 강화로 골격이 갖추어져 있다.

1-2월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조사 위한 조사단 구성, 지역방문등 준비작업/미군범죄 다큐멘터리 제작

3-4월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사회여론화 / 한미행정협정 자료집 발간

5-6월 민족자주학교 개최

7-8월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이달의 주제 - 고문>

"고문"-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교사, 동의 또는 묵인 하에 그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 및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문방지조약 제1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UN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

황석영씨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인권위원회 산하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는 지난 9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중인 이근회, 최진섭, 황석영씨등에 대한 구금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 제19조를 (한국 정부가) 위반한 자의적 구금'인 것으로 지난해 9월 결정하였음이 뒤늦게 밝혀졌다.(결정번호: 이근회/최진섭-29/1994 Republic of Korea, 황석영-30/1994 Republic of Korea)

이 사실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동아시아 담당자인 맥베이(Clare McVey)씨가 5일 '인권운동사랑방'에 보내온 편지와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 결정문에 의해 확인되었다.

맥베이씨가 보내온 편지에 의하면 이미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통보받았고, '오는 2월에 열릴 유엔 인권위원회 제51차 정기회의에 이에 대한 추가 보고를 해야 한다'고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가 결정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자의적 구

금이라는 주요한 인권침해 사실을 애써 숨겨왔다는 것이 다시 밝혀지게 되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는 1993년에도 간첩사건으로 복역중인 장의균, 김성만, 황대권씨 등에 대해 자의적 구금이라고 결정한 바 있고, 그때에도 정부는 이 사실을 숨겼다(<인권하루소식> 993.8.28. 준비10호 참조).

한편, 이근회씨(27)는 지난 1992년 9월 민주당의 보좌관으로 재직중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중인 황인옥씨에게 국방

부 자료를 넘겼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최진섭(33)씨는 월간 '말, 지 기자로 재직중 중부지역당 산하의 '1995년 위원회' 조직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소설가 황석영(50)씨는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북한을 방문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지난 1993년 4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결정문의

내용등은 다음호에 게재)

AI '북한 인권보고서' 무단으로 베낀 한국정부 보고서 회수 등 약속

국제사면위원회 사무국 동아시아 조사과(Clare McVey, Pierre Robert)는 5일 국제사면위원회의 '북한 인권보고서'를 허가없이 복사사해 배포한 사실을 지적한 항의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94년 12월 21일 답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만든 '북한인권 보고서'의 복사물을 독단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발간한 보고서를 즉각 회수하고 보관본을 파기하며 국제사면위원회의 허가없이 문서를 복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보고서를 자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제사면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했다"고 밝혔으며 "한국과 북한 모두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거듭 지적했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인권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최초의 기회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1기 공개강좌
(1995년 1월 7일~6월 24일, 매주 토요일 11시~1시까지)

<주요내용>

- 1월: 인권의 역사/국제인권법 입문 및 세계인권선언 / 인권의 철학
- 2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 어린이의 권리 규약
- 3월: 고문방지조약/ILO조약/여성관련 국제조약
- 4월: 헌법/형법
- 5월: 형사소송법/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집시법
- 6월: 국제법 / 행정법 및 행정관련조약 / 각국사법제도 비교

특강(매월 말 토요일): 1월-인권운동가를 위한 인문학/2월-세계경제체제와 한국/3월-WSSD 및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4월-지방자치제 강의/6월-통일운동
수강료: 25강의 모두 등록한 경우 4만원, 1강좌만 수강할 경우 4천원
신청방법: 전화로 신청(796-8364) 받습니다.

● 오늘의 행사 ●

가해미군 소환 및 주한미군의 민족주권 유린 제2차 규탄집회

오후2시 / 용산 미군사령부 앞(1번 문)
주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인권하루소식> 편집인이 95년 1월 5일부터 박래군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원 고한 광부들 9일째 갱안 농성 성희직 강원도의회 의원 등도 삭발단식농성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중앙개발 광산 노동자들의 갱안 농성이 5일로 9일째를 맞았다. (주)삼척탄좌의 채탄도급업체 정리에 따른 중앙개발의 무단해고에 맞서서 65명이 시작한 농성은 탈진한 사람들을 빼고 현재 60명이다.

농성중인 광산노동자들과 가족들은 5개월치의 평균 임금과 이사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갱안이 워낙 습기가 많고 단진이 많은 열악한 환경이라 매우 힘들게 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농성은 6일 밤에 있을 회사측과의 협상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농성은 지난해 12월 있는 정립개발 광산노동자들의 농성에 이은 것이고, 강원도 내의 최대의 채탄업체인 (주)동원탄좌와 (주)삼척탄좌가 40-50%의 감산 계획을 세우고 있어 올해에도 고아산 노동자들의 해고에 맞선 생존권 투쟁이 계속

될 전망이다. 한편, 채탄량을 감산하는 기업에게 정부는 톤당 2만1천8백여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잃는 광산노동자들에게는 통상임금 4개월 이상 지급만을 정해놓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강원도의회에서 삭발단식중이던 성희직의원은 지난 1일부터는 고한 천주교성당으로 장소를 옮겨 지역주민 유종원(39)씨와 함께 삭발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석탄 감산을 광업소별로 전년 대비 10% 이상 못하도록 할 것 △해고 광산 노동자에게도 폐광노동자와 같이 생활안정금 등의 모든 혜택을 줄 것 △광업소 업주가 받는 지원금액과 동일한 지역활성화 기금을 출연할 것 △지역주민들의 재산을 보상하고 생계가 보장되는 이주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요구를 내걸고 있다.

부산지법 특수부, 고문 경관 조사 시작

부산지법 특수부는 12월 26일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조성래)가 고발한 부산만덕 국교생 강영주(8) 유괴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을 고문한 김종두 등 경찰관 14명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김인호 특수부장을 주임 검사로 박기준등 특수검사 3명은 수사팀을 구성해 내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고발인 조성래, 문재인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하며 원종성(23), 옥영민(27)씨등 유괴살인사건 피고인 4명과 가혹행위를 당한 참고인 지성훈(17,성지공고2)씨등 10명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AI 한국지부 성명 발표 고문방지협약 유보조항 조속한 가입 등 촉구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5일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가입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제22조와 제21조의 가입을 유보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유보조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유엔의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국제인권협약(B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할 것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개정 △국민인권기구의 설치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채택할 것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들에 대한 의무적인 인권교육의 실시를 촉구했다.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지난 12월 28일 법무부에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대한변협의 의견서는 지난해 7월 15일 법무부의 '형사소송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이어 12월 17일 법무부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의해 낸 것이다.

대한변협은 "긴급체포 자체가 영장없는 인권제한이고 오용·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긴급체포와 영장제시기간"(제200호 4항) 중 "검사는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못할 때는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포영장의 효력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체포영장 등의 효력"(제200조 6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체포영장의 효력'에서 "체포영장은 피의자의 체포, 체포장소로부터 영장에 기재된 장소까지의 구인 및 구속영장의 발급 시한까지 구인된 장소에서의 유보를 할 수 있는 효력만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포된 피의자는 구인된 장소에서 도주할 염려가 없는 범위내에서의 신체의 자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점과 통신을 할 자유가 있으며 구급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개정안을 보면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1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법무부의 개정안 이외에도 대한변협은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신설 △기소된 때부터 변호인의 서류기록, 증인의 열람, 등사, 촬영권의 명시 △재정신청의 전면적 확대와 피의자로서의 확대 등을 첨가할 것을 내놓았다.

특히 피의자의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는 '형사소송법 개정취지가 기본권 보장의 강화에 있다'는 측면에서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참여하에 자기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에서 지난해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엔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권보장의 신설이 "수사단계에서의 고문이나 강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확실히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의 기록열람제도의 신설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과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달의 주제 - 고문>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에 있는 영토 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여타의 조치를 취한다.
<고문방지조약 제2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세모녀 폭행 미군 범죄자 소환 거부 두달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규탄대회 가자

94년 10월 미군 헌병들이 한국인 세모녀를 불법감금, 폭행한 사실에 대해 한국 검찰이 피의자 소환요구를 미군당국이 2달째 거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의 6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6일 제2차 규탄대회를 가졌다.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회원들과 학생 60여명은 이날 용산 미군사령부 앞에 모여 '미군헌병대 세모녀 폭행사건 및 미군당국의 민족주권 부정행위에 대한 규탄투쟁'을 가자 ▲미군 피의자 소환 요구 ▲한국 국민에 대한 공개사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군당국이 공무증명서를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주장을 벌이고 있는 반면 한국검찰은 공무를 벗어난 범죄로 규정, 미군당국에 이견서를 제출하면서 한미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밝히며 "한국검찰이 미군당국의 공무증명서에 이견서를 제출한 것은 67년 한미행정협정 체결이후 처음있는 역사적 사건이다"고 말했다.

한편, 94년 12월 초 피해자인 설은주씨의 탄원서가 컴퓨터 통신에 게재되면서 미군당국과 한국검찰에게 항의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 가운데 천리안

경상대 정상환교수등 복지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정상환(44·경제학과)·정진상(37·사회학과) 교수 등 2명이 최근 복직되었다. 경상대가 지난해 11월 30일로 직위해제를 내린 조처를 취소한 것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국가공무원법(제73조) 단서조항을 95년 1월 1일부터 삭제,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교수등은 지난해 12월 부산고법에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직위해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알림-2면에 유엔 자의적 구급에 관한 실무분과 결정문 등 게재>

바로 오늘입니다. 늦지 않도록 서두르십시오
인권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최초의 기회!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1기 공개강좌

(1995년 1월 7일~6월 24일, 매주 토요일 11시~1시까지)

- <주요내용>
- 1월: 인권의 역사/국제인권법 입문 및 세계인권선언 /인권의 철학
 - 2월: 유엔 인권 A규약/유엔 인권 B규약 /어린이의 권리 규약
 - 3월: 고문방지조약/ILO조약/여성관련 국제조약
 - 4월: 헌법/형법
 - 5월: 형사소송법/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집시법
 - 6월: 국제법 / 행정법 및 행정관련조약 /각국사법제도 비교

특강(매월 말 토요일): 1월-인권운동가를 위한 언론매 /2월-세계경제체제와 한국/3월-WSSD 및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4월-지방자치제 강의/6월-통일운동

수강료: 총 25강의 모두 등록할 경우 4만원, 1강좌만 수강할 경우 4천원

신청방법: 전화로 신청(796-8364) 받습니다.

황석영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결정 30/1994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7. 한국정부는 '국가테러가 북한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이다'고 주장하지만 황석영씨의 활동이 어떤 점에서 테러에 해당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했다. 남한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황석영씨가 폭력을 모의, 자행, 옹호 및 지지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없다. 한국정부는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폭력적 시도와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를 설명하면서 황석영씨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한국정부는 그를 폭력적 시도와 같은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또한 피고인에 대한 기소 절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고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다른 기구가 이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결론내렸다.

9. 실무분과는 황석영씨가 구속 및 기소된 이유가 그가, 북한사람과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옹호할 목적으로 북한출신 사람과 개인적으로 접촉했다는 데 있다고 간주한다.

10. 실무분과는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조가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이러한 자유의 제한이 B규약의 19조 3항 (b)에 상응해야 함을 상기한다. 한국정부는 황석영씨가 폭력을 사용, 옹호 또는 계획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를 비밀정보 또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개인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고소하지 않았다. 실무분과는 황석영씨가 단순히 북한정보당국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그가 국가안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한조치를 규정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간주한다.

11. 인류공동체는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준이 준수되도록 국내법이 국제기준에 맞추어 시행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12.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황석영씨는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조가 보장한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폭력을 사용 또는 선동하여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도덕 등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그러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을 허용하는 것이 규정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13. 이상의 내용에 따라 실무분과는 "황석영씨의 구금이, 한국정부가 가입당사국이기도 한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19조에 위반되며 자의적구금 실무분과에 제출된 황석영씨 사례가 원칙의 두번째 범주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다.

14. 실무분과가 황석영씨의 구금이 자의적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실무분과는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의 원칙과 조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황석영 · 이근희 · 최진섭씨 사건의 개요

황석영(50, 소설가)

89년초부터 90년 8월까지 5차례 방북, 7차례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독일과 미국등지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대변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93년 5월 귀국 즉시 구속기소. 7년형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 수감중.

서울고법 형사5부 9월2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부장판사 유현) 재항소심 공판에서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일지라도 반국가단체에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면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판시하여 인권단체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이근희(29, 당시 민주당 대표최고의원 비서)

92년 9월 26일 오후9시 집앞에서 안기부직원에게 의해 강제연행. 간첩단 사건인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구속. 89년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91년 9월 이후 김대중대표최고의원 입법보조원으로 구속직전까지 일했다. 이씨는 군사기밀 수집계공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구속된 간첩 황인옥씨와 접촉해 국방위 입법조사관실에서 "92년도 국방예산(안) 개요"(군사 2급비밀)를 제공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 수감중.

최진섭(33, 월간 「말」지 기자)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92년 9월14일 오전 8시경 출근 길에 연행.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전위조직에 공동맹(일명:95년위원회)산하 '부대모' 중 언론계담당. 구속당시 한국주월간신문기자회에서 '최진섭 말지'기자의 불법연행과 구속에 대해'라는 성명서 발표. 87년 숭실대 총학생회장 역임.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중.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란?

유엔 인권위원회의 91년 회기에서 5개 지역으로 각각 1명씩 선출해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를 설치. 자의적인 판단 또는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금이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책임이 있다. 물론 행정조치에 따른 구금과 선고기간 이후의 구금도 이에 해당된다. 정부나 조직들, 민간단체들 그리고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표현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권리를 가진다. / 2.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구두·필기·인쇄·예술형태·본인이 선택하는 그밖의 전달수단으로 국경과는 무관하게,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전달하는 자유가 포함된다. / 3.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그 제한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또 다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에 대한 존중 (b) 국가의 안전·공공질서·공중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

<이달의 주제 - 고문>

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여하한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용될 수 없다.

<고문방지조약 제2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외무부는 9일 정부가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조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고문방지조약)에의 가입을 위해 가입서를 9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외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동 조약은 조약 규정 제27조에 따라 기탁일 후 30일째 되는 날인 2월8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22일 제4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5일 제170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가입동의를 받은 바 있다. 1994년 1월 1일 현재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86개국으로 우리나라는 87번째 가입국이 된다. 또, 가장 문제가 되는 선택조항인 제22조(개인청원권) 가입국은 35개국만 가입하였고, 51개국이 미가입한 상태다. 이는 각 국가의 정부가 자국내에서 발생하는 고문사건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자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기피한 결과이며, 우리나라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정부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 민간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사왔다.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조약이 발효된 후 1년 안에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약에 따른 의무행위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4년 단위로 "자국이 취한 모든 새로운 조치에 관한 추가보고서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여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민간단체나 개인은 정부의 보고서에 대해서 반박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22조의 개인청원권을 유보한 상태라도 고문방지위원회에 (국제인권단체 등을 통해) 고문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면 고문방지위원회는 그 정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일어난 고문행위라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그 행위로 인해 고문후유증과 같이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나 고문행위를 수반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는 경우도 본 조약에 의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약의 주요 내용>
가. 고문의 정의(제1조)-공무원이나 그밖의 공무원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장을 기피한 결과이며, 우리나라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정부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그동안 국제

나. 범죄인 인도(제8조)-고문에 관련된 범죄인은 당사국 사이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

다. 개인의 배상청구권 보장(제14조)-당사국은 고문행위의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청구권을 보장하며, 피해자 사망시 가족에게 배상청구권을 부여

라. 고문방지위원회 설치(제17조)-고문방지위원회는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당사국 회의에서 선출

마. 고문방지위원회의 조사 권능(제20조)-위원회는 어떤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신뢰가능한 정보 접수시, 당사국에 대하여 정보조사 협조요청과 의견제출 요청 가능/위원회는 정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비공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당사국에 협력을 요청하며, 관련 당사국과 합의시 당사

국의 영토를 방문할 수 있음.

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분쟁해결(제30조)-조약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 당사국 간 분쟁 발생시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중재 재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은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가능

고문방지조약 청원권 유보 철회 요구 인권법, 성명 발표

9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고영구, 이하 인권협)는 지난 7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문방지조약의 핵심인 개인청원권 유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권협은 성명에서 "(개인청원권)을 유보하는 것은 고문에 대한 국민청원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고문이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문피해자의 보상과 고문범죄자의 처벌을 국내법에 보장할 것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공판안내

1월 11일(수) 김영애,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고법 403호, 선고 최영록, 오후2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311호, 3회 김병목,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317호, 선고 1월 12일(목) 문영기, 오후4시, 국보법 위반(샘 사건), 서울지법 311호 1월 13일(금) 고영구, 오후4시, 국보법 위반(샘 사건), 서울지법 424호

민주노총 사무실 이전

주소:(110-524) 종로구 명륜동 4가 188-20 명가빌딩 2층 전화: 765-2010 팩스: 765-2011 PC ID: KCTU(천,하이) 사무실 개소식: 1월 11일(수) 오후 3시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장기수 합주명(66)씨등 6명은 9일 "고문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인 가족 6명과 법적 대리인인 김제완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이유'에서 이들은 검찰이 고문수사관 고소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내린 것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권,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인신구속에 있어서 영장에 의한다는 헌법상의 보장과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될 수 없으며 고문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은 곧바로 헌법상의 고문금지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소시효제도는 고문범죄자를 더 이상 소추할 수 없도록 하여

고문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평등권,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범죄피해자의 구조받을 권리의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헌법 규정에 의거하여 고문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7조, 전쟁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작용조약(유엔, 1968), 유럽조약 제3조, 미주인권조약 제5조등의 국제법이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시간적 제한이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주등은 청구취지에서 "(이)청구를 계기로 고문범죄뿐 아니라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학살 등 과거 군사독재에 의한 학살, 불법체포, 감금등 인권침해범죄가 공소시효제에 가로막혀 그 가해자를 방면하

고 있는 현대사를 바로잡고 이땅에 영원히 고문등 비인도적 범죄행위가 추방되는 시급성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합주명씨등 6명은 과거 유신과 5공 때 영장없이 불법체포되어 짧게는 35일부터 길게는 63일까지 불법구금 상태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고, 3년6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한 박근홍(49)씨를 제외하고는 20년에서 무기가까지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한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계기로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부 적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시급성이 되길 바라며 이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에 합주명씨등과 함께 고문수사관을 고소한 황대권씨등 5명에 대한 재항고건은 현재 대검찰청에 계류중이다.

성희직 의원 농성 풀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광산노동자의 생계보장 등을 요구하며 삭발단식농성을 해왔던 성희직 강원도의원 등이 7일 농성을 풀었다.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지난 94년 6월 취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여권을 압수당하고 장시간 감금노동에 치친 내팔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요구하며 9일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항의농성을 시작하였다.

내팔인 목다지용씨등 13명은 '수배중인 내팔인 산업연수생 13명의 처우개선을 위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며 호소문을 통해 ▲기술연수 실시 ▲장시간 노동에 따른 임금지불 ▲계약이행 ▲감시 감금 노동 철폐 등을 촉구했다.

목다지용(26)씨는 "우리는 처음에 외국까지 와서 데모할 생각은 없었다. 단지 우리를 기계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났고, 이를 한국정부가 조직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경찰과 인력회사가 우리의 뒤를 쫓고 한국사회가 우리를 도망자로 부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농성하고 있는 취업연수생들 결국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기술을 배우러 온 노동자임을 강조했다.

명동성당 언덕받이에는 5평정도의 텐트만이 매운 바람을 막아주고 있고 주위에는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여권을 돌려달라', '임금을 우리 손에 직접 달라' 등의 대자보와 산재를 당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사례가 담긴 사진이 함께 걸려 있다.

기업주나 인력개발회사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코뼈가 부러진 잔가 바하두 따파(Janga Bahadur Thapa, 35)씨, 가슴과 척추를 맞고 입에서 피가 나오고 있는 지반 뷰간게이(Jeevan Bujagay, 22)씨, 입안이 찢어지고 안면타박상이 있는 빈오드 아디히카리(Binod Adhikari, 20)씨는 텐트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결연한 자세로 이번 농성을 맞고 있다.

문의처: 859-0430/858-7829

한국인 공장장, 내팔 여성노동자 성폭행

한국인 공장장이 그 공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성남 품모방기구(대표 신중협) 김현수 공장장이 8일 새벽 1시 30분경 여자 기숙사에 잠입하여 내팔인 여성노동자를 폭행, 강간하였다. 7일 오후 6시 업무가 끝나고 내팔 남자 노동자들이 모두 나간 사이, 퇴근했던 김씨가 내팔 노동자로 가장하여 몰래 여자기숙사에 들어왔다.

여자 기숙사의 한 외국인 여성은 피해 달아났으나 미처 도망가지 못한 채 피해자는 손을 뒤로 묶이고 얼굴을 심하게 맞았으며 목을 졸린 상태에서 강간당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눌렀으나 어느 방에도 전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성남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소장 김해성)에서 일하고 있는 양혜우씨는 "이번 사건은 정황을 판단할 때 우발적이기보다는 계획적이고 평소 외국인 여성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의 심각한 단면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말하고,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 - 고문>
 각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자국 형법에 의하여 범죄가 보장됨을 보장한다. 고문의 미수 및 고문에의 공모 또는 가담을 구성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된다.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백홍용씨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시인

작년 11월 베를린에서 '김삼석 남매 간첩단'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양심선언한 백홍용(29·가명 배인오)씨가 안기부 공작원이었음이 공식 확인되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국회 신상우 정보위원장은 10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해 안기부장이 백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백씨가 안기부 공작원이었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씨의 양심선언 내용은 조작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3시간 이상 진행된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 이부영, 강창성, 류인학의원(이상 민주)등은 "김삼석 남매 사건의 조작여부에 대해 정보위원회는 명확한 진상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김남매 간첩단'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 것

으로 전해졌다.

이부영의원 등은 "안기부가 지금까지 취한 무작정 한 백홍용(29·가명 배인오)씨가 안기부 공작원이었음이 공식 확인되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국회 신상우 정보위원장은 10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해 안기부장이 백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백씨가 안기부 공작원이었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씨의 양심선언 내용은 조작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씨 남매 사건 재조사와 함께 사건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사건관련자를 국가보안법 제12조에 의거해 처벌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은 주목을 끌게 한다. 국가보안법 제12조 2항에서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무고 또는 위증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 역시 국가보안법상 형사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독일에서 머물고 있는 백

씨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귀국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안기부장 부인하는 자세는 책임있는 국가정보기관의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현정권의 도덕성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성희룡은 여성의 '일할 권리' 침해

우조교 성희룡 사건 항소심 제4차 공판 열려

1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고법 민사 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주심곽중훈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유아무개 조교 성희룡 사건의 제4차 공판에서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증인으로 나와 성폭력 실상과 서울대측의 개입에 대해 진술했다.

성폭력 실상에 대한 원고 측 소송대리인 박원순 변호사의 질문에 최씨는 "직장내 성폭행 피해자중 38%가 지속적인 성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 이유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상사의 요구, 성적인 폭언, 육체적인 접촉을 거부하기 어렵고, 거부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거나 심지어는 해고당하기 때문

이다"라고 말했다. 또, "성희룡은 성적 자기 결정권 뿐만이 아니라 일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64년 개정된 미연방 민권법 제7조(The Title 7 of the Civil Rights Act 1964)는 "사용자나 노동조합, 직업훈련소등이 인종,종교,출신국, 남녀의 성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해서 안된다"는 포괄적인 고용평등법을 시행, 성희룡을 직장내 차별행위로 사용자의 책임임을 인정한다. 76년 William Vs. Saxbe 사건에서 여성노동자가 남성 감독자의 성적 접근을 거부한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받은 것은 민권법 제7조에 저촉되는 위법한 성차별이라고 판결하였다.

<인권하루소식>이 숨이 참니다

큼직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참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구독료는 1만원~3만원 사이입니다).

계좌번호
 새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오늘의 행사○

- 민주노총 준비위 사무실 개소식
 오후3시/명륜동 민주노총준비위사무실(☎ 765-2010)
- 김영환 시인 『지난 날의 꿈이 나를 밀어간다』 시집 출판기념회
 오후7시/연세대 동문회관(☎361-4760)

분신 전력 임윤선씨, 경찰 프락치로 「국제사회주의자들」 구속자 가족대책위 폭로

「국제사회주의자들(IS) 구속자 가족대책위원회」(대표: 대표 김금주, IS 관련 구속자 고희용씨 부인, 이하 IS 구속자대책위)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임윤선(30)씨를 경찰의 프락치라고 폭로하였다.

「IS 구속자대책위」는 이날 성명과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임씨는 89년 부산교대 이경현(여, 당시 22세)씨 경찰폭행 규탄집회시 부산역에서 분신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진보정치연합, 빈민연합 등에서 활동하면서 도벽이 심해 기피인물이 되었다. 그는 주로 부산지역의 단체들과 학교를 전전하며 지내다 지난해 「국제사회주의자들」 조직에 합류하였다고 한다.

「IS 구속자대책위」는 임씨를 경찰의 프락치로 단정하는 이유로 △임씨가 사건 전에 만나는 사람마다 구속되었던 점 △스스로 수배자라고 밝힌 임씨만이 유독 불구속으로 풀려난 점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구속자 가족들을 무시하다 하며 협박, 금품을 요구했고, 불필요한 접촉을 한 점 △극히 일부의 관련자만이 아는 사실을 임씨가 경찰의 조사에서 상세히 진술, 검찰이 이를 토대로 공소를 유지하도록 협조한 점 등을 증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지적했다.

「IS 구속자대책위」는 성명에서 △프락치로 이용한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을 조작, 구속한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은 공개 사과할 것 △프락치에 의한 사건 조작의 희생자, 「국제사회주의자들」 관련 구속자들을 석방할 것 △구타, 폭력으로 사건을 조작한 경찰 수사관들을 직위해제시

킬 것 △편파적으로 증거를 채택하는 사법부와 검찰은 각성할 것 △사상·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5일 「국제사회주의자들(IS)」 관련자 20명을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총 33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이들 중 현재까지 28명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홀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 못할 국보법 수감자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김연인(35·도서출판 '힘' 대표)씨가 홀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채 장례식이 치러지게 됐다. 10일 김씨의 처 김명자(30)씨는 서울형사지법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려 했으나 '시일이 오래 걸리며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못했다. 또한 김씨가 수감된 원주교도소에 신청하려던 것도 담당직원의 부재로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 해 3월 93년

출판된 『실천철학』 『지배와 항거』 등이 문제되어 1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감중이다.

노사관계 부문에서의 세계화 추진 촉구

민주노총준비위 성명 발표 민주노총 준비위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구태의연한 '불법 노사분규 입단' 소리를 중단하고 변화된 노동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준비위는 정부 스스로 '선진국형 노동정책'을 전개할 것과 노동 관련 법제도의 세계화부터 추진할 것 등을 주장했다.

「국제인권조약」은 더 이상 외교적 장식품이 아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홍보실

<인권하루소식>이 최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는 황석영·최진섭·이근희씨의 구속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내렸다.

실무분과는 황씨들이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의 원칙 및 조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91년도부터 설치된 실무분과는 자의적 판단이나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금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책임을 갖는데 정부나 정부간 조직, 민간단체,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는 권위있는 유엔인권위원회 실무분과의 결정이 93년에도 한국정부에 내려졌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바로 85년 '구미유학생간첩 사건'으로 구속된 황대권씨와 김성만씨 그리고 87년 '정치권침투간첩 사건'으로 구속된 장의균씨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다. 유엔인권위원회의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점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 그 결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이번 조사과정에서 실무분과의 협조

요청에 대해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부끄럽게 만든다.

9일 한국정부는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함으로써 범세계적 인권조약에 대부분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권조약을 실천하는 과정이 아직까지 없었다. 적극적 실천의지를 기대하기는 커녕 인권조약이 국내적으로 실천되기 위해 기초가 되는 홍보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가입만하고 사장되는 조약이 아니라 국내인권상황 개선의 실질적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실천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계인권선언이나 각 국제조약은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양심을 짓밟던 시대를 거쳐 힘들게 이룩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나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등 국제조약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그 내용을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인권 실현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정부가 조약가입을 단지 외교적 행위만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그러나 적어도 국내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국제화, 세계화를 얘기하는 이때, 인권의 기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또한 상식적인 얘기가 아닐까 싶다.

<이달의 주제 - 고문>

자국 영토내에 고문 범죄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은 입수 가능한 정보의 검토 후 즉시 그를 구금하거나 신병 확보를 위한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다.

<고문방지조약 제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농성장을 찾은 사람들은 한국인임을 부끄러워했다

외국인취업연수생 농성4일째

민주노총준비위등 공대위구성 움직임

취업연수생제도의 철폐를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이 12일로 4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농성중인 네팔 외국인 노동자들은 취업연수생 자격으로는 최초로 지난 94년 6월 입국하였다. 네팔 인들은 "그동안 한국에서 생활은 마치 동물같은 삶이었다"고 말했다. 지엠 목다(26)씨는 "네팔에서 한국에 대한 인상은 좋았다. 경제개발이 잘되고 살기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으나 지난 6개월동안의 경험은 반대였다. 한국의 정치는 잘못되고 있다"고 말했다.

텐트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명동성당에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 종교, 노동단체등 회원이 지속적으로 방문해 라면, 빵, 난방기구 제공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YWCA는 농성자 전원에게 매일 음식을 제공중이다. 현재 이곳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우현(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 정책위원)씨는 "시위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유린 현실에 분노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외 3인), 「외국인노동자피난처」(소장 김재오), 「성남노동자회」(소장 김해성)은 사회단체들에게 취업연수생들의 무기한 농성에 동참을 호소하며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 12시 명동성당에서 공동대책위 구성을 위한 첫 모임이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취업연수생들은 한국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인력업체의 중간횡포, 살인적인 폭행등. 심지어 외국인여성노동자들은 성폭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이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원회 정책위원(위원장)은 "시위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유린 현실에 분노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10일 민주노총준비위는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참혹한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계화 정책은 허구이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당국은 행정력을 이용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성폭행과 구타, 여론 압수등 반인권적인 행위를 일소시켜야 하고 취업연수생제도를 철폐하라"고 주장

변협, 증군위안부 관련 국내 모든 자료공개 건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1일 김영삼대통령 앞으로 '위안부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내 자료를 완전 공개할 것'등 5개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보냈다. 특히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의 내용에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개인의 인권을 침해에 대한 배상문제, 전쟁범죄와 같은 형사책임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일본 정부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의한 해결

방안 수락을 권고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일본정부가 추진중인 민간모금형식의 해

했다. 또한 이후 계획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사용자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며 국민 캠페인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네팔노동자 성폭행한 가구 공장장 긴급구속

경기 광주경찰서는 10일 네팔 여성노동자(22)를 구타, 성폭행한 경기도 광주 꿈모방가구 공장장 기현석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기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경 여자 기숙사에 잠자고 있는 네팔 여성노동자를 구타하고 성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바로잡습니다

95년 1월 10일자 2면의 '한국인 공장장, 네팔 여성노동자 강간' 기사중 '김현수'씨는 기현석씨로 바로 잡습니다.

<이달의 주제 - 고문>

자국 영토내에 고문 범죄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은 입수 가능한 정보의 검토 후 즉시 그를 구금하거나 신병 확보를 위한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다.

<고문방지조약 제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체불임금 지급·노동자자격 인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공대위 발족, 종합적 인권실태 조사단 구성키로

외국인취업연수생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모아지는 가운데 12일 「외국인산업 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정식 발족되었다. 민주노총(준),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경제정의불교시민연합, 성남외국인상담소 등 4개 단체 제안으로 결성하게된 대책위에는 노동정책연구소, 민예총등 32개 단체가 참여했다. 대책위 공동대표에는 박석윤노동정책연구소장, 법타스님등 7개단체 대표가 맡았다. 12일 오후 4시30분경 대책위는 명동성당 농성텐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후 활동계획과 주요 공동대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책위가 밝힌 공동대책은 주요 정부기관방문,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에 대한 종합조사단 구성, 국제기관에 제소 및 헌법소원등이다. 집회에서 권용목(민주노동준비위)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불법채류자”나 ‘취업연수생’이라는 편법적인 이름사용을 중지하고, 정당한 노동자 자격을 제도적으로 부여하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정부측에 농성중인 외국인노동자 13

명에게 압수한 여권을 돌려주고, 농성자를 포함해 3만여명의 모든 취업연수생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당장 지급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소기업인력공급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인신매매행위를 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 연수협력단장과 동양인력개발 관계자를 구속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농성자들에게 대한 차후 신변보장과 재취업을 보장하고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편법적인 운영을 금지하는 제도적 감시장치를 마련해 민간단체의 감시와 평가를 받도록 하며 △외국인노동자 수입시 노동자단체와 사전협의

부산 유괴사건 현장검증 범행 불가능장소 판명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부산 만덕국교생 강영주(8) 유괴살인 사건에 대한 현장 재검증을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실시하였다.

이날 재판부는 “현장검증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살해 및 범행차량의 주차 장소에서는 범행이 불가능함을 증인들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살해 장소로 지목한 부산은행 평평동 지점과 조광페인트 가게 사이의 너비 5m 이면도로는 차량통행이 많은 대청로 5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열려진 공간이다. 또한 이곳은 상인들이 평소 주차를 엄격히 막고 있어 피의자들이 범행에 걸린 5분여 동안이라도 주차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라는 시각이 절대적이었다.

조광페인트 종업원 배용수(55)씨는 “이곳은 차를 주차시킬 수 없으며 차량이 1분이 멀다하고 다니는 데다 사람의 왕래도 많고, 특히 가게에서는 담배를 팔기 때문에 가게를 드나드는 손님들이 많아 살해 장소로는 알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태범 부장판사는 현장검증이 끝난 후 “피고인 이씨가 범행장소를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한 점, 범행이 이루어진 차를 주차시킨 곳이 바로 가게 출입문 앞이라는 점, 이 가게에서 담배를 함께 팔았다는 점 등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행사안내

□ 문익환 목사 1주기 추모 행사
추도기간-1월 12일(목)부터 1월 18일(수)까지 7일간
통일의 집 개방:문익환 목사님 유품 전시/비디오 상영
(수유리 고 문목사님 자택, 902-1623)

□민주열사 박종철 8주기 추도식 및 기념강연
1월 14일(토) 오후3시/홍사단 대강당(전화: 743-2511)
추도식-기념강연(김승훈 신부, 안상수 변호사)
○마석 모란공원 묘역 참배/1월 14일(토) 오전 11시
오전 8시30분까지 동대문 운동장 시계탑 앞에서 출발
○통도사 성전암 추도식/1월 13일(금) 오전 10시

□가해미군 소환 및 주한미군의 민족주권 유린 3차 규탄집회
오늘 오후 2시/ 장소: 용산 미군사령부 앞, 명동 일대
*미군사령부 집회 후 명동으로 이동해 시민 선전홍보 활동

<해오름 사건 1차 공판>

오늘 오전 10시/제주지방법원 1호 법정/고창덕 외 4명 국보법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

남매간첩단 사건 전면재수사. 국조권발동 요구

인권·사회단체 안기부 규탄시위

지난 10일 권영해 국가안기획부장이 김삼석·김은주 남매간첩단 사건의 조작을 폭로한 백홍용(씨)가 안기부 공작원이었다고 시인하면서도 “김씨 남매가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간첩”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사회, 인권단체 회원 50여명은 12일 대한극장 앞에서 항의시위를 가졌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이종욱),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등 사회, 인권단체 회원 50여명은 △남매간첩단 사건 전면재수사 △국정조사권 발동 △안기부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30여분동안 시위를 전개하였다.

작수사로 인한 조작사건이므로 규정하고 △국정조사권 발동 △안기부 수사권 폐지 △김삼석·석방등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에서도 남매간첩단 사건은 조작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발동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10일 국회에 제출 하였다.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단 4월경 한국일본 방문

지난 94년 8월 제46차 인권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 라디카 크마라스와 미(Ms. adhika Coomaraswamy, 스리랑카)씨가 4월경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첫 조사로 제 47차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할 Working Paper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대협은 원활한 조사를 위한 협조와 국제세미나 등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노조전임자 축소기도 반대 민주노총 준비위

12일 민주노동준비위는 정부의 공공부문 노조 전임자 수 감축한다는 방침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민주노동준비위는 성명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노조 전임자 수를 4분의 1일 감축하겠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전근대적인 처사”며 “노조활동에 대한 중대한 탄압 행위”로 규정짓고 이를 반대하는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정부당국에 대해 “노동조합의 전면적인 반발만을 초래할 공공부문 노조 전임자수의 일방적인

축소기도를 중단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인권소식

인도네시아, 독립요구 동티모르인 무차별구타 연행 엠네스티등 고문우려, 석방요구 편지보내기 운동 펼쳐

인도네시아가 무력으로 점령한 동티모르의 수도 딜리에 있는 동티모르대학교에서 시위하던 젊은이들이 인도네시아 보안군에게 체포돼 고문, 가혹행위등을 당할 가능성이 많은 가운데 엠네스티등의 인권단체들이 이들의 구원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엠네스티와 동티모르의 벗들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인도네시아의 무력강점에 반대하던 시위를 벌이던 24명의 젊은이들이 인도네시아 보안군에 체포되었으며, 이중 호세 안토니오 벨로(22)씨등 2명은 보안군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하며 연행됐다. 12일 현재 변호사의 접견은 물론 가족의 면회도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소제도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엠네스티는 1월 11일 긴급구원행동을 시작하는 공문에서 “24명의 동티모르 젊은이들이 딜리에 있는 동티모르대학교에서 동티모르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호세 안토니오 벨로(22)등 2명은 체포될 당시 심하게 두들겨 맞았으며, 이날 구금된 사람들이 가혹행위나 고문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의 신원, 구금된 장소등을 즉각 밝힐 것을 요구했다.

엠네스티는 “94년 11월 딜리에서 있는 시위 이후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증가했으며 인도네시아 당국은 자의적인 구금, 구타, 고문으로 대처했다”며 “변호사 접견과 가족면회도 허용되지 않은 채 전기고문을 당하기도 한다는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호수에 있는 동티모르 독립운동 지원단체인 동티모르의 벗들도 12일 호세 안토니오 벨로에 대한 긴급구원행동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세계각지의 인권단체에 보냈다. 동티모르의 벗들은 서한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벨로가 구금된 사실을 알릴 것을 요청하고 동티모르 지역 군사령관들에게 항의편지를 보낼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편지쓰는 요령으로 “이는 범위내에서 호세의 이름 적시 및 구속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정중하고 단호하게 이들이 조사받는 장소, 건강상태, 구금의 이유를 물을 것”을 요청했다. 또 “국제적십자사가 그들에게 접촉하는 것이 허락되었는지 여부”도 물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의편지 보낼 곳

*Chief of Sugianto Andreas(호칭 Dear Lieutenant-Colonel):동티모르지역 경찰책임자

*주소:Kapolda Timor Timur/ Dili /East Timor /Indonesia

*Military Commander for IX/Udayana(호칭 Dear Brigadier-General):동티모르 주둔군 사령관

*주소:Pangdam IX/Udayana /Markas Besar KO. DAM IX/Udayana /Denpasar /Bail, Indonesia

001달의 주제 - 고문>
 각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구금 등에 관련된 법집행 인사, 민간 또는 군 및 의회계 인사, 공무원 및 기타 인사들의 훈련에 고문금지제 관한 교육 및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고문방지조약 제10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운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오늘 박종철 열사 8주기

고문 책임자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고위 관련자들, 국회의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으로 활약

오늘은 박종철 열사의 8주기가 되는 날이다. 오늘 오전 11시에는 고인의 묘가 있는 마석도량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추모식을 갖고, 오후 3시부터는 대학로 홍사단 강당에서 제8주기 추모식과 기념강연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당시 박종철열사의 사인 은폐 기도를 폭로하여 6월항쟁의 기록책으로 만든 김승훈 신부(당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와 당시 주임검사였던 안상수 변호사가 증언하게 된다.

<인권하루소식>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문을 총지휘한 조한경 경위(당시 계급, 이하 동일)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관련자 중 유일하게 복역 중이지만, 다른 관련자들은 모두 석방되었다.

고문에 가담 머리를 욕조에 넣은 강진규 경사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92년 7월 가석방되었고, 양팔을 붙잡은 황정용 경위와 반금곤 경장, 상체를 욕조로 숙이게 한 이정호 경장은 87년 5월 21일 2차로 구속되어 황정용은 징역 5년, 심 경장은 징역 6

년, 이 경장은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황정용은 90년 12월 24일, 반정용은 91년 12월 가석방되었고, 이경장은 90년 5월 만기 출소했다. 이들은 모두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수사 2단5과2계 소속이었다.

당시 치안본부장을 맡았던 강민창(62)씨는 88년 1월 15일 구속되었다가 같은 해 3월 1심에서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90년 8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무죄선고, 91년 12월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 환송, 93년 4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93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강씨는 당시 박열사의 고문치사를 '심장소스'로 은폐,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강씨의 뒤를 이어 치안본부장을 맡았던 이영창(64)씨는 재임기간 중 고문경찰관 축소사실이 드러나 4개월만인 87년 5월 27일 사임했다. 그후 이씨는 90년부터 91년까지 주택공사 이사장을 맡았고, 92년 14대 총선에서는 민자당 경북 경산, 청도 지역에 출마

당선되어 현재 민자당에 적을 두고 있다. 서동권씨(62, 당시 검찰총장)는 6공 때 제7대 안전기획부장과 청와대 비서실 정치담당 특보를 지냈고, 현재는 동서법률문화연구소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성기씨(59, 당시 법무부장관)는 87년부터 91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91년부터 93년까지는 주택은행 이사장을 맡았고, 현재는 중앙종합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정구영씨(56, 서울지검 검사)는 6공 때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제23대 검찰총장을 거쳐 현재는 진로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고문 사실을 은폐, 축소토록 지시한 책임자나 지휘 책임을 지고 있던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변신에 성공하여 다시 사회의 지도급 인사로 활약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종철 열사의 부친 박정기(65) 유가족 회장은 "역대 정권이 고문책임자들에게 대해 너무 관대하게 대했기 때문에 아직도 고문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직접 고문을 행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책임자들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2면에 박정기씨 인터뷰)

재판부 증인 재구인 예정 '샘' 사건 재판 연기

고등학생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의 회장인 고영국씨의 7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10단독(판사 홍경호)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사측 증인인 정민아씨가 출두하지 않자 재구인을 하기로 했다.

정민아씨는 94년 9월 2일 저녁 8시 30분경 집에서 어머니와 식사도중 3명의 형사들에 의해 영장없이 연행당해 48동안 조사를 받았고, 8차 재판 2월 27일 4시.

구독료 납부를 자동이체로!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십시오. 은행에 한번 가서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으면 매달 번거롭게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동이체 구좌 안내>

제일은행 128-10-131017	상업은행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은행 438-06-016840
외환은행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은행 112-182999-12-001	하나은행 105-106617-00107
신한은행 355-02-035530	국민은행 015-21-0723-021

인권운동사랑방 제1기 공개 강좌 두번째 강의

주제: 국제인권법 및 세계인권선언
 강사: 박원순 변호사
 오전 11시, 수강료는 4천원

노예노동 공식사과 못해 노동부 직원 외국인 노동자 농성장 방문

외국인취업연수생 농성장에 이홍지 노동부직업안정국장등 노동부 직원 7-8명이 농성자 13명의 여권과 월급을 협상하러 했으나 무산되었다고 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소장)씨는 전했다. 13일 오전 10시경 이 직업안정국장등 7명 농성자들은 여권등을 받기에 앞서 공식사과와 취업연수생 2만여명의 전액계약, 신체이동의 자유 보장,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자격인정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 직업안정국장은 "이렇게 나오면 이후 신변보장을 못하겠다"며 화를 낸 채 돌아갔다고 한다.

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농성장을 방문해 취재해 간 로이터 통신 측에 의하면 내팔등 여러 나라에서 정부측에 항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보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국인노동자취업연수생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을 계기로 취업연수생 제도의 심각성을 짚어보는 보도가 MBC-TV '시사매거진 2580'과 'PD수첩'에서 집중보도할 예정이다.

수사재판권 거부 미군당국에 항의 미군사령부, 명동에서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재판권 거부를 둘러싼 지속적인 항의집회

죽도록 일해주고도 도망자로 쫓겨

그리스도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땅에서 종이 된 것 같이 우리들도 한국 땅에 팔려와 종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 땅을 위해 수십억 원의 이윤을 남겨주었지만

이 땅의 백성은 우리가 땀흘린 만큼의 노임조차 지불하지 않으며, 공장 밖으로조차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고 감금을 합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것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다니며 온갖 매를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도, 시민단체도, 노동조합도, 학생도,

정부도, 아무도 우리를 위해 신원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 사회는 우리를 도망자라 부르며 경찰은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죽도록 일해 주고도 범죄자가 되어 숨을 쉴 수조차 없나이다.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께 호소하노니 우리의 신원을 들으사 이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노예생활에서 구원하소서. 아멘

---(편집자 주) 이 시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외국인취업연수생들이 대자보를 쓴 것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가 용산 미군사령부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조차 거부하는 미군당국의 오만한 태도의 근본 원인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13일 오후2시 용산 미군사령부앞 3차 규탄집회에 서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회원단체와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학생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항의내용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미군부대 안으로 날려 항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오후4시 명동일대를 돌며 시민홍보전을 펼친뒤 제일

고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65) 유가족 회장씨 인터뷰

경찰관들에 대한 인권교육 절실

-통도사 성전은 어땠는가? 벌써 8주기가니 심정이 착잡하다. 통도사의 성전에는 부산의 민가협과 부산연합 등 재야단체에서 30여명이 참가했다.

-고문방지조약에 정부가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김삼석 남매 사건에서처럼 프락치에 의한 조작, 고문에 의한 조작이 행해지고, 부산경찰서에서 일어난 고문사건 등으로 봐서 아직도 광범하게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고문금지 대책을 세워야 고문방지조약 가입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문국진과 함께 모임」의 대표로 1년 넘게 활동했는데, 성과가 있다면?

문국진씨를 비롯한 고문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김영삼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국진씨와 관련 활동을 고문피해자의 문제를 세상에 제기한 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고문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겠는가? 고문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경찰관, 수사관들에게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고문을 하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아직도 이근안을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국민들도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문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각별히 인식해야 한다. 종철이 죽었을 때 얼마나 고문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고 얼마나 외쳤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피해, 직접적인 고문이 안 보인다고 이제는 옛날의 기억마저 다 잊고 지내서는 고문은 없어질 수 없다.

스스로의 인권을 지키려는 자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게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이달의 주제 - 고문>

각 당사국은 여하한 경우의 고문도 방지하기 위하여 체포, 억류 또는 수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구금 및 처우에 관한 제도, 심문규칙, 지침, 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고문방지조약 제11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서약서 강요는 기본적 인권 침해

서강대 재학생 86%-"서약서 작성 자체 부정적"

서강대학교(총장 박홍)가 신입생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좌경거부 서약서'를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후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서약서에 지원자들은 지난 13일 면접에서 수험생들은 서약을 해야 했다.

서강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심성필)는 16일 서약서 파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재학생 284명에게 조사한 바로는 '서약서 작성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6.6%(2백46명)이고 '서약서 작성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7.3%(24명)이며 '판단할 수

없다'는 학생은 6%(17명)이다. 또한 서명 무효화 처리에 대해 76%(2백15명)는 찬성했고 6.6%(26명)는 반대했다.

신정훈 부총학생장은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재학생의 상당수는 '학교의 방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서약서는 모두 회수되어야 하며 수험생의 합격여부를 좌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은 어떠한 곳보다 자신이 가진 사상을 가지고 토론, 연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험, 실천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강대 대학원 사회학과 학생들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여름부터 언급되어온 '주사파'내지는 '좌경폭력혁명'의 개념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학문의 자율성과 사상, 표현의 자유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면접상황에서 약자일 수 밖에 수험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서약서를 어기고 활동할 경우 징계처리하겠다'고 언급한 사실(1월13일 MBC뉴스데스크 보도)은 교육의 또 다른 주제인 학

생들에 대한 잠재적 폭력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약서 내용이 전체 교수회의에서 승인된 것인지 그 과정 및 사실여부와 더불어 이것이 전체 교수들의 공동된 의견인지 알고 싶다고 요구했다.

한편, 인권단체는 오늘 아침 8시 30분에 '서강대 입시 서약서 파동에 관한 인권단체 항의시위'를 서강대 정문앞에서 갖고 성명서를 발표한다.

<문제의 서약서 내용>

2. 본인은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고, 계급투쟁을 통한 좌경폭력혁명에 어떠한 형태든지 가담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995. 1. 13.

지원자: _____ (서명)

서강대 박홍 총장 전화 인터뷰

항공기 탑승자의 무기를 검사하는 것은 당연

서약서에 서약하지 않았다면 불합격 처리할 것인가?
- 물론 그렇게 할 것이다.
서약서에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90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협약)의 제18조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저촉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립학교는 그래서 안 되지만 사립학교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총장님은 신앙인인데, 신앙인의 입장에서 서약서가 수험생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소지했는지 검사해야 한다.
"대학은 자신이 가진 사상을 토론, 연구하며 실험, 실천하는 장이어야 한다"는 서강대 총학생회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동의한다. 김일성 주위니 주사파, 프롤레타리아트 사상이 얼마나 나쁜지 토론해야 한다.

1월 14일 한겨레 신문 보도에 대한 입장은?
- 아예 그런 류의 기사를 실을 거면 인터뷰할 가치도 없다.

정부의 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은 미봉책일 뿐

외국인 취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9일째

목다지음씨등 외국인연수생 13명은 "취업연수생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개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푸루소탐 랄쉬레스타 주일 네팔대사의 제안을 거부했다. 오늘로 농성 9일째를 맞는 농성자들은 15일 방한한 주일 네팔대사와의 5시간 가량의 3차 면담에서 "모든 외국인 연수생들이 한국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 자격을 갖는 내용으로 전면 재계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우현(민주노동 정책위원)씨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이 정부측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있다"면서 이번 문제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20일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국)씨는 "2백10불을 받고는 연장근무를 할 수 밖에 없다. 옷 하나 사입을 수 없을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면서 정부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실무자는 "그렇게 영세한 곳도 있다. 그러나 모두 그렇다고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대꾸하기도 했다.

3차 면담 결과 역시 1,2차 면담결과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알려졌는데 2차 면담에서 네팔 대사는 "연수과정에서 2백10불을 받아도 괜찮다. 농성자들이 조건에서 일하지 못하는 것은 불평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농성자들은 농성이 13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외국이 노동자들의 문제이며 불법체류자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한국정부가 체포한다면 체포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 신문 네팔인 명동성당 농성 크게 보도

15일자 아시아신문은 "한국의 이주노동 약속이 다르다"는 제목의 기사를 사진과 함께 집중보도했다. 아시아신문은 네팔인 13명이 항의농성에 들어갔으며 농성이 크게 보도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경영자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단순작업이 연수의 실태이며 임금을 주지 않고 외출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수생의 노동기본법의 전면적용등 근본적 대책이 없으면 현재의 연수제도는 거꾸로 불법노동자의 공급원으로서 기능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는 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소장)씨의 인터뷰를 실고 있다.

불법체류자와 고용업체 단속 강화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인연수협력단은 1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인연수생의 연수소장 및 상해보상액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처우 개선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연수생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법체류자와 연수생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송출기관의 연수수당 관리 방법 개선등 관행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한 불법체류자 및 고용업체 단속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연수장소 무단이탈 연수생 검거를 위한 포상제 실시, 불법체류자 고영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유관기관간

공조체계 강화등을 들었다. 유엔 51차 인권위 모니터 위해 출국 이성훈씨 인권협 대표로

'인권운동사랑방' 이성훈(33)씨가 제네바에서 열리는 51차 유엔인권위원회 회기 연수를 위해 14일 출국했다. '국제인권봉사회'(ISHR)에서 매년 1월마다 여는 유엔인권위 인턴쉽 과정참가는 작년 장소영정 등을 골자로 하는 처우 개선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연수생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유엔인권위 모니터 활동에 앞서 ISHR에서는 16-27일까지 연수생을 대상으로 유엔실무분과에서 방법 개선등 관행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한 불법체류자 및 고용업체 단속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연수장소 무단이탈 연수생 검거를 위한 포상제 실시, 불법체류자 고영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유관기관간

공판안내

- 1월 17일(화) 10시, 박순봉, 형사 424호(9단독), 국보법 위반 등, 선고 10시, 홍승문, 형사 319호(23부), 국보법 위반, 2회 2시, 김용우 등, 형사 317호(1단독), 국보법 위반등, 속행 2시, 박병철 등 형사 318호(25부), 국보법 등, 1회
- 1월 18일(수) 오후2시, 고법 403호(4부), 박한상 등, 존속살해 등 오후3시, 안우춘 등, 형사 321호(6단독), 국보법, 속행 오후2시, 신순범, 형사 422호(5부), 정치자금법, 선고 1월 19일(목) 오후2시, 고법 309호(3부), 김기환 등, 강도살인 등 10시, 민사 559호(민사합의13부),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국가손배소송 오후2시, 이문옥, 형사 418호(4부), 공무상비밀누설, 속행 1월 20일(금) 10시, 한규한 등, 311호(23부), 국보법, 1회

오늘의 행사

- △늦봄 문익환 목사님 1주기 추도예배 오후 7시/기독교연합회관 2층
- 주최: 늦봄 문익환 목사님 1주기 추도위원회
- △김인서 함세한 김영대 비전향 장기수 고향 방문을 위한 불교인 서명운동 발대식 및 기자회견 오후 2시/종로3가 대가사 대웅전
- 주최: 불교인권위원회(전화: 745-1852)

구독료 납부는 자동이체로!

<인권하루소식>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자동이체 신청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의 "서준식" 명의로 개설된 온라인 계좌번호 중에서 자신이 개설한 통장과 같은 은행의 온라인 계좌번호와, 자신의 통장,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 은행에 가서 회비 약정액과 자동이체일을 신청하시면 한달 후부터 가동됩니다. 1월중으로 자동이체를 꼭 신청하시고, 1월분은 귀찮더라도 1월중으로 꼭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한번 가서서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으면 매달 번거롭게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이체 계좌 안내>

- 예금주: 서준식
- 제일은행 128-10-131017
- 상업은행 431-07-056582
- 농협 011-01-404581
- 조흥은행 438-06-016840
- 외환은행 057-18-33811-7
- 우체국 013292-0011731
- 한일은행 112-182999-12-001
- 하나은행 105-106617-00107
- 신한은행 355-02-035530
- 국민은행 015-21-0723-021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전면 백지화 요구

격렬 시위 후 굴업도 주민 김계월씨 사망

오는 2월초 정부의 핵폐기장 확정 고시를 앞두고 핵폐기장으로 선정된 경기도 용진군 덕적면(덕적면 서포1리가 굴업도임-편집자 주) 주민들과 환경운동단체들의 반대투쟁이 시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던 김계월(62, 여, 경기도 용진군 덕적면 서포1리) 굴업도 주민이 사망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김씨 등 덕적면 주민 300여명은 서울로 올라와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사직공원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굴업도 핵폐기장 결사반대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다시 인천에 있는 온진군청에 몰려가 "덕적면민의 70%가 핵폐기장에 찬성한다"는 13일 오전의 TV 보도에 대한 온진군청의 보도 확인을 요구하며 오후 5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들 주민 중 100여명은 군청 군수실에 들어가 군수면담을 요구했고, 경찰의 차단으로 미처 군청에 들어가지 못한 주민 200여명은 온진군청 담 바깥 인도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농성을 벌였다. 군청 밖의 주민들은 서너차례 군청 진입을 시도하였지만, 그때마다 경찰의 강력한 저지로 인해 방패에 밀려 집결이 넘어져 깔리는 일이 반복되었다.

온진군청 앞의 시위를 마치고 막내딸 집으로 귀가하던 김계월씨는 13일 오후 10시 20분경 현관 앞에 쓰러져 급히 인천 길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 10시 40분경 바로 사망했다. 함께 시위에 참가했던 주민

들은 김씨가 "온진군청 앞 전경과의 대치에서 맨앞에서 여러 차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넘어지기도 하였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분개하고 있다. 이날은 사망한 김씨의 62회 생일이기도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유족, 덕적면 주민, 환경운동단체 회원들은 김씨의 주검이 안치된 인천 길병원에서 농성을 하며 △핵폐기장 건설 전면 백지화 △김계월씨의 죽음에 대한 정부의 공개사과 △내무부,과기처, 공보처 장관의 해임 △인천 경찰청장과 온진군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한편, 덕적도 주민 2백여명은 김씨의 사망과 관련 14일 오후 1시 인천시 중구 답동 소재 가톨릭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과잉진압 책임자의 처벌, 굴업도 핵폐기장 백지화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4시간 30분 동안 동인천역 앞과 온진군청 앞 대로 등을 점거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서주원(36)씨 등 환경단체 실무자 4명이 연행되었고, 15일 현재 서씨는 훈방되었으나, 나머지 3명은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15일 오전 길병원에서 김계월씨에 대한 사체 부검을 실시하여 김씨가 스트레스, 강박관념등의 작용에 의한 심장주위 혈관의 파열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부검 결과를 추정 발표했다.

김씨는 사망 5일째인 오늘 8시반 길병원에서 발인하고, 10시 온진군청 노제,

12시에 인천항에서 배편으로 굴업도에 도착하여 안장된다.

고 박종철 열사 8주기 추모식 엄수

지난 14일 오후3시에 홍사단 강당에서 '박종철 열사 제 8주기 추모 및 기념강연'이 '박종철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신장균 전국연합고문, 김승훈 박종철기념사업회 회장, 유가협, 민가협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8년전 고문으로 희생된 박종철 열사의 뜻을 기리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부 기념강연에서 김승훈(여의도 성당 주임신부) 박종철기념사업회 회장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문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것은 우리를 고무시킨다"면서도 "조약의 핵심적 내용인 두 선택 조항을 수락하지 않은 점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당국의 재고와 올바른 국회 심의를 촉구하였다. 또,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이 법률의 적용으로 감옥에 갇혀 있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석방등의 배려가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시급한 사안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연에서 "고문이 근절되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정치 관행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은 님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는가?"고 묻고, "죽어간 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고문이 없는 사회,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또한 국가와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 주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단한 안상수 변호사(당시 고문치사 사건수사검사)는 "당시 부검을 하자마자 박군이 물고문을 당하던 중 옥조터에 목이 눌러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범인 3명이 더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당혹감과 절망감을 느꼈다고 술회했다. 당시 고문치사 은폐, 조작사실을 재야세력이 은인이 되어 이를 폭로함으로써 이들을 구속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박종철 열사의 기념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전개할 것과 정부가 하기 전이라도 재야세력이 모금운동을 벌여서라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마석에 있는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는 재야인사와 학생 등 약 100명의 추모객이 박종철 열사의 묘역에 모여서 그의 뜻을 기렸다. 한편, 박종철기념사업회는 지난해 연말 운영위원회 열고 지속적인 반고문운동의 전개, 박종철 열사 추모관의 건립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당시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던 인사들을 적극 영입하고 회원을 다시 모으기로 하였다.

WSSD 3차 준비위 민간단체 대표 출국

미국 뉴욕에서 16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유엔 사회개발정상회담(WSSD)' 제3차 준비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해 참여연대 이대훈 사무국장등 4명이 15일 출국했다. 이들은 주요 민간단체 네트워크 동향을 파악하고, WSSD 논의의 진행상황과 민간단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또, 이들은 한국사회발전 상황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인권의 향상을 강조한다.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 - 고문>

각 당사국은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조치를 받으며, 가능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을 포함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자국의 법체계 내에서 보장한다. <고문방지조약 제14조>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좌경거부 서약서 강요는 종교·사상·양심의 자유 위배 인권단체 서강대 앞 시위, 박홍 총장과 면담 시도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연합 인권위등 인권단체 회원 15명은 17일 오전 8시30분경 서강대 정문앞에서 서강대측이 신입생들에게 좌경거부 서약서를 강요한데 대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날 8개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서강대의 좌경거부 서약서 강요를 명백한 인권침해로 고발한다"면서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각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안옥희(61, 여, 민가협 공동의장)씨는 "박홍 총장 뒤에는 김영삼대통령이 있다. 지난해 여름 주사파 파동에 이어 계속 뒤에서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고상만(전국연합 인권위)씨는 "서강대가 점차 반공대학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 서강대 학생들은 학교의 명예가 먹칠되어 가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교문 앞 시위에 이어 9시 15분경에는 교내로 들어가 박홍총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박홍총장의 부재로 이뤄지지 못했다. 민가협 등 2시간 가량 문을 두드리며 학교직원, 경비원들과 실경이를 벌였다. 이날

학교 교문 앞에는 전경들이 대기 중이었지만, 경찰과 마찰은 없었다. 한편, '서강대 총장실 유리창 투석사건'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마포경찰서 경찰측은 학생간부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학생회, '서약서 되돌려받기' 전개

서강대총학생회는 17일 학교측에 공문을 보내고 서약서의 무효화와 이번 사건으로 '서강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총장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공문에서 ▲서약서는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강제적일 수 밖에 없으며 ▲가톨릭 서약은 종교의 자유에 명백히 위배되고 ▲학문·사상의 자유를 무시했으며 ▲서약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자의적 판단을 할 우려가 있고, 약용의 소지가 있다는 등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서약서를 무효화할 것과 신입생들과 함께 서약서 되돌려받기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며 우선 19일 오후3시 농구장 회원들은 잠진 총장실 앞에서 '새내기 새로 배움터' 문제와 서약서 파문문제에 대한 규탄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체불임금전액지급 주 44시간 근무등 합의 네팔 노동자 농성해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네팔인 노동자 13명은 17일 오후 11시 농성을 풀고 '외국인 노동자피난처'로 돌아갔다. 이들은 오후 3시 30분 명동성당 구내 문화관에서 세레스타 주일 네팔대리대사의 중재로 박상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과 협상하여 8개항에 합의하고 농성을 풀었다. 이들은 협상에서 △체불

임금 전액지급 △여권의 반환 △직장의 재배치 △주 44시간 근무준수 △월 기본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등 8개 항목에 합의했다. 이로써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은 9일만에 일단락되었다.

이에 앞서 17일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근본적인 철폐와 한국 노동법에 따른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라"는 주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 13명의 네팔인들은 "한국인과 같은 법적 보호를 원할 뿐 결코 한국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월급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9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시작된 이들의 농성은 '외국인 취업연수생 제도'의 정책변경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반, 이를 계기로 민간단체의 공동 대책이 구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구독료 납부는 한번의 자동이체로!

<인권하루소식>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구독료 납부를 자동이체로 바꾸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은행과 중 가장 편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같은 은행의 온라인 구좌번호와, 자신의 통장,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 은행에 가서 회비약정액과 자동이체일을 신청하시면 한달 후부터 자동됩니다. 1월중으로 자동이체를 꼭 신청하시고, 1월달 구독료는 종전대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한번 가서서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으면 매달 번거롭게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이체 구좌 안내>

예금주 : 서준식	
제일은행 128-10-131017	상업은행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은행 438-06-016840
외환은행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은행 112-182999-12-001	하나은행 105-106617-00107
신한은행 355-02-035530	국민은행 015-21-0723-021

인천 핵폐기장 시민대책위 구성

인천 환경단체와 목요회 등 시민단체는 굴업도 핵폐기장 문제에 인천시민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는 24일 경기관행 본점 대강당에서 「인천 앞바다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저지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범시민대책위원회에는 인천지역의 시민, 사회단체가 망라되어 광범하게 구성된다.

한편, 지난 13일 핵폐기장 반대투쟁 후 사망한 굴업도 주민 김계월씨에 대

한 장례가 유족의 반대로 노제등을 생략한 채 17일 오전 오전 10시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편으로 굴업도로 옮겨져 가족장으로 치워졌다. <인권하루소식> 1월 17일자 참조

여성의 전화
신임회장 신혜수씨 선출
 「한국여성의 전화」는 14일 제4차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회장으로 신혜수(전주한일신학대학교 교수46)씨를 선출하였다. 「한국여성의 전화」는 전국의 8개 지부를 확대, 강화하고 아내구타와 아동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칭)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했다.

인권보다 우선하는 현실정치의 논리

불교인권위, 비전향장기수 송환 위한 서명 시작

현실정치의 논리와 인권의 잣대는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 인권의 보편성은 정치적 구호에 파묻혀 진정한 빛을 발휘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94년 12월, 일본에 있는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들의 송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모임」(회장 최일수)에서는 「대한적십자사」(총재 강영훈) 앞으로 세 노인들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17일 대한적십자사 이산부 관계자는 “인도적 차원에서 물론 보내주어야 하지만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정부는 남한정부에게 비전향장기수를 석방, 송환하라고 요구하지만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동진호동 남북자들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고 <인권하루소식>과의 통화에서 밝혔다.

한편, 17일 2시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는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비전향 장기수 고향방문을 위한 불교인 서명운동’을 대가사에서 가졌다. 불교인권위원회는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선생의 고향방문은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의 물길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밝히며 “그러나 정부는 세계화라는 공허한 외침만 부르짖을뿐 남북관계의 화해와 공존의 통일시대를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분들의 고향방문이 인도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차원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서 노인은 51년 지리산에서 체포, 3번에 걸쳐 총 33년 7개월을 복역, 사회안전법 폐지후 89년 10월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출소. 함세환 노인은 53년 속리산에서 총상을 입고 체포, 73년 만기출소하였으나 75년 비전향장기수라는 이유로 청주보안감호소에 재수감, 14년 만인 89년 8월 출소. 김영태 노인은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가했다가 빨치산 활동중 54년 체포, 71년 만기출소하였으나 75년 사회안전법으로 15년간 복역하고 89년 출소하였다.

고 박종철열사 8주기 추모 및 기념강연

안상수 변호사 강연 요지(발췌)

물고문을 당하다 옥조턱에 눌러 사망

부검을 하자마자 시인을 알아내
 8년전인 97년 1월 15일 그 운명적인 날에는 저는 검사로서, 박군은 싸늘한 시신으로서 서로 비극적으로 만났습니다. 박군은 시신의 주검을 가지고 저에게 무엇인가 호소했고 당시 부검의인 황적준 박사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부검에 임하므로써 그가 몸으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검을 마치고 나서 바로 박군이 물고문을 당하던 중 옥조턱에 목이 눌러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검을 하자마자 시인을 알아낸 것입니다.

저는 범인들에 대한 1차 수사를 마치고 조한경, 강진규 등 범인 2명에 대하여 기소까지 끝낸 다음 87년2월말경 조한경, 강진규로부터 범인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당혹감, 절망감은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범인 3인의 추가기소는 재야민주세력의 폭로 덕분
 추가로 확인된 범인 3명을 구속하기 위해 저희 수사팀이 겪은 고통과 좌절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것이었고, 저간의 자세한 내용은 며칠후 동아일보에서 출간될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는 저의 저서에서 상세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 위기상황에서 검찰을 구해준 것은 아니러니할까해도 이부영, 김정남, 고영구씨 및 함세웅, 김승훈 신부를 포함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이른바 민주재야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87년5월18일 경찰의 범인은너 사실을 터뜨려 주지 않았다면 검찰은 그렇게 신속히 범인 3명을 추가로 구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종철군에 대한 기념사업 전개해야
 정부는 박군 사건으로 촉발된 6월항쟁의 거룩한 이념을 계승한 정부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군 등 민주인사들에게 명예를 부여하거나 기념사업을 전개하는데 너무나 소홀하므로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 민주협외장등으로 27추도회부터 6.29선언에 이르기까지 박군사건으로 촉발된 6월항쟁을 주도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따라서 저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비장한 죽음을 통하여 오늘의 문명정부를 있게한 박군에 대한 기념사업부터 전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이 일을 하기 전이라도 뜻있는 사람들이 대학별 또는 재야단체별로 모여서 모금운동을 벌여서라도 기념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사들도 당연히 그 정의로운 일에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 오늘의 행사 □

- △늦봄 문익환 목사님 1주기 추모식
 - 오후 2시/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 (오전 11시30분 동대문운동장 주차장에서 대절 버스 출발)
- △문익환 목사 1주기 추도의 밤
 - 오후 6시 30분/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종로5가)
 - 1부-추도식/2부-추모공연

<이달의 주제 - 고문>

각 당사국은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조치를 받으며, 가능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을 포함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자국의 법체계 내에서 보장한다. <고문방지조약 제14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 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 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서 위헌제청 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제사회의 자유, 그룹(IS) 활동과 관련된 구속, 기소된 정은경(전대우정밀노조 여성부장, 26) 피고인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보류하고 직권보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 전복을 유도 선동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상의 견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를 허용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존재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표현에 대해서 형벌을 과할 수 있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 뿐더러 의사표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띠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입증된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3,5항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규정 등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월성을 바탕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넓히면서 사상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 세계화를 향하여 나아가 과거와 달리 사상의 포용성을 넓혀도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이 위협받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91년 개정된 국보법이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는 90년 4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원」 결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논평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는 18일 부산지법의 국가보안법 위헌제청 심판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내릴 것 △모든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재판에 계류중인 모든 양심수를 직권 석방할 것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등을 촉구했다.

또,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이번의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제청'이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찾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본래의 의무를 수행하는 첫발”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노력을 계속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독료 납부는 한번의 자동이체로!

<인권하루소식>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구독료 납부를 자동이체로 바꾸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은행구좌 중 가장 편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같은 은행의 온라인 구좌번호와, 자신의 통장,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 은행에 가서 회비 약정액과 자동이체일을 신청하시면 한달 후부터 자동됩니다.

1월중으로 자동이체를 꼭 신청하시고, 1월달 구독료는 종전대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한번 가서서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으면 매달 번거롭게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이체 구좌 안내>

- 예금주 : 서준식
- 제일은행 128-10-131017
- 상업은행 431-07-066582
- 농협 011-01-404581
- 조흥은행 438-06-016840
- 의협은행 067-18-33811-7
- 우체국 013292-0011731
- 한일은행 112-182999-12-001
- 하나은행 105-106617-00107
- 신한은행 355-02-035530
- 국민은행 015-21-0723-021

◆ 행사 안내 ◆

- 농촌지역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일시: 1월19일 오후2-4시
 - 장소: 가평 관광호텔(☎ 0356-81-0606)
 - 주최: 「두밀학교살리기연대모임」
 - 발제: '농촌교육의 문제와 과제'(최현섭 강원대 교수)

“곰보얼굴에” 화장으로 덧씌운 꼴”

정부측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외국인노동자 기술연수생들의 텐트농성이 17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박상규회장과 합의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나 기술연수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다.

17일 오후2시30분경 가진 기자회견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은 내팔대사의 말에 불신을 나타내며 면담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전해 농성장기와의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날 저녁 상황은 농성해제로 돌변했다. 오후3시부터 6시간 이상의 긴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일부에서는 ‘질려서’ 합의하게 된 것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합의를 마친 뒤 농성장안은 기쁨보다는 침울한 분위기가 었다고 이은섭(원간 「복음

과 상황」씨는 말했다.

이번 합의결과에서 나타난 한계로 지적되는 점은 정부의 개선안이 여지껏 내팔노동자 13명이 요구해온 한국인들과 동일한 법적보호를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한 외국인 기술연수생제도의 근본적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들이 정부로부터 얻어낸 것은 ▲여권반환과 자유로운 행동보장 ▲재취업보장 ▲밀린 임금 지급 ▲업무상 질병재해시 보상 및 치료 등이다. 이밖에도 서울민사지법은 3일부터 외국인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전담재판부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무영(구리노동자상담소)씨는 합의결과를 두고 “얼굴이 얼그러진 곰보가 성형수술을 원했으나 화장만을 해준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요

구하는 농성자들에게 ‘제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입막음 한 정부의 도덕성 시비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텐트농성을 계기로 시급히 구성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의 활동에 쏟아지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박무영씨는 “30여개 시민·종교·노동단체가 모였으나 긴박한 상황에 맞춰 기동성있게 대처하지 못했고 장·단기 목표를 세우지 못한 채 끌려온 점등은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9일간의 농성으로

‘외국인기술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표면화시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법무부, 노동부등 정부기관에서 문제점을 시인한 것은 의미를 지닌다고 농성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그러나 여권을 연수생 개인에게 돌려주겠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연수생의 사업장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사업주들의 반응에서 그나마 약속한 개선책도 얼마나 실현될지는 의문이 든다.

용역강패 노점상 덮쳐 사당동 노점상 4명 부상

18일 오후 2시경 노점상들이 관악구청과의 면담을 하러 대기하던 중 용역강패 100여명이 노점상들을 덮쳐 무차별하게 폭행하여 노점상 4명이 중상을 입고 강남고려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에 항의하던 노점상 5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부상자 명단 : 이연희(46, 여, 장과열), 이정평(44, 목디스크), 명노수(48, 전신타박 및 다리 골절상), 김순임(46, 여, 전신타박 가슴에 심한 부상)

외국인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일지와 상황(95년 1월 9일~17일)

- ▶ 9일(농성 1일째)
 - 목타 지명씨등 13명 내팔노동자와 국내 노동단체 회원등 50여명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 개선, 감금·폭행 일삼는 사용자 처벌”등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돌입
- ▶ 10일(농성 2일째)
 - 서울지검공안2부(정진규부장판사) 외국인기술연수생 관련해 공장의 감금·폭행사실과 임금체불 여부 조사를 경찰에 지시
 - 경기 광주경찰서 내팔인노동자 성폭행한 공장장 기현석씨 강간치상 혐의로 긴급구속
- ▶ 12일(농성 4일째)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 ▶ 13일(농성 5일째)
 - 서울지검 특수1부 필리핀노동자의 임금 횡령한 세한 교역대표 김도현씨와 불법취업을 알선한 오해택씨 업무상 횡령과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 내팔인 노동자 폭행혐의로 인력개발회사 대표 전영수씨 구속
 - 이밖에도 검찰은 국내 22개 인력관리업체 중 2개업체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을 횡령한 혐의 있어 추가수사 벌이고 있다고 발표
 - 외국인노동자에게 폭력휘두른 실업노동자 주씨 입건

- ▶ 14일(농성 6일째)
 -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검사) 외국인노동자 소개비 갈취한 인력송출회사 허명민, 김문석씨 구속
 - 김영태·장덕필신부, 이태복(노동자신문)사장등 이형구 노동부장관 방문
 - 공대위 긴급대책회의 갖고 노동부장관과의 교섭 시작키로 결정, 16일 고위관계자 만나 교섭 위한 최종 입장 정리하겠다고 밝힘
 - 공대위 내팔정부와 국민, 연수생 가족들에게 공식사과문보내기로 결정
- ▶ 15일(농성 7일째)
 - 푸투쇼탈 랄 쉬레스타 일본주재 내팔대리 대사 김포공항 도착, 내팔노동자 13명과 비밀 면담 두차례 가짐
- ▶ 16일(농성 8일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내팔대사 배석한 가운데 “기본연수 수당 통일, 보험 혜택 산재보험수준으로 확대” 내용의 대책안 발표
 - 내팔대사와 내팔 노동자 3차면담
 - 공대위 관계자들 정부와 농성해제 논의 등 협상경과 발표 기자회견
- ▶ 17일(농성 9일째)
 - 내팔대사와 4차 면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상규회장과 서약서 서명된 농성해제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전략)먼저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등 여러가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국가기본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세삼스럽게 설명할 필요 없이 자유와 평등이고 그것은 개인의 인권과 인격의 존중에 밀바탕을 둔 것으로 집단보다는 개인에게서 더 높은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의사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가치표현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민주적 정치참여의 권리확보라는 측면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경쟁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사회에서만 진전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한 시대 또는 한 사회에서의 기존의 진리와 가치는 사상의 자유경쟁과 도전을 거쳐 새로운 진리와 가치로 발전 또는 창조되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역사의 발전과정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새로운 진리와 가치의 발전과 창조는 때로는 기존의 진리와 가치를 부정하고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존의 사상 이념에 반한다 하여도 무조건 배척하거나 억제할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유해한 사상과 이념이라도 가급적 자유경쟁의 시장에서 비판하고 도태되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건전한 국가와 사회체계의 기초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표현의 자유를 그 대표적 징표로 삼고 심지어 기존의 사상과 가치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의 표현에 대해서조차도 관용을 베푸는 것은 사상의 경쟁을 통하여 민주주의사회의 건전한 보전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의 질서와 체제 자체를 파괴하려는 행위까지도 관용하려는 것은 물론 아니며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 밖에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의 규제는 자유민주주의 자체의 방어를 위하여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기존질서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사상·의견을 표명한다는 것도 기존질서에서 볼 때에는 매우 불쾌한 공격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폐지·전복을 유도 선동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즉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상·의견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존재이유인 것이다.

민주주의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다양한 사상, 다양한 생활방식 즉 다원성이 보장되는 사회로서 우리 헌법 또는 국민들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보장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널리 인식되어 있는 바이때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필수불가결하고도 전체가 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정치국가라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가지 기본권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며 그러기에 의사표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 뿐더러 의사표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띄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중략).

피고인은 노동자로서 우리 사회현실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보다 나은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해 고민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정치적인 조직 모임을 가지고 토론하고 기존의 체제와는 상반되는 노동자당을 건설하고자 했다(중략). 피고인은 현재의 북한사회도 노동자들의 혁명이 필요한 왜곡된 사회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비록 목표달성을 위한 현재 가능한 수단으로서 과격한 방법을 내세우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 혁명의 구체적 실현을 준비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고 자신들이 가지는 생각들에 관하여 서로 토론을 거듭한 순수이념단체적인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표현이 우리에게 당혹스런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중략).

국민의 지지와 정당성을 갖추고 문명정부가 출범한 이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현재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바탕으로 과거와 달리 북한과 교류협력을 넓히면서 사상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 세계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현시대의 변화에 비추어서도 지금은 과거와 달리 사상의 포용성을 한층 더 높여도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이 위협받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바, 서구의 여러 선진민주국가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회당이나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세계화를 향한 시점에서 이러한 사정 또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중략).

개정조항등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어느 정도 수용한 면은 있으나 여전히 “구성원”, “활동”, “동조” 등의 용어가 남아 있어 기왕에 논의되었던 위헌의 시비를 아직까지도 불식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란 모두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기왕의 위헌소지를 줄이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행위자의 내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범위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여 여전히 그 해석의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르는 해석기관의 자의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변란’이라는 개념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법의 내란죄에 규정된 국헌문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반란죄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 처벌도 가볍지 아니하여 국보법의 위계 규정등은 형법규정과 중복되어 그 필요성에서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국보법 7조 ①, ②, ③항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 규정 등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의의가 있어 이 사건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 - 고문>
 고문의 결과로 이뤄진 것이 명백한 어떤 진술도 고문 혐의자에 대한 소송에서 그 진술이 행하여졌다는 증거로서 인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증거로서 인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 <고문방지조약 제15조>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운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부산 유괴범 살해사건 고문 조작

남씨, 범행시각에 친구와 통화 밝혀져

부산 만덕국교생 강주영 양 유괴살해사건의 남 아무개 씨가 주장을 펴고 있는 범행시각에 친구와 함께 있음을 밝히는 통화 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19일 검찰과 경찰이 주장하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30분16초에서 31분4초 사이에 이 사건의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남 아무개 씨가 부산 중구 남포동 에밀 커피숍에서 중구 부평동 가위손미용실에 있던 친구와 통화한 사실을 한국통신 부산전산국에 조회하여 확인 받았다. 이는 바로 범행시각인 오후 5시30분경 남 아무개 씨가 친구와 만난 후 '공범'들을 만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전면적으로 뒤집어 엮을 수 있는 증거다.

이로써 남 아무개 씨 등 이 사건의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경찰과 검찰에 의해 고문에 의한 조작'임을 밝히는 물증마저 확인된 셈이어서 이후 검찰의 공소취하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강대 총학생회 총장 사과 '서약서 반환' 결의

서강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심성필)는 19일 오후 3시 학내에서 '새내기 새로 배움터(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문제와 서약서 파문에 대한 규탄대회'를 서강대생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갖고 서약서 되돌려 받기 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17일 서강대총학생회는 서약서 무효화를 시도했으나 학교측의 회피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총장 면담을 요청하

는 공문을 보내 학교측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학교측은 19일까지 답변을 회피했다. 총학생회 사무국장 허두영씨는 "이번 사건만큼은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다. 서강대의 명예를 걸고 개강이 연기되더라도 총장의 사과를 받고, 서약서를 반드시 되돌려 받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본

관으로 가서 항의한 후 자진 해산했다.

동티모르 벨로 주교 노벨평화상 추천, 인권협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고영구, 인권협)은 19일 해마루합동법률사무소에서 열린 제8차 집행위원회에서 동티모르 벨로 주교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또, 26일 경 여사가 김영삼대통령에게 '김경화상'을 수상하기 위해 입국하는 날 항의시위를 하기로 했고, 소속단체회원 수련회를 2월 10일 갖기로 했다.

오늘의 행사

- △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고용 정책토론회
 - 오후 2시-5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화:521-5364)
 - 발제: 권도용(한신대) / 조윤희(일산장애인직업전문학교)
- △ 미군 헌병대의 세모녀 폭행사건에 대한 상황극 공연 및 제4차 규탄집회
 - 오후 2시, 서울역 광장 (전화: 744-1211)
 - 순서: 세모녀 폭행사건 상황극 공연-고려대학교/내가 미국인으로서 운동에 동참하는 이유-문요안나 수녀(메리놀 수녀회)/집회 후 미군사령부까지 행진
- △ 이탈리아 '깨끗한 손'(마니 플리테/MANI PULITE) 운동과 사법부의 역할
 - 초청인사-김창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오후 4시/서울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소회의실
 - 주최: 참여연대 내부비리교발자지원센터, 사법감시센터 (전화: 796-8364)
- △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2시/기독교연합회관 4층
 - 발제-취업연수생의 인권 실태-김재오(외국인 노동자피난처)/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개선방향-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 △ 95 엠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 장소: 대전 대림호텔(대전255-2164)
 - 일시: 1월 22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인권단체 참관 가능함

인권운동사랑방 제1기 공개 강좌 세번째 강의
 주제: 인권의 철학
 강사: 박노현(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오전 11시, 수강료는 4천원
 이번 강좌까지는 용산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합니다. 작오없이길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이사합니다
 주소: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라사라 북장학원 있는 건물, 4호선 숙대입구 역과 서울역 중간)
 대표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1월 23일부터 이사한 사무실에서 업무 시작

두밀학교 살리기운동

개성과 창조성, 인간성 살리기 교육의 첫걸음

작은 학교 큰 교육을 위한 토론회

작은학교 큰 교육을 위한 토론회가 '농촌지역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주제로 19일 오후 2시경부터 가평 관광호텔에서 열렸다. 「두밀리학교살리기연대모임」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최현섭교수가 '농촌교육의 문제와 과제'로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에는 정형영(홍성 YMCA)·이정진(인간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 사무국장)·왕중설(두밀분교 학부모 대표)씨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노미화(인천용현남국교)교사가 '전교조 주체 행사에 어떻게 참석할 수 있는나'는 인천교육청의 압력으로 참석치 못해 교육부의 편협함에 대한 참석자들의 비판이 잇기 시작했다. 또한 가평주민들의 많은 참석을 위해 장소를 가평으로 잡았으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치 못한 것과 토론회자로 예정된 전조웅(가평교육청 장학사)씨가 불참한 데 대해 왕중설씨와 최현섭교수 등이 섭섭함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두밀주민, 연대모임 관계자, 서울사대생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급으로 인한 불이익과 비효율성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사회의 문제점

-정형영(홍성 YMCA)
 홍성에도 폐교되는 국민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도 전체적인 수업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거나 몇년뒤에는 문을 닫게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두밀분교처럼 폐교반대를 위해 싸우지는 않았다. 두밀리 주민들이 교육의 주제로 나서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새로운 운동형태라고 본다.

농촌학교가 산업적인 이유로 축소·폐교되는 것은 바로 중앙중심의 정책, 입시중심의 교육정책이 낡은 것이다. 지역에서 자라난 학생들이 지역의 지도자로 남아 있지 않고, 중앙으로 빠져나감으로 농촌은 못한 사람들이 남는 패배적인 분위기가 있다. 이는 경제력의 가치판단을 위주로 본 것으로 농촌경제를 하위 개념으로 평가절하시킨 것이다. 농촌사회는 경제적인 면만이 아닌 문화, 인간화교육, 환경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큰 가치가 있다. '박제교육'으로 상징되는 과밀학교는 다품종대량생산체제를 가져오는데, 이런 때일 수록 작은 학교살리기 운동이 중요하다.

<토론내용 요약>

▲농촌지역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현섭(강원대 교육학)교수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농촌자체의 존립위기를 맞고 있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이유로 농촌학교가 폐교되는 내외외환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농촌교육의 총체적 위기는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남은 신민(臣民)사회적 잔재때문이다. 이는 행정적인 효율성과 관리의 판단에 따라 학교가 폐교되거나 시설투자를 소홀히 하는 데서 나타난다. 두밀분교 폐지에 반발하고 소송을 하는 두밀주민들은 신민잔재를 떨치고 국민이 주체로 나서는 시민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두밀분교는 과밀학교와 복식학교이라는 양극화된 형태로 인하여 나타난 우리교육의 비인간적, 비효율적인 고질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실험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농촌교육은 더 나은 방향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화상교육시스템이 3월부터 강원도 홍천군 분교에서 시험단계를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작은 농촌학교를 폐교시키지 않아도 복식학

로 지역발전을 위한 모임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없어져야 할 과밀학교- (노미화 교사의 발제문에 이경진씨가 덧붙였다.)

전교조 교사로 해직될 당시 과밀학교에서 해방된다는 생각에 후련한 감마저 있었다. 복직후 40명의 국민학교 1학년생과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도시에는 한 학급에서 1백8명이 수업을 받는다고 있다고 하며, 3월에는 30명이었던 학생수가 한 학기가 다가지도 않은 때 60명으로 늘어났다고도 한다. 복도가 없는 교실 속에서, 책상위로 걸어나오는, 학교에서 이렇게 거대한 도시화의 물결속에서 작은 학교살리기 운동은 너무도 소중하다.

지식전달만이 교육은 아니다.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인간적 교감이 진정한 교육이다. 콩나물교실에서 어떻게 인간화를 배울 수 있을까. 하지만 농촌에서는 이런 교육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는 경제효율성을 이유로 폐교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콩나물 학교의 기막힘, 가혹함을 빨리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린 교육이 가능한 농촌학교를 막는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농촌 두밀학교의 사례

-왕중설(두밀분교학부모 대표)
 두밀리에서 태어나 두밀리에서 대대로 살고 있다. 두밀분교의 문제에 있어 교육부측이 너무나도 농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복식수업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걱정하지만, 세 학년을 합쳐야 7-8명이 되는 두밀리 아이들은 오히려 서로 배우며 타 이르고 하는 속에서 자라난다. 물론 교육내용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마을학교에 다니면 주민도 자주 찾아볼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 큰 학교로 몰아넣고 양질의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농촌아이가 도시로 나가 공부하면서 느낀 정서적, 경제적 소외감은 왜 생각치 못하는가. 가평지역은 수도권 상수원지역으로 다른 산업은 힘들지만 가장 최선의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도시학교를 두밀리에 세워 시골의 넓은 곳에서 도시의 아이들도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가평이 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면 한다.

<이달의 주제 - 고문>
 전 당사국은 본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내에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취한 것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고문방지조약 제19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밥줄보다 차량 통행이 우선인가 사당동 남성시장 노점상들 생존권 찾기 한달 보름

총신대역 남성시장 노점상 82명의 생존권 찾기 싸움이 지난 해 12월4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동작구청 직원 2백여명과 용역직원 50여명과 충돌해 이연희(44)씨가 장과열로 의왕시 고려병원에 입원중이며 명노수(48)·김재열(43)씨등이 전신 타박상으로 전치 2-3주의 진단을 받고 사당의원에서 치료중이다. 이들 외에도 50여명이 연행돼 구결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20일에는 동작구청으로 노점상 60여명이 몰려가 보관소에서 들고간 좌판(리어카) 43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구청 3·4층 계단에서 2시간가량 벌이기도 했다.

구청, 느닷없는 철거

동작구청과 노점상들이 본격적인 대결 단계로 들어선 것은 지난 해 12월 4일 구청측이 노점상 철거 작업에 나서면서부터이다. 시장 어귀부터 아파트 단지 앞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세워진 경고문에는 "그동안 노상상품적지, 노점상행위로 인해 시민이 이용해야 할 도로가 기능을 상실해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고 밝히고 있다. 동작구청장과 방배경찰서장 명의로 된 94년 10월 24일 경고문은 "위반시에는 도로법 제 80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배상)의 2, 제 86조(부당이득금의 징수)의 2에

의거해 부당이득금, 과태료 부과하며" 또한 "동법 제 82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 63조(금지행위) 규정에 의거해 물품을 강제수거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15년 이상 노점을 해왔는데

그러나 15년 내지 20년 가까이 남성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80여명은 "이곳은 도로가 아니었다. 신동아아파트가 들어선 땅도 당초 산동네로 지금의 직선 도로와 아파트 사이에는 막혀있었다"면서 "구청의 단속이 말이 안된다"고 항의했다. 그들에 의하면 이미 오래전 이곳에는 소방도로가 나 있었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는 설명이다. 신동아아파트가 들어선 지 3년, 그러나 도로법에 의한 노점상 철거는 불과 지난해 12월 4일 이뤄진 집에 비춰 아파트측 부녀회의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노점상들은 짐작했다.

반면 동작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 관계자는 "도시계획 확인 원상 그곳은 엄연한 도로다. 서울시가 20년이 넘도록 그대로 놔둔 것이 잘못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가 노점행위를 허락해 주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의 진정서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대

구를 감행하기 전 노점상들의 신원을 조사했다. 그들 중엔 재산이 1-2억이 넘는 부자도 있었고 대부분 자신 소유의 집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적 차원에서 생계를 빼앗는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는 질문에 "노점상들은 월수 2백이상을 번다"고 대답했다.

한편 김야순(60)씨는 "노점상은 빈민이다. 하루벌이를 하는 우리들로서는 이번 싸움에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노점상 중에는 신동아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 경우 용자와 빚을 내어 겨우 마련한 돈으로 입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 황인철 변호사 2주기 추모문집 출판기념회도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고영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공동대표 김승훈외 3인), 문학과 지성사(대표 김병익)는 고 황인철 변호사 2주기 추모미사와 추모문집 「'무죄다'라는 말 한마디」 간행 기념회를 20일 명동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교육관에서 각계 150여명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고 황인철 변호사 2주기 추모문집 출판기념회도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고영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공동대표 김승훈외 3인), 문학과 지성사(대표 김병익)는 고 황인철 변호사 2주기 추모미사와 추모문집 「'무죄다'라는 말 한마디」 간행 기념회를 20일 명동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교육관에서 각계 150여명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위협받는 노점상의 생존권

칼날 같은 대립 속에서 구청 관계자와 노점상간의 서로 이해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 그들의 대화에서 드러났다. 건설관리과의 한 직원은 "우리도 철

인권운동사랑방 제1기 공개 강좌 세번째 강의

주제: 인권의 철학
 강사: 박노현(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오전 11시, 수강료는 4천원
 이번 강좌까지는 용산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합니다. 취소없이시길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이사합니다
 주소: 용산구 갈매동 71-12 조양빌딩 3층(라사라 복강학원 있는 건물, 4호선 숙대입구역과 서울역 중간)
 대표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1월 23일부터 이사진 사무실에서 업무 시작

단체탐방 39 / 노동정책연구소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세계화나 국제화' 일 것이다. 기업의 세련된 홍보전략에서 떠드는 '세계초일류 기업, 탱크주의, 1등만이 살아남는다'등의 카피는 이제 더이상 우리에게 낯선 용어로 들리지 않는다.

이름하여 '신경영전략' '국가경쟁력 강화'는 사실 변화된 세계체제 즉 WTO 속에서 재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수단으로 세련화시킨 이름만 바꾼 노동자 착취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재벌들은 기술축적에 근거한 이윤확대보다는 아직까지 국가에 의한 노동통제에 의존하면서 노동자의 낮은 임금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며 전성기도를 달리고 있는 듯하다.

그에 비해 노동조합 운동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면서 여기저기 민주노조가 어용노조로 교체되는가 하면 해고노동자는 아직 차가운 거리에 헤매고 있다.

그렇다면 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무슨 과제를 던져주는가? 이번 주의 단체탐방은 이러한 고민을 시작으로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노동정책연구소」(소장 박석운)는 남영동에 위치한 30여평의 사무실에 자리하고 있다. 93년 10월에 창립하여 현재 7명의 상근자가 일하고 있다. 정책실장인 정태광씨는 노동정책연구소의 성립취지에 대해 "87년 6월 민주화 대투쟁과 78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새롭게 펼쳐진 민주노조 운동이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변화하고 있는 안팎 상황은 노동운동진영에게 절체 도약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노동정책연구소는 "노동정책의 전문화, 노동정보의 대중화, 노동상담의 체계화로 이 땅의 노동형태들에게 구체적인 응답을 하고자 한다"고 정리했다.

또한 정씨는 노동정책연구소가 "노동현장의 요구와 전문가의 학문적 성과를 결합시키고 이것을 운동적 시각과 태도로 접근하여 구체적이고 대안적인 노동정책을 생산하며 가능

한 많은 노동자가 정책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소의 목표"라고 말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정책에 대한 연구는 고용문제, 임금체계, 직제개편, 노동조합에 관한 것이 있다. 또한 일본, 독일, 제3세계의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찾아내어 현재 한국노동운동과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일본노동운동의 이해』라는 단행본을 출간했고 『독일노동운동의 성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정책연구 성과는 곧바로 현장 교육과 연결되어 정기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노동권을 적극적인 사회권으로 과학적인 인권운동으로 구조적 침해 대응

단체, 상담과 교육활동이 있다. 크게 개별노동 상담과 노동조합 상담, 노동법 상담이 있다.

미지급수당, 부당해고, 산재, 직업병, 외국인노동자등 각종 권리규제등을 포함하는 개별노동상담에서부터 부당노동행위, 휴폐업, 비정규직 고용불안문제, 단체조약동의 노동조합상담과 그밖에 노동법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노동 상담보다는 노동조합 상담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화상담은 물론 pc통신을 이용한 상담도 받고 있다. 노동법 상담에는 8명의 사법연수원생들이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다.

세계, 노동정보 종합 서비스가 있다. 이것은 노동정책연구소가 가장 자랑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다.

그 동안 수공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노동관련 정보를 DATA BASE화하여 권리안 통신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하루에도 몇천씩 쏟아져 나오는 노동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관, 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유용하게 전달하고 있다.

주로 노동조합, 노조연합단체, 노동단체, 정부관련 단체, 노동연구원, 노동부, 변호사, 학술단체 등에서 자료를 수집, 가공된 정보는 개별노동자, 노동조합, 노동단체, 학술단체, 전문

연구자들에게 공급된다. 정보는 크게 동향소식, 노동조합, 노동법등으로 나뉜다. 동향소식은 노동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94년까지 8월 20일까지 총 2,400여건의 소식을 제공하였다. 노동조합 소식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관련된 경제동향, 고용문제, 인권, 외국의 노동동향 등이 제공되고 있다. 신문의 노동관련 기사, 각종 유인물, 소식지등 연구소가 고유하게 수집하는 정보도 빼놓을 수 없는 독특한 정보이다.

노동조합 정보는 노동정책, 노동교육, 조합활동, 산업안전보건, 교양자료실로 구성되어 있고 94년 8월 20일까지 총 500여건의 자료가 제공되었다.

노동법은 노동관계법, 노동법 동향, 노동판례 열람, 노동상담 사례, 노동법 강의, 노동법 관련 서적, ILO조약등으로 구성, 2000여건의 자료가 제공되었다.

노동권은 인권의 한 분야이지만 인권자체가 노동권은 아니다. 노동자의 인권이 권리의 개념으로 정식화된 것은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18세기 이후 발전된 것이라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19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노동자의 지난한 투쟁의 결과물이다. 정씨는 "노동자의 권리를 생각할 때 넓은 의미에서 노동권은 인권의 영역에 포함된다. 지난 시기 인권의 개념은 너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며 주로 정치적 자유에 한정되었다면 앞으로 인권의 개념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즉, 인권의 개념이 이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어야 한다. 인권의 영역 중에서도 노동권은 인권을 사회권의 영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씨는 "과학적인 인권운동을 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항할 수 없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권과 사회권, 그리고 인권의 불가분의 관계가 노동정책연구소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권하루소식> 최은아 기자

<이달의 주제 - 고문>

어느 당사국에서 고문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고문방지위원회는 그 당사국으로 하여금 이 정보의 조사에 협조토록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견해를 제시한다.<고문방지조약 제20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검찰, 상식을 초월하다 조작의혹 짙은 피의자에 사형 구형

고문조작 의혹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 조작과 진술변복 시비로 관심을 끌고 있는 부산 국교생 강주영(8)씨 유괴살인사건의 피고인 4명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부산지검 제2형사부 김재경 안준호 검사는 23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심리로 열린 9차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괴등을 적용해 원중성(23) 피고인에게 사형, 남아무개씨(19), 강양의 이종사촌언니 이아무개씨(19), 옥영민(27)씨등 피고인 3명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이들은 단순히 용돈마련을 위해 지존과 사건을 모방해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 살해하고도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 유포화되고 있는 강력범죄를 일벌백제하는 차원에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수근씨 등 3명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왜곡하려는 이피고인의 거짓자백에 농락당해 원피고인들에게 고문, 허위자백을 받아냈으며 원피고인등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통화기록, 학교영문타자시험지등 증거가 수없이 나오자 모두 조작됐다는 상식을 벗어난 주장을 폈다"고 말하며 무고한 원, 옥, 남 피

고인에게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예단을 가진 경찰과 검찰이 많은 증거를 배척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번복진술 강요를 통해 무고한 시민 3명을 범인으로 만든 대표적인 조작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 6일 열린 선고공판 담당재판부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는 지난 17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위헌심판제청결정을 내렸고 이 사건 피의자들에게 가해진 고문을

신체감정으로 밝혀낸 바 있어 선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언론의 인격권 침해 제재 'FEEL' 호스티스 기사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23일 오아무개씨등 서울대 사회학과 86학번 여대생 11명이 여성지 'FEEL'에 게재된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 충격고백' 기사와 관련, (주)조선일보사

(사장 강호영)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심판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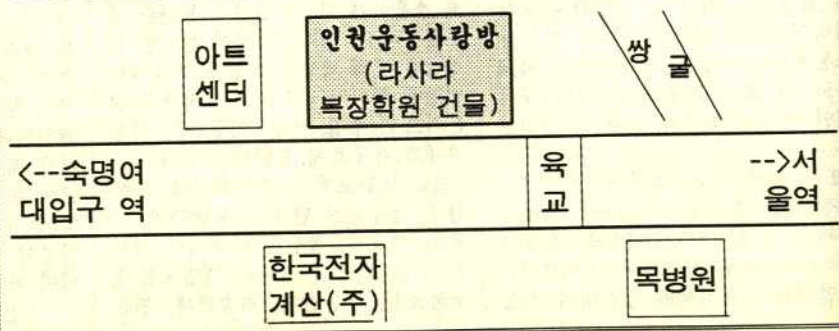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FEEL" 기사로 인해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들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 48명 모두가 이 기사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반론기사를 'FEEL'에 게재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조선일보사가 발행하는 'FEEL' 8월호에는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대생의 충격고백'이라는 기사에서 '서울대 사회대에 입학한 여학생이 운동권선배에게 버림받은 후 이 충격으로 호스티스가 되고 재벌회장과 동거후 복학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이사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95년 1월 21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에서 독립해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겼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금까지 활동해오던 대로 인권운동의 전문화·대중화·국제화를 위해 쉬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인권하루소식>도 새로운 공간에서 심기일전하여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주소 :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대표전화 : 715-9185 / 팩스 : 715-9186
통신ID : rights(하이텔/천리안)

약도



인권협 킨평화상 수상 반대성명

"킨목사 정신 심각히 훼손" 주장

민변, 전국연합 인권위원회등 9개 단체가 가입해 있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상임대표 고영구)는 23일 "김영삼대통령의 킨평화상 수상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협은 성명서에서 "김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4백68명(94년 12월6일 현재)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고, 유엔인권

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가 개정권고한 제3차 가입금지조항으로 구속, 수배가 계속되고 있는" 등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은 인권에 관심있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것이며 킨목사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인권공개강좌,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시위등 계획

엠네스티 한국지부 95년 사업계획 확정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22일 총회를 갖고 95년 사업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사업을 살펴보면 2, 5, 8, 10월 인권공개강좌를 개설하며, 3월에는 북경여성대회기념캠페인과 '여성의 날' 캠페인이 각각 1일과 8일에 잡혀 있다. 5월에는 한국난민법 관련 소책자를 발간하고 9월 1일부터 한국난민법 활동에 들어간다. 6월에는 아동 권리책자를, 8월에는 여성인권 관련 책자를, 12월에는 『인권이란』 증보판을 발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1-3월 한국사형제도 폐지 캠페

인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미국 사형제도 폐지 캠페인을 펼친다. 국가별 캠페인으로는 터키, 이라크, 시리아 캠페인들이 준비되어 있다.

응역직원 등원, 노점상 생계위협

사당동 남성시장 노점상 80여명의 싸움이 지난 12월4일부터 계속되는 가운데 21일부터 남성시장에 서울시장 1개중대와 동작구청 직원 80여명, 응역직원 40여명이 상주하며 노

점상의 장사를 막고 있다. 23일 노점상측은 계속 장사를 해갈 것이라고 밝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인권하루소식 329호 참조>.

서울변협 회장에 김성기 변호사 선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힐튼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성기 변호사(54)를 임기 2년의 새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성기 서울변협 신임회장은 "당직변호사제와 외국인 노동자 법률상담 등 기존의 인권사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변호사 중 재조정제도와 중소기업 고문변호인단체 등을 통해 변호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성기 서울변협 신임회장은 73년 서울형사지법 판사 시절 당시 대통령선거 부정부패 총선거부를 구성하며 신민당에서 농성한 서울대생들에게 무죄를

선고, 재임용에서 탈락되어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가 다시 80년 광주지법 판사로 재임용돼 재판연구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지냈고, 86년부터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의문사 청원심사소위 구성하기로 국회법사위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희태)에서는 23일 '의문사 전면조사와 진상규명 특위 구성을 위한 청원' 건 등 3가지 안건을 다루 처리했다. 이날 청원 관련 안건은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법안'에 관한 청원 '동성동본 문변호인단체 등을 통해 변호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성기 서울변협 신임회장은 73년 서울형사지법 판사 시절 당시 대통령선거 부정부패 총선거부를 구성하며 신민당에서 농성한 서울대생들에게 무죄를

공 판 안 내

- 1월 24일(화)
 - 김태성(국보법), 2시, 425호(4단독)
- 1월 25일(수)
 - 온보현(강도살인등), 2시, 302호(2부, 2심)
 - 한은술(국보법), 10시30분, 311호(21부), 1회
 - 김병삼(국보법), 11시10분, 311호(21부), 1회
 - 최일봉(국보법), 4시, 421호(8단독)
 - 박현용(국보법), 10시, 424호(9단독)
 - 권오창, 신정길(국보법), 2시, 각 4회·1회(22부)
- 1월 26일(목)
 - 김기환의 5명(강도살인등), 2시, 309호(3부, 2심)
 - 윤덕산(강도살인등), 10시, 404호(5부, 2심)
 - 전재순(국보법), 형사지법, 오후2시, 418호(4부)
 - 김형욱(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11시, 418호
- 1월 27일(금)
 - 신광수의 1명(국보법), 11시, 418호(1부)
 - 김기현(국보법), 2시, 422호(5부)
 - 고영국(국보법등), 4시, 424호(10단독)

<인권하루소식>이 숨이 찹니다

급진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찹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구독료는 1만원~3만원 사이입니다.)

구독료 납부를 위한 자동이체는 서둘러 주시고, 이번 달 구독료는 종전대로 은행에 가서 아래의 구좌로 납부해 주십시오.

계좌번호	예금주 : 서준식
제일은행 128-10-131017	상업은행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은행 438-06-016840
외환은행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은행 112-182999-12-001	하나은행 105-106617-00107
신한은행 355-02-035530	국민은행 015-21-0723-021

<이달의 주제 - 고문>

위원회는 관련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견해와 아울러 여타 입수가능한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비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즉각 위원회에 보고할 1인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고문방지조약 제20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운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아동의 권리 정부 보고서 구체적 내용 전무

정부, '아동의 권리 국제조약' 최초보고서 제출해

<인권하루소식>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유엔에 '아동의 권리 국제조약'에 관한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정부는 90년 9월 2일 이 조약에 서명하고, 91년 11월 20일 비준서를 기탁, 91년 12월 20일부터 '아동의 권리 국제조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아동 권리의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란 제목의 정부 보고서는 총 9장, 206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아동의 권리협약의

조항마다 한국의 헌법, 형법, 민법 등의 법조문을 나열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받고 있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의 이아무개 교사는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는 완전 무권리 상태"라며 "정부가 민간단체의 의견을 무시하

고 아동의 권리가 전적으로 보장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인권조약에 의한 보고서 작성 시에는 당사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의견을 존중, 수렴하여 제출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지만, 정부는 이런 관례를 무시

해왔다. 보건사회부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니세프(국제아동기금) 한국위원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단체 등은 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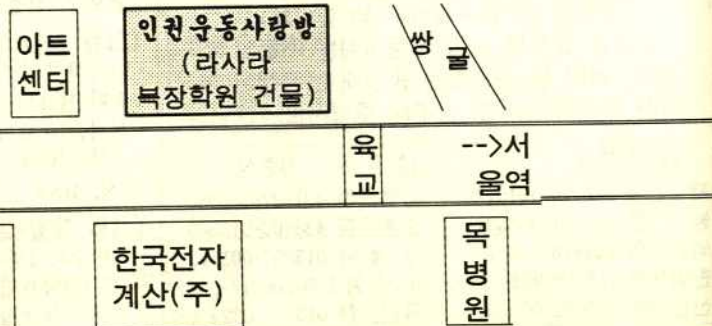
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의 권리 위원회의 심의는 오는 9월에 열린다. <인권하루소식>은 정부 보고서 분석 기사를 2월초에 실을 예정이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주요내용

<1부> 1조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4조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모든 입법, 행정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7조 이름, 국적을 가질 권리.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12조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갖는다./13조 표현의 자유, 모든 종류의 정보 및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 전달할 권리/14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15조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24조 최상의 건강을 누릴 권리,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26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28조 교육을 받을 권리, 초등 무상 의무교육, 중등 무상교육 도입/32조 경제적 착취 및 신체, 심리, 정신, 도덕적, 사회발달에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34조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35조 아동의 유괴, 매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국제적인 조치/37조 고문 등 가혹행위 금지. 아동에게 사형 중신형 금지. 구금은 마지막 수단이며 가능한 최단기간 동안/40조 형사피의자, 피고인, 수인이 된 아동의 존엄 존중. 형사소송 절차의 존중.

정부가 유보한 조항들- 제9조3항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권/제21조 가항 아동의 입양에 대한 당사국의 허가 보장권/제40조 2항 나호 5 형법위반의 경우 공정한 상급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

인권운동사랑방 새 사무실 약도



한편, 24일 1시 30분에 있었던 '부산국교생 유괴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부산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안춘호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악취유인죄를 적용해 원중성(23)씨에게 사형, 남아무개(19)씨, 강양의 아들사촌언니 이아무개(19)씨, 유영민(27)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네바 소식 ①>

유엔 제10차 인권운동가 지원 실무분과 회의 열려

<편집자 주> 지난 14일 유엔 인권위원회 제51차 회의의 모니터와 '국제인권봉사회'(ISHR) 인턴쉽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한 이성훈씨가 제네바에서 첫번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국제 인권무대의 중심지에서 보내오는 속보를 통해 독자 여러분은 국내의 누구보다 먼저 정확한 국제 인권소식을 접할 있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 바랍니다.

'인권운동가(Human Rights defenders) 지원에 대한 선언문 초안 제정을 위한 실무분과' 제10차 회의가 지난 16일 30여개국 정부대표와 '국제앰네스티'(AI), '국제법률가위원회'(ICJ) 등 10여개 국제인권단체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네바 유엔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 헬게센(Jan Helgesen, 노르웨이)씨가 작년에 이어 실무분과 의장직 보고자로 선출되었다.

개막연설에서 이브라히마 팔 유엔인권센터소장은 "이번 회의에서 인권운동가 지원에 대한 선언문 초안 합의가 이뤄져 30일 열리는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운동가 지원 실무분과(Woring Group on Human Rights defenders)는 작년 9차회의에서 작성한 초안의 전문 문안 검토 작업을 16, 17일 마친 뒤 20일까지 1차 토론을 끝냈다. 23일부터 각 정부대표가 제출하는 수정안을 검토하는데, 실무분과 회의가 합의 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27일까지 초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16일부터의 전문문안 검토는 서방진영을 대표하는 미국, 영국 그리고 쿠바, 중국, 시리아 등 강경과 국가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제3세계의 대규모 인권탄압을 비판하고 인권운동가와 인권단체를 보호·지원하려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해 인권운동가의 책임보다는 권리확대

측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쿠바 등 강경과 국가들은 인권운동가의 책임과 의무를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인권단체가 국제인권법이나 규범보다는 국내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법률자문위원인 윌터 타일러 변호사는 "70년대는 말할 것도 없

고 실무분과가 활동이 시작된 85년 이후 지금까지 수천 명의 인권운동가가 구속·고문·살해되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하루빨리 이들을 보호하는 정치적·국제법적 차원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선언문 전문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등

<해설>

'인권운동가 지원 실무분과'란?

<구성배경>

첫째, 70년대말 전세계, 특히 남미에서 일하는 인권운동가들이 대량으로 구속, 실종,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권운동가의 신변을 보호하고,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략의 일부로 선언문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따라 국제법의 대상과 주체가 국가에서 정부간 기구나 초국적 기업외에도 인권분야에서 일하는 개인과 단체에까지 확대되었다. 따라서 인권운동가나 인권단체의 권리·의무·역할 등에 대한 원칙을 국제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진행과정>

이에 따라 85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전세계에서 활발하게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인권운동가에 대한 선언을 준비하는 실무분과를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86년 1월 27일 '보편적·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일하는 개인, 집단, 사회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첫 실무분과 회의가 공개로 열렸다.

실무분과 구성은 기준설정(standard setting) 작업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보통 인권위원회의 결의로 구성된다. 선언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기본정신과 합치, 인권운동가와 인권단체의 권리, 국가의 책임 등에 대한 원칙을 담고 있다. 또한 본문에서는 인권운동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정보를 수집·배포할 권리, 국내외로부터 제정을 지원받을 권리,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실무분과는 공개회의로 인권위원회 회원국외에도 모든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와 민간인권단체가 참석할 수 있는데, 한국정부 대표의 아직까지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네바=이성훈>

은 법적인 구속력 없이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데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국제인권협약을 준비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필요에 따라 선택 의정서도 제정한다.

일반적으로 한 주제에 대한 선언과 협약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10-20년이 걸린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경우 23일이 소요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인권운동가 실무분과도 벌써 10년째 계속 열렸으나 선언문 초안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

한편 실무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인권단체들은 대부분 시민·정치적 권리에 집중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단체여서 '자연스럽게' 서방정부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민·정치적 권리 측면에서 제3세계의 대다수 개발도상국가를 비판하는 동시에 제3세계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적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침해에 있어 서방국가에 대한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 제3세계의 많은 단체들이 경제·사회문화적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서방국가들도 집단적 권리에 대해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의 주제 - 고문>
 본조 2항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문방지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의 협력을 구한다. 그러한 조사는 관련 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관련국 영토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고문방지조약 제20조 3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인권협, 김대통령 킹상 수상 반대시위 킹 여사, "한국의 인권상황 잘 모른다"

김영삼 대통령에게 킹 평화상을 전달하기 위해 킹 여사가 입국하는 것에 맞춰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고영구, 인권협) 소속 회원 20여명은 김포공항에서 피켓을 들고 30여분간 항의시위를 벌였다. 킹 여사는 25일 오후 5시 30분경 대한항공 편으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귀빈실 1호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킹 여사는 "아름다운 나라 한국에 와서 기쁘다"며 "한인과 흑인간의 친목도 모를 위해 김대통령에게 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에 양심수가 4백명 이상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는 물음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대답해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또, 킹 여사는 "평화상을 수여하는 것에 대해 인권단체가 반대하는 것을 아느냐?"는 물음에 "회미하게 알고 있다"고 했지만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기자회견장에는 인권

협을 대표한 이덕우 변호사가 참석하여 킹 센터에 보내는 인권협의 항의서한을 킹 여사에게 전달했다. 이 서한에서 ▲국가보안법 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않고 있는 점,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노동운동의 지도자를 구속, 수배하고 있는 점, ▲김선명 씨등의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가 4백35명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점, ▲김영삼 정부에 들어 와서도 고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김영삼 대통령에게 킹 평화상을 주는 것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은 인권에 관심있는 모든 한국인에게 깊은 실망을 줄 것이며, 이는 평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생애를 바친 킹 목사의 정신을 기리고자 제정된 귀한 상의 수여의의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협 회원들은 경찰의 체제 속에 1층 공항 출입구에 모여서 "김영

삼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주는 것은 평화, 인권신장에 생애 바친 킹 목사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 "양심수를 0.75평 독방에 45년 간이나 가둬둔 채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가", "45년 세계 최장기수가 자유되는 날, 국가보안법과 노동약법을 폐지되는 날, 고문종식을 선언하는 날, 그날이 진짜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했다. 킹 여사는 인권협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앞을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황급히 빠져 나갔다. 인권협은 킹 여사가 출국하는 28일까지 지속적인 항의를 벌일 계획이다.

전쟁포로 장기수 송환에 응답 북한 불교도연맹

북한의 조선불교도 연맹(대표 박태호 대선사, 불교도연맹)은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동)에 1월19일, '김인서씨등 장기수 송환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에 감사하다는 내용

의 편지를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팩스를 통해 보내왔다. 불교도연맹은 편지에서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들은 전쟁포로로서 마땅히 복으로 송환되었어야 하는데 남조선 당국의 무도한 정책에 의해 지금까지 일가친척 하나없는 남한 땅에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며 불교인권위원회가 이들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동포애적 감동"을 받았다고 하였다.

남총련, 현재 12·12의 정치적 결정 규탄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연합」(임시의장 이동석,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25일 12·12 헌법소원의 결정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군사반란자들을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정당화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고 규정하고 "12·12 군사반란자들을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남총련은 또 "민주당이 마땅한 대응을 미룬 채 12·12 사법처리를 정치적 흥정물로 삼고 있다"면서 "12·12 사법처리에 대한 일관된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 일시 : 95년 1월 26일(목) 오후 2시
- 장소 : 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소회의실
- 내용 : 정부당국, 안기부, 검찰, 국회, 언론기관에 대한 대책등을 발표
- 주최 : 대한변호사협회(☎522-3761)

컴퓨터를 기증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컴퓨터 부족으로 <인권하루소식> 제작, 기타 업무를 보는데 대단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사형제도 철폐 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제조사도 요구

「국제엠네스티」가 25일 안우만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에서 피에르 사네 엠네스티 사무총장은 "한국정부는 수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받은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해 제조사를 해야 하며 지난해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재구씨의 경우 양심수인 만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엠네스티는 "한국에서 사형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94년 한국에서는 15명이 사형되었고 이 숫자는 92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엠네스티는 모든 경우의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로써 사형수들은 대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비인도적인 대우와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

으며 사형 희생자들의 대다수는 가난하고 자기방어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국제엠네스티」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세계적으로 벌였고 사형제도 폐지를 결의한 아시아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 일본과 같이 사형제도를 유지시키는 나라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공개서한에는 김두희 전 법무부 장관이 94년 10월 김영삼 대통령 집권후 첫 사형집행이 있는 후 "사형은 한국에서 규범적이고 실용적인 제도"라고 공식 입장을 말했다고 전했다.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정부에게 권고안으로 ▲사형제도 폐지, ▲사형 대기수에 수감 금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사형 중지 및 모든 사형수의 감형등을 촉구했다.

WSCF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개최 2월 17-26일, 홍콩

세계기독교학생회총연맹(WSCF) 아·태지역 연대사업의 일환으로 'WSCF 아·태지역 인권워크샵'을 개최한다. 오는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홍콩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샵은 ▲아·태지역에서의 WSCF의 인권활동 계획 수립, ▲WSCF의 인권활동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사항, ▲인권활동의 방향에 대한 검토, ▲아·태지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각국의 인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모색등을 목적으로 열린다. 또 워크샵에서는 ▲국제조약상 보장되어야 할 인

권의 종류, ▲인권의 보편성, ▲여성, 노동자, 학생의 권리, ▲안보를 이유로 투옥된 정치범, ▲사법부 문제, ▲선주민의 권리등의 주제와 ▲정부들이 인권을 존중하게 할 방안, ▲인권개선을 위해 유엔의 활용법, ▲WTO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인권교육, ▲개발과 인권, ▲교육받을 권리, ▲구호와 인권등을 다룰 예정이다. 워크샵은 외부강사를 전혀 초청하지 않고 각국 참가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고 참가자들은 한가지 이상의 주제에 대해 사전준비를 필요로 한다.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KSCF)에서는 '양심수와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를 준비하고 있다. KSCF에서는 조준형(연대철학4)씨등 2명을 워크샵에 보낼 계획이다.

<인권하루소식>이 숨이 찹니다

클직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찹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구독료는 1만원~3만원 사이입니다). 구독료 납부를 위한 자동이체는 서둘러 주시고, 이번 달 구독료는 종전대로 은행에 가서 아래에의 계좌로 납부해 주십시오.

계좌번호	예금주 : 서준식
제일은행 128-10-131017	상업은행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은행 438-06-016840
외환은행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은행 112-182999-12-001	하나은행 105-106617-00107
신한은행 355-02-035530	국민은행 015-21-0723-021

인 권 간 행 물

- 21세기 나라의길(95.1)-나라정책연구원(☎584-8664)
· 주요내용 : 신년특집-한국사회보장제도의 현실과 개혁방향/ 특집기획- 1995년, 해방 50주년과 오늘의 과제/ 정책연구-행형법 개정 및 감옥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안등(147쪽)
- 의보연대회의소식 6(☎362-9578)
· 주요내용 : 제21차 집행위 95년 집중사업결정등(4쪽)
- 평화의 일꾼-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장기수가족후원회(☎719-2172)
· 남한산성에 서서-이양주(후원회원)
- 국제엠네스티 95년 1월호-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053-426-2533)
· 주요내용 : 특집1-엠네스티운동의 장기적 과제/ 특집2-독일의 인권현황 94년5월에서 10월까지/ 인권교육-여성의 권리/ 남북한에 대한 엠네스티의 관심/ 국가별-인도네시아·동티모르 캠페인/주제별-"실종"과 정치적 살인에 대한 캠페인/ 사형제도-일존의 사형/ 난민-한국의 난민심사제도(19쪽)
- 박종철열사 추모 자료집-서울대학생연대
· 주요내용 : 박종철열사의 현재적 의미-박종철, 1995 그리고 대학 12/ 논점1-국가보안법의 성격과 분석/ 논점2-보장되어야 할 사상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39쪽)
- 외국인 취업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공대위
· 주요내용 : 취업연수생의 인권실태(김재오)/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의 개선방향(박석운)/ 농성당시 발표된 성명서 모음(41쪽)
- 정신대문제대책활동소식 6-정대협(☎365-4016)
· 주요내용 : 정대협 PCA 한일 변호인단 심포지움/ 무라야마총리담화/ 유엔인권소위, 일본군 위안부문제 공식조사결정/ 북경여성대회 준비/ ICJ보고서/미주정대협 소식/ 정신대할머니 근황등(19쪽)

아우슈비츠를 아십니까?
오늘은 아우슈비츠가 해방된지 50년이 되는 날. '아우슈비츠의 비극'은 오늘을 사는 인류에게 인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준엄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인권 실현'을 위해 우리는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대한변협, 김남매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안기부의 공작수사와 사전조작에 대한 문제제기가 백홍용씨의 양심선언과 김삼석남매사건 제조사요구와 함께 나가고 있다. 또한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기부의 수사권 존폐문제와 남용으로 인권침해를 낳아온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이세중, 대한변협)는 26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변호사회서초법관에서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대책을 발표했다. 이세중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요청을 받고 몇 달동안 사실조사를 통해 간첩조사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자리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자리이다"고 말했다.

사건진상 발표와 함께 대한변협은 안기부의 간첩공작수사와 관련된 안기부 직원 김성훈, 윤동한씨 등을 '직권을 남용해 국가보

안법 위반죄의 증거를 날조한' 점을 들어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제2항과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하고 폭행·가혹행위를 한 점' 등을 들어 형사법 제124조, 125조로 형사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김삼석남매사건에 대한 제심청구의 법률구조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법률구조를 마련할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또한 정부에 대해 ▲백홍용(가명 배인오)씨의 안전귀국과 신분보장에 대한 조치 촉구 ▲안기부장에게 사건진상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게 하고, 관계자들을 문책할 것 ▲검찰총장에게 간첩공작수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개시를 촉구할 것등을 요구했다. 국회에 대해 국정조사조사권발동을 요구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기관에 대해선 지난 11월9일 민변과 KNCC가 공동으로 안기부 간첩공작수사 진상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이를 취재한 대부분의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보도와 여론환기 등 사회의 목탁으로서 사명을 충실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조치는 "간첩공작수사의 피해자들인 김삼석, 김은주 남매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이 사건으로 남매의 피해가 심각한 안기부의 수사권과 국보법 폐지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갖기까지 대한변협은 지난해 11월14일 민변으로부터 안기부 간첩 공작수사 양심선언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요청을 받아 그 동안 인

권위원회에서 조사를 벌여왔다고 전했다. 그 결과 김삼석 남매 간첩단 사건등에서 안기부의 프락치로 활동해온 백홍용씨의 양심선언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자의적 구금' 6명 양심수 석방 촉구 민가협, 71회 목요일집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공동의장 안옥희, 민가협) 회원 30여명은 26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71번째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일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92년의 홍근수 목사, 93년의 김성만, 황대권, 장의균씨등 3인, 94년 9월의 황석영, 최진섭, 이근희씨등에 대해 유엔의 '자의적 구금 실부분과'가 '자의적 구금'이라고 결정한 사실을 알리고, 이중 현재 수감중인 6인(김성만, 황대권, 장의균, 황석영, 최진섭, 이근희씨)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인권하루소식> 1월 6일(319호), 1월 7일(320호) 참조).

인권운동사랑방 제1기 공개강좌 특별강의 인권운동가를 위한 언론학 특강

- 강사-장호순(사회교육원, 언론학 박사)
- 강의내용-언론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로서의 언론/인권운동과 언론
- 1월 28일(토) 아침 11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고사 및
세모녀 폭행미군 소환 결의대회
오늘 오후2시/용산 미군사령부 1번문 앞-서울역 광장

<구독료 납부안내>

계좌번호	에 금 주 : 서준식
제일은행 128-10-131017	상업은행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은행 438-06-016840
외환은행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은행 112-182999-12-001	하나은행 105-106617-00107
신한은행 355-02-035530	국민은행 015-21-0723-021

미군의 비협조로 1년동안 답보 미군 아리랑 택시 정양환씨 폭행사건 1년

주한 미군에 의한 설은주씨 폭행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한국검찰의 소환요구에 미군이 계속 불응하고 있는 때 비슷한 사건이 1년동안 끌어오면서도 진척이 없어 진행되고 있다. 지난 94년 1월 28일 주한 미군 전용택시(일명 아리랑 택시) 운전기사 정양환(47)씨가 미군헌병 4명에게 몸수색을 당하고 수갑이 채워진 채 강제로 연행당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씨는 당일 오전 미군 해리슨 상병과 차선 양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었고 그 뒤 별다른 일없이 손님을 태우고 미 8군영내에 들어갔다 연행당했다. 해리슨 상병은 미군헌병에게 정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하였고, 미 헌병대는 정씨에게 수갑을 채운채 연행, 조사하다 3시간만에 풀어줬다.

이에 정씨는 감금, 폭행에 대해 대한변호사회 김기중 변호사의 조력으로 94년 5월초 국가와 가해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재판 을 열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소장을 미군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미군은 가해 미군을 미국으로 송환시켜 본인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서류 수령을 거부하였다. 법원은 재차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10월 가해미군에 대한 소환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아 기

초조사도 못하고 있다. 미군사령관을 상대로 '미군이 출국하였는지, 출국하였다면 그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류를 송달하였지만 되돌아왔다. 법원은 다시 11월말 집달관에게 특별송달을 촉탁하였으나 '민간인 출입금지'라면서 정문경비원들에게 저지당하였다. 집달관은 직접 통화하기 위해 미군사령부내 안내전화에 문의하였으나 계속 실패하였다.

한편, 서울지검 김영철 검사가 설은주씨 폭행사건 조사를 위하여 미군에 송환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아 기초조사도 못하고 있다.

대한변협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 요약

최영도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대한변협 진상조사위(위원 박재승·안영도·백승헌)는 10가지 증거 자료를 통해 김삼석남매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밝혔다. 그 자료는 다음과 같다.

(1)백홍용이 촬영한 김성훈, 윤동한씨의 모습과 대화내용이 담긴 비디오테이프 (2)이기욱, 이덕우변호사가 베를린에서 촬영한 백홍용씨와의 대담내용이 담긴 비디오테이프 (3)백홍용씨의 자필진술서 3통 (4)김은주씨의 진술 (5)박상희씨의 진술 (6)이기욱, 이덕우변호사의 진술 (7)안기부 간첩공작수사 진상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8)95년 1월 26일자 <시사저널> 중 안기부장의 국회보고관련 기사 (9)<시민과 변호사> 94년 12월호 중 안기부의 조작간첩사건 양심선언 조사보고서 (10)95년 1월 26일자 <한겨레21> 중 백홍용씨의 기자회견에서 '안기부장은 거짓말했다'등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상조사위는 주로 다음의 네가지 점에서 김삼석·김은주 남매간첩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지적했다.

첫째, 안기부 직원 김성훈씨가 93년 7월경 "우리가 곤란한 처지에 있다. 사건을 하나 해야 한다. 그 대상은 김삼석·김은주"라고 하면서 백홍용씨에게 지시했다. 백홍용씨는 안기부의 사건조작음모를 전혀 모르는 김은주씨에게 일본에서 오는 사람의 통역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은주씨가 93년 9월8일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일본에서 왔다

는 사람을 만나자, 그녀에게 백씨에게 갖다주라고 하며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전집』 등 북한책자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어 범죄의사가 없는 김은주씨에게 이적표현물을 소지케 했다. 그뒤 그녀는 1백미터쯤 걸어가다 안기부 수사관 7-8명이 체포되었다. 결국 김은주씨는 위행위로 인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됨은 물론 김삼석씨와 함께 안기부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을 토대로 국가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둘째, 백홍용씨가 93년 7월 김성훈씨의 지시로 일본에 가서 조총련계 사업가에게 북한에 관한 책들을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김은주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모르는 김은주씨에게 그 책이 전달되도록 한 점.

셋째, 백홍용씨가 93년 8월초순경 『김일성 10대 강령』 등 북한 책자를 김은주씨를 통하여 한총련 간부에게 전달하라는 김성훈씨의 지시를 받고 김은주씨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김은주씨가 여러번 이를 거절하자, 백홍용씨가 거듭 부탁해 범죄의사가 없는 김은주씨로 하여금 위 책자들을 한총련 간부에게 전달하도록 한 점.

넷째, 백홍용씨가 93년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 사이에 일본에 가서 북한영화 취급소인 씨네가동영화사로 부터 북한영화를 입수하여 국내에 보급하고, 영화를 전달받는 사람을 김은주씨로 하고 김삼석씨에게도 그 영화를 소지케 하라는 김성훈씨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했다. 그뒤 씨네가동영화사가 인편으로 국내에 보내온 북한영화 4편을 여의도 고수부지 '신주구 양산박' 공연장으로 일부러 김은주씨를 데리고 가서 전달받은 점.

위의 사실로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의 결론을 내렸다.

1. 김삼석 남매사건은 안기부가 93년 9월 정기국회에 안기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안기부의 권한과 위상이 크게 축소되는 시기에 맞추어 터뜨린 간첩사건이다. 이를 통해 안기부의 존재의의를 부각시키고 권한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백홍용씨를 프락치로 삼아 공작을 하고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2. 그동안 역대 군사정권하에서 솔하게 제기되었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직의혹도 이 사건 공작수법과 같이 공안기관들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

3.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조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기부의 공작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국가보안법 남용의 위험에 방비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4. 차체에 공작수사와 사전조작의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안기부의 수사권 존폐의 문제와 그 남용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의 시비가 그치지 않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는 심각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달의 주제-고문>

고문행위가 행하여졌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모든 경우에 관련 당사국의 소관기관은 공식적 고문 소가 없어도 즉각적이고 공평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고문방지선언 제9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특집기획 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1)

용모 때문에 차별받는 실업고생들

정규수업 시간에도 살빼는 법 가르쳐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고등학생들의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현장 취재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될 이 특집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선생님들은 정규수업시간에 가르쳐야 하는 교과내용을 학원에서 배우라고 하며 밥끓기등 살빼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또한 "편부모를 가진 학생들은 은행에 취직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차이"라며 "전체 고등학생의 41%에 해당하는 8십5만1천4백여명의 실업계 학생들은 고용상의 차별은 물론 교육받을 권리도 제한 당하고 있으며 건강도 치명적으로 위협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제29조는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하며 "당사국은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을 발전 장려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 아동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절절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해 여성계가 실업계 여학생들의 몸무게 50Kg 과 키 160m로 용모를 제한하여 채용한 44개 대기업을 고발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리된 이후 현장 실업고등학생들의 교육현실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교육법 제105조는 고등보통교육의 목표를 "중학교육의 성과를 계승시키고 품성과 기품을 기르며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케 하며 일반적 교양을 높이고 전문적 기술을 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0상고 교사 이아무개씨는 "명문화된 법과 학생들의 교육현실은 천지

<인권하루소식>이 새로와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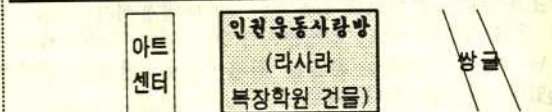
지금까지 <인권하루소식>을 애정으로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오는 2월부터는 <인권하루소식>이 전문 인권 신문을 태어나기 위해 새롭게 약속을 드립니다. '공판안내'는 종전대로, '국제인권소식'은 목요일로 자리를 옮기고, 매주 화요일 '주간인권일지'와 '인권주평'을, '인권자료소식'을 '단체간행물'과 '인권자료'로 나누어 격주 토요일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인권어록', '현장고발'등을 그때그때 실어 독자 여러분에게 보다 볼거리 많은 신문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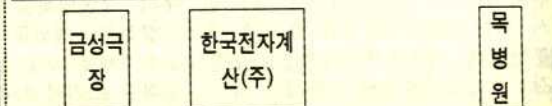
여기에서 현장고발관은 독자 여러분이 생활과 활동 과정에서 느끼시고 겪으신 일들에 대한 투고 형식의 글을 실음으로써 독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하루소식>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변모를 지금까지처럼 애정을 갖고 지켜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권하루소식 기자 일동>

인권운동사랑방 약도



<숙명여대 입구역 > <숙명여대 입구역 > <숙명여대 입구역 >



인권운동사랑방 제1기 공개강좌 특별강의 인권운동가를 위한 언론학 특강

- 강사-장호순(사회교육원, 언론학 박사)
- 강의내용-언론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로서의 언론/인권운동과 언론
- 1월 28일(토) 아침 11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 수강료는 4천원입니다.
- * 2월 4일 공개강좌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통일을 여는 큰 잔치

- 때: 2월 4일(토) 늦은 5시
- 장소: 협동교육 연구원(홍대입구역 하차 수월 근처)
- 회비: 1만원 · 문의: 719-2172, 719-2173
- 주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장기수가족후원회

<특별기고>

김영화상 수상과 안기부 프락치공작수사

이덕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외협력위원장)

1월26일 오전,삼청동 청와대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마틴 루터 킹목사 비폭력평화상을 받는 행사가 치뤄졌다. 미국은 암살당한 킹목사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추모할 할 정도로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대단하다. 그렇게 저명한 인권운동가를 기리고자 설립된 센터에서 제정한 비폭력평화상을 우리 나라 현직 대통령이 받는다!

과거 군사쿠데타로 집권하였던 군출신 대통령들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 보잘 것 없는 민초들도 덩실덩실 어깨춤추며 한바탕 잔치라도 벌여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왜 이 내 어깨는 이리도 무겁기 한량없고,오히려 가슴에선 천봉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동안 군사독재정권에서 길들여진 무조건적인 권력자에 대한 반감 탓인가. 아니면 사촌이 논사면 배아프다는 좁은 속 때문인가.

그런데 같은 날 축하연이 진행되는 시간.

강건너 서초동 대한변호사회관에서 이상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나이 지긋하신 변협회장과 인권위원장이 안기부프락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조금 전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신장에 대한 공로로 평화상을 수상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발표된 첫번째 간첩사건이 안기부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설마 군출신도 아닌 민주화투쟁에 혁혁한 전공을 올린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 발표된 사건이 조작되었을리야!

그러나 나는 독일 베를린에서 양심선언한 전 안기부 공작원(프락치) 백홍용씨를 만나 조사를 하고온 당사자로서 조작사실에 대하여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안기부장은 국회에서 백홍용을 안기부에서 채용하였던 것과 백홍용이 위협을 무릅쓰고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안기부 직원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그리고 이날 변협의 기자회견 2달전에도 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같은 내용의 발표를 하였던 일이 있다(물론 일부 언론기관들만 보도하였지만).

우연으로 보기에 너무 극적인 장면이라 어안이 병병할 따름이다. 강북에서는 혹은 민권운동가로 암살까지 당한 목사의 미망인이 현직 대통령에게 비폭력평화상을 시상하고 강남에서는 대한변협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안기부에서 무고한 국민 더구나 처녀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작하였다는 기자회견을 하다니. 이럴 수도 있는가?

서울 하늘 아래 동시에 일어난 어느 한 쪽의 일은 틀림없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머리나쁜 백성의 단순한 생각일까? 똑같이 관심을 갖고 취재한 언론기관들은 어떻게 보도하였을까?

각 방송사와 각 일간지들은 앞다투어 대통령의 수상소식과 킹목사의 생애를 보도하였다. 나아가 김대통령의 단식투쟁 당시 주치의와 YH사건 당시 여성노동조합장의 과거 그 시절 회고를 결집한 견해장면까지 보도하였다. 그리고 성악가와 대중가수가 무대에 나와 과거 민주화투쟁시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불렀던 선구자와 아침이슬을 열창하는 장면까지도. 그런데 대한변협의 안기부 공작수사에 대한 기자회견은 극히 일부 언론을 빼고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두달 전 민변 등이 가졌던 기자회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그후 취재하였던 기자들은 만나면 한결같이 꿀떡은 병어리다. 왜일까? 예전 군사독재시

절처럼 보도통제를 당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다.

과연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이후 비폭력평화상을 탈 수 있을 정도로 이 땅에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의 신장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단언컨대 "아니올씨다!" 법원조차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사실은 너무도 명백하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양심수가 무려 460명을 넘는다. 해! 해!하며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처럼 "안보불감증"이라는 해괴망측한 말까지 만들어 국민들을 협박하다가 압구정동등 강남에서 돈많은 국민들이 라면을 사재기하기 시작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전쟁은 안 일어난다고 안심시킨 당사자는 누구인가.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던 상대방이 사망하자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뚜렷한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고 엉거주춤 하던 사람은 누구인가. 70 회회를 넘긴 목사님이 적어도 정상회담을 하자던 상대방에게 조의를 표시하여야 한다며 택시타고 조문간다고(?)하자 덜컥 구속시킨 장본인은 누구인가. 제3차 개입금지등 노동악법을 개정하라는 유엔의 권고에는 귀머거리가 된 자는 누구인가. 10만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파렴치한 기업주들에게 팔아넘긴 신중 노예상인과 이를 눈감아 주는 자는 누구인가.

상반된 성격이 두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김영사에게 김영삼 대통령의 수상에 대한 항의편지를 전달하였다. 이 편지는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모여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 편지를 김영사와 그 아들, 그리고 킹센터의 관계자들이 읽고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그리고 지하의 킹목사님은 이번 시상에 대하여 어떤 심정이실까? 현직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아니 그보다 더욱 권위있는 인권상을 타는 날 두손바닥이 터지도록 박수치기를 바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가.

그동안 <인권하루소식>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은 독자 여러분의 어려운 중에도 지금까지 별 사고없이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설연휴 기간중 쉬었다가 오는 2월4일(제335호)부터 정상발행합니다. 독자 여러분 올해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권운동사랑방 집들이 안내
때: 2월 6일(월) 오후 6시 30분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1면 약도 참조)
참가대상: 인권, 사회단체 회원 관계자, <인권하루소식 독자>등 누구나
* 화환은 절대 사절합니다.